

서교연 2016 - 59

2016 위탁연구과제 보고서

학교와 교육불평등 관계: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적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서울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연구소

학교와 교육불평등 관계: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적 연구

연구책임자 : 장원호(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이명진(고려대학교 교수)

박병진(한양대학교 연구위원)

김희식(발산중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 박진수(사무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서울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연구소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연구지원비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팀의 견해를 밝힙니다.

요약

본 연구는 교육불평등의 현황에 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하여 불평등생성의 이중적 구조 가설에 의거하여 통합적 분석틀을 구성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였다. 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수행된 기존의 연구를 대상으로 교육불평등(혹은 교육격차)은 국가(공교육)와 시장(사교육)에 의하여 이중적으로 생성된다는 가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다층적-관계적 통합모형을 구성하였다. 다층적 구조는 문화-시장-국가정책-학교조직-학생의 일련의 위계를 가정하고 관계적 성격은 각 하위층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결합의 양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 따라 이 연구는 거시적 구조와 중범위적 학교정책 그리고 미시적인 학생의 학업과정과 결과를 연결시키면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특성에 대한 재분석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메타분석적 방식이라 칭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메타분석적 연구 결과, 학교유형의 분리정도가 클수록, 다시 말해서 학교가 다양화되어 표준화정책과 유리되면 될수록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일반계고등학교와 비교할 때 특목고와 자율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최초의 학업능력과 부모의 SES(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성취도의 분산을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으로 분할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때는 미미하던 학교 간 차이가 고등학교에서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학교유형에 따른 효과의 크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의 크기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계급에 따라서도 상층계급(자본가계급과 중간계급)에 속한 학생들의 학업성적 역시 노동계급출신에 비교해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 례

I. 연구목적과 이론적 논의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가. 문제의 제기	1
2. 교육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7
가. 교육불평등의 정의	8
나. 교육불평등의 문화적 재생산: 문화와 교육포부	11
다. 학교 간 교육불평등	17

II. 통합적 분석틀

1. 통합적 분석틀의 구성: 이론적 필요성	21
가. 교육불평등 생성의 이중적 기제: 국가와 시장	21
나. 희소지위획득을 향한 계급경쟁 결과로서의 교육불평등	22
2. 통합적 분석틀의 구성: 모형의 확인	26
가. 교육불평등생성의 다층성	26
나. 관계성	27
다. 분석 층위와 상호관계	28
라. 교육불평등의 생성 양식의 변화	31

III. 교육불평등의 메타분석적 접근

1. 분석방법으로서 메타분석적 연구	34
2. 분석의 대상으로서 제도의 변화: 표준화와 다양화	36

IV. 고등학교 정책과 교육불평등

1. 분석대상으로서 기존 연구: 분석 자료의 추출	44
2. 고등학교정책의 변화와 교육불평등	45
가. 국가, 시장 그리고 교육정책	46

나. 교육정책의 변화	55
다. 각 정권의 고등학교정책과 교육불평등	56
라. 학교유형에 따른 교육격차	68
마. 학교 내 불평등: 국제 비교연구를 통한 교육불평등의 상황	85
바. 입시전형과 불평등: 지역, 입학사정관제	85

V. 사교육 시장과 교육불평등

1. 사교육 시장의 팽창	88
2. 사교육과 부모의 계급 간의 관계: 불평등의 생성	94
가. 연구의 확인	95
나. 기존 연구의 분석	96

VI. 결론 및 교육정책적 함의

1. 결론	100
2. 교육정책적 함의	105

참고문헌	114
부록	124

표 목차

<표 1> 학교제도의 유형과 교육의 핵심적 과제 수행 간의 관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37
<표 2>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교육 불평등 간의 관계분석을 위한 모델 (표)	42
<표 3> 학교유형과 학력격차 간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적 연구를 위한 기준(학교 간)	42
<표 4> 학교유형과 학력격차 간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적 연구를 위한 기준(학교 내)	43
<표 5> 교육불평등 생성 양식의 변화와 각 시기적 불평등의 특징 ..	54
<표 6>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분포	64
<표 7> 역대 정부별 고등학교 체제의 변화(1948-1979)	65
<표 8> 역대 정부별 고등학교 체제의 변화(1980-2008)	66
<표 9> 역대 정부별 고등학교 체제의 변화(2008-2016)	67
<표 10> 학교유형과 학력격차(학업성취도) 간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적 연구(학교 유형별)	76
<표 11> 2011-2016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81
<표 12> 2011-2016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신입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비율	84
<표 13> 계층과 사교육 그리고 학력격차(학업성취도) 간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적 연구(학교 유형별)	95
<표 14> 교과별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결과	97
<표 15>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교육 불평등 간의 관계분석을 위한 모델 2(표)	113

그림 목차

[그림 1] 교육불평등 생성 메카니즘의 복합적 분석을 위한 통합적 모형 도식	28
[그림 2] 불평등 생성 층위	30
[그림 3] 불평등의 거시-중범위-미시간 관계 메카니즘	31
[그림 4] 교육불평등 연구를 위한 통합적 분석모형	35
[그림 5] ‘한국의 교육불평등’에 대한 연구자료수(1989-2016, DBPIA 기준)	45
[그림 6] 시기별 대학 진학률 추이(1990-2011)	51
[그림 7] 학업성취도(수학)의 변량의 요인별 분해	74
[그림 8]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전체 정원 외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입학자 수 추이(2011-2016)	83
[그림 9] 출신지역별 서울대학교 진학률의 차이(2013-2016)	85
[그림 10] 학생 사교육비 총액 규모 및 학생수	91
[그림 11] 가구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92
[그림 12] 가계소득별 교육비 지출 추이(1990-2014)	93

Ⅰ. 연구목적과 이론적 논의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문제의 제기

본 연구는 국가(공교육)와 시장(사교육)에 의한 교육불평등의 <이중적 생성>이라는 가설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확대되어가는 교육불평등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다층적 통합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학업성취도와 대학진학률과 같은 교육격차를 상징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의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검토하며 불평등의 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한 교육공급 기제인 국가(공교육)와 시장(사교육)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혹은 계급이나 계층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교육의 장은 제한된 사회적 지위의 획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계급(층) 간 경쟁의 장이다. 교육불평등은 국가와 시장에 의하여 제공되는 교육의 수단들에 대한 접근이 부모의 계급적 지위에 의하여 가속화될 때, 그리고 국가가 이를 방기하거나 중상계급에 차별적인 기회를 제공할 때 특히 심화된다. 본 연구는 부모의 다양한 자원에 의하여 시장에서 형성되는 불평등과 함께, 국가의 고등학교 정책의 변화와 성격을 분석하되 특히 학교의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격차와 대학진학 등에 어떻게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는가를 기존의 경험적 연구를 대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통합모형을 구성하여 기존연구에 대한 일종의 메타분석적 방법을 원용하는 분석을 하여 기존의 개별적 연구들의 실증적 검증과 한계를 넘어보고자 한다.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 진행 중인 최근,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이는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 의하면 최근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피게티, 2015; 장하성, 2014). ‘수저계급론’과 같은 자조적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불평등이 급속하게 심화되고 있으며 점차 양극화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비등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최근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4년 서울대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 가정 대비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대입학비율은 1985년 1.3배에서 2000년 16.8배로 급증하였으며, 졸업생 만 명 당 입학생 수에서도 전국 평균은 10명에 채 미치지 못하는데 비해 서울은 약 15명, 서울 강남지역은 25명에 육박하고 있다(김광익 외, 2004). 교육불평등은 취업과 소득불평등의 요인이며 사회이동(계층상승이나 하강, 개천에서 용났다)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혀주는 많은 경험적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계열화 현상을 고려하여 비일반계고교/일반계고교, 2년제 대학/4년제 대학의 진학은 부모의 계급·계층의 영향을 받으며 진학 경로를 둘러싼 불평등이 강화되었음을 보여 준다(방하남·김기현, 2002; 2003; 김경근·변수용, 2006; Shin & Lee, 2010; 박병영 외, 2011). 한편 진학 경로 및 교육 성취는 부모의 계급, 혹은 학력 및 소득과 같은 계층적 변수뿐만 아니라 부모가 가진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 및 자녀 본인의 교육 포부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은 과거 60-70년대와 다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경험연구들이 점증하고 있다(방하남 외, 2004).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사회적 계층(SES)에 따라 사교육비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상징하듯이 공교육이 사교육의 보조기구로 전락되어가고 사회적 평등기제(social equalizer)라는 학교의 전통적 역할이 무력화되어 가는듯하다.

신분사회가 종식되고 성취사회의 이데올로기가 경쟁의 주요 기준으로 채택된 민주주의사회에서 교육은 직업선택과 함께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사회이동의 정도는 한 사회의 계급적 이동의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회계급구조(social class structure)가 얼마나 개방적이냐에 따라 그 사회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사회이동이 부모의 지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면(sponsored mobility), 그 사회는 다시금 신분사회화해가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계급은 후속 세대의 사회적 지위나 계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와 반대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contested mobility) 교육과 직업의 선택이 가능해질 경우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능력주의사회(meritocracy)라고 한다.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그 사회는 일정한 정도의 불평등이 존재하나 여전히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공정성을 위한 기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회평등의 확실한 보장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기본적 정치체제로 선택한 사회에서 사회적 공정성 혹은 사회적 평등성의 담보는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회가 존속가능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공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공은 거의 불가능한 꿈이 되어가고 있다. 21세기 초 한국의 공교육은 더 이상 사회적 평등기제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지적은 교육불평등의 심각성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교육불평등은 한국사회체제의 형성과 변화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그리고 계급구조 및 교육에 대한 문화적 해석이라는 거시적 요인과 이 구조 속에서 열정적인 교육에의 참여(교육열, 고학력 현상)와 노동집중적 삶을 내면적으로 수용하여 살아온 현대적 한국인의 형성과정 속에서 총체적으로 분석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압축적 근대화화 및 민주화가 진행되는 구조적 조건에서 개인의 의식과 행위의 준거가 어떻게 내면화되어왔는지를 이해할 때, 교육불평등이 함축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의 중요성이 해석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교육불평등에 대한 개별화되고 미시적인 기존의 경험연구가 교육불평등의 문제를 개인적 자원과 학습태도로 환원하여 해석하는 경향을 탈피할 수 있다. 이 이슈에 대한 미시화된 연구경향은 거시적이며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해석해내지 못한다는 오래된 난독증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압축적 근대화(Chang, K. S., 1999)가 진행된 일정기간 동안 공교육은 나름대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이동을 가능케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믿어져 왔다.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은 사회평등의 기제의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일종의 사회적 신화가 형성되었다. 이 신화를 향하여 한국인은 교육을 통한 계급이동의 열망을 안고서 전 지구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온 결과,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조건의 향상과 집단적으로는 중진국에의 진입이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온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를 이룬 ‘민주화이후의 사회’ (최장집, 2010)에서 교육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복지사회로의 진입

을 예견해왔으나 교육불평등은 오히려 심화일로에 있다. 경쟁을 위하여 ‘교육빈자(edu poor)’가 되도록 투자를 하고 당연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red queen race)에도 불구하고 한번 경쟁에서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second chance)’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우리 모두는 분노하고 있고 있는 것이다 (장원호, 2016).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가는 한국사회의 생산체제(production regime)를 전제로 하여 교육불평등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겠다.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은 하나의 생산체제로서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y of capitalism)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자본주의 다양성은 의는 생산체제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로서 기업 간 관계, 기업지배권의 구조(governance structure),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그리고 직업훈련과 교육제도를 들고 있다(Hall & Soskice, 2001). 홀과 소스키스는 이 요소들의 결합양상에 따라 시장중심의 생산체제(미국과 영국)와 조정중심의 생산체제(독일)로 크게 구분하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생산체제는 이전의 발전주의적 국가모형과 다르게 시장중심의 생산체제로 급속하게 이행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교육불평등이라는 한 현상의 분석을 위하여 굳이 생산체제논의를 언급하는 이유는 기존의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개인주의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연구들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나 사회자본, 학교의 SES와 같은 개인외적 변수의 차이를 분석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개인 간의 경쟁의 결과로서 학업성취도의 격차로 교육불평등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김경근, 변수용, 2006).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단순한 개인 간의 경쟁의 에 결과가 아니라 생산체제의 구성양식의 변화 속에서 상이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계급(층) 간의 격렬한 경쟁의 결과이다. 따라서 경쟁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경쟁이 이루어지는 더 큰 구조적 장으로서 생산체제와 계급구조와의 연관성을 전제로 교육불평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은 이 구조의 어느 한 지점에 속해있는 행위주체자이고 이들의 행위결과로서 학업성취도와 같은 결과변수는 개인적이지 동시에 구조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생산체제에서 국가와 시장(기업 혹은 자본가)이라는 주요한 행위 주체

가 이 경쟁의 장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떤 계급의 이해관계와의 결합을 통하여 차별적인 속성을 가진 일련의 교육정책을 형성해 가는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교육불평등의 구조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개인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벗어나 구조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결합양상을 보이는 국가-시장-교육제도-학교와 교사-학부모-학생이라는 일련의 관계의 장 형성메카니즘(configuration mechanism of relational fields)의 변화를 동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불평등이나 교육격차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에 관한 통합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1970년대 박정희정권 하의 발전국가 체제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은 나름대로 가능하였다. 노동시장에서 능력을 독자적으로 평가할만한 기준이 미설정된 상황에서 오로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인 학력뿐이었다. 중등학교의 졸업증과 대학졸업증은 구직과 사회적 지위상승을 위한 유일무이한 객관적 기준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학부모와 자녀는 입시경쟁을 위한 총력전에 매진함으로써 근대화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것이 현존하는 학력주의의 근대적 연원이다. 발전국가론에 의하면, 자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내적으로 응집된 국가장치, 유능한 엘리트 관료들, 정책을 최종 조정/조율하는 선도기관(예: 일본의 통산성, Johnson, 1982; 1999)과 사적 부문과의 관계 속에서의 배태된 국가 자율성(embedded autonomy) 또는 통치된 상호의존관계(governed interdependence)를 기반으로 금융억압, 금융할당, 투자조정, 산업발전 계획, 유치산업 보호를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킨 것이다(Evans, 1995: 12-13; Weiss, 1998: 38; Weiss & Hobson, 1995: 244). 교육의 팽창과 통제 역시 전반적으로 발전국가의 자율성과 기획에 의거하여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의 주도하에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교육도 급속하게 팽창해갔으며 사회계급과 무관하게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학력획득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나름의 믿음은 1980년대 말까지는 나름대로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진전된 한국사회에서 이 믿음은 신화가 되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자유를 명분으로 사적 재산을 확장하고 금융에 대

한 고삐를 풀고, 투자, 생산, 배분뿐만 아니라 통치의 권한을 협치 라는 이름으로 민간/자본에게 이양한다(Harvey, 2005). 그러나 협치는 모든 계급을 참여자로 간주하기보다는 자본가계급이나 중간계급 중심의 협치 수준을 탈피하는 것이 어렵다. 축소된 국가의 자율권을 대치하는 것이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자본의 지배 혹은 조직과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배타적으로 장악한 계급에게로 이항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영역에 대하여 그 동안 국가가 유지해온 기존의 자율성의 성격이 변화된다. 여전히 기존의 권한은 관료제에 의지해 유지되나 정책의 성격이 달라진다. 교육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의 자율성신장을 통한 그간의 표준화정책을 다양화정책으로 성격전환을 하는 것이다. 발전국가에 의하여 주도된 순차적인 교육의 팽창은 하층계급 자녀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고학력학위 소지자간 경쟁이 격심해지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발생한다. 청년층의 실업이 장기화되어 고학력의 취득이 고소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상향적 사회이동이 기대한 것처럼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믿음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을 통한 신분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허망한 믿음이며, 학력은 이제 일종의 기회균등과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는 기능만하는 선별의 결과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중상계급은 기존의 배타적 고학력획득의 전략이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과 소득의 증가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상황에 새롭게 대처할 필요성을 감지하게 된다. 교육영역에서 이들이 채택한 전략은 국가에 대한 교육의 다양화를 향한 압박과 시장에서의 차별적 교육상품 공급시스템을 허용하게끔 규제 완화의 완화에 대한 요구이다. 중상계급의 변화된 전략의 결과가 공교육정책의 신자유화와 교육시장의 팽창이다. 고등학교교육과 대학입학전형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는 계급별로 상이한 적용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중상계급 출신의 학생은 부모의 관심과 사회경제적 자원동원능력에 근거하여 변화된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여 새롭게 채택된 평가와 선발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중상층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국가에의 압박을 강화한다. 또한 중상계급은 학생의 평가방식과 선발방식을 정책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변화된 조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교육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

용한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에의 참여정도와 질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 경험의 여부가 학교성적과 상급학교의 진학에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계급적 차이에 따른 사교육에의 참여수준의 차이와 이 차이에 의한 학교성적 및 상급학교에의 영향력을 검증해주는 수많은 연구들이 생산되고 있다(양정호, 김경근 2003; 이정연, 2011; 김성연 2013).

그간 교육불평등의 제 양상에 대한 연구가 점차 축적되어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패널조사가 축적되어 보다 엄밀한 연구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OECD 국가들 간에 교육성취도에 대한 비교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를 대상으로 교육불평등의 개별적 이슈에 대한 탐색보다는 보다 포괄적 접근을 통하여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육불평등이 형성되는 메카니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통합적 분석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교육불평등의 다층적 측면의 이해를 위해서는 개별적 이해보다는 포괄적 이해가 유용하다. 이 모형을 준거로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교육불평등의 문제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육불평등의 이슈 중, 공교육과 사교육 시장에서 형성되는 교육불평등에 집중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불평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적 매개고리로서 고등학교교육제도의 변화와 사교육 시장의 확대가 어떻게 부모의 계급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대학입학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주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교육불평등 생성의 여러 맥락 중 고등학교교육과정에 집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에서 많은 가족들이 그들이 가진 가족자본을 이 시기부터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계층이동을 향한 집단적 가족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다. 아울러 이 시기는 일원화된 평가시스템(수능점수와 학생부 수행점수) 상의 상위지위 점유를 위한 경쟁이 노골화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부모의 경제적 자원에 따라 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교육불평등이 점차 구조화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2. 교육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가. 교육불평등의 정의

교육평등과 불평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불평등이 해소된 상황이 교육평등을 의미하고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가 불평등한 상태이다. 교육평등이 무엇인가에 관한 입장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간략하게 핵심을 요약하자면, 교육평등이란 개인의 성, 인종, 계급, 종교 등의 사회적 기준에 따라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 있어서의 불편부당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의미한다. 교육평등을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입장에서는 기회의 평등에,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입장에서는 결과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김영화, 2002).

어느 정도의 교육불평등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진영에서의 논리는 성취사회(meritocracy)의 이념과 개인의 선택성의 강조 그리고 수월성(excellence)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주장하고 있는 노직(Nozick)의 논리를 이어받아 교육평등이란 출발선 상에서의 기회평등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의 성취결과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주로 기능론적 입장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불평등의 필연성에 대한 대표적인 기능주의적 논리는 일찍이 1945년 데이비스와 무어(Davis & Moore, 1945)에 의하여 정형화되었다. 그들이 제시한 차별적 보상의 원리에 관한 일련의 원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경쟁과 차별적 보상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성취사회의 이념을 정당화시켜준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1953년 튜민(Tumin, 1953)에 의해 바로 비판되었으나 여전히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성취사회이데올로기의 주요 원리로 원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불평등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입장은 주로 사회갈등론자들의 논의 속에서 그 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교육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둔 교육정책이나 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결과적으로 결코 성공적이지도 않으며,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까지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불평등을 사회나 국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할 대상으로 삼고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에 대한 논

의 속에서 ‘최대최소원리’를 강조하는 롤스(Laws)나 센(Sen) 그리고 분석담 시스트인 로머(Roemer)와 샌델(Sandel, 2010) 등이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보울즈와 진티스(Bowels & Gintis 1976)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란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학생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자유로운 사회이동을 통하여 평등을 실현시키는 기관이기보다는 현존하는 불평등 체제를 유지시키고 존속시키는 주요 장치이자 자본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순치된 노동력재생산의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리트(Litt, 1963), 스타인츠(Steinitz, 1973), 로드바트(Rothbart, 1970), 현(Hurn, 1978) 등도 일찍이 이와 유사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데 ‘정당하게’ 사용되는 유용한 기구이다(Rinne & Kivirauma, 2005: 67). 학교란 일련의 형식적 시험절차를 통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획득하게 되는 학업성취를 정당화시키며 이 학업성취에 기초하여 추후의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을 통하여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계급재생산의 수단이다¹⁾. 20세기를 거치며, 전 지구적으로 교육이 점차 팽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들어내고 있다. 써로우(Thurow, 1972)는 이 현상을 ‘방어적 투자’(defensive expenditure)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교육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일반적 교육수준이 향상되면 지배계층은 지위경쟁에 위협을 느끼고 그들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교육의 ‘차별화 전략’을 꾀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적 지위를 방어하는 시도를 한다.

학교는 계급경쟁의 장이다. 학교는 학생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지위상승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작동하는 경쟁적 사회이동(이른바 contest mobility)의 장이 아니다.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중상계급은 자녀의 학업성취도(각종 시험점수)와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의 다양한 자본(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을 총 동원하여 자녀를 지원한다. 우리는 이를 후견적 사회이동(sponsored mobility)이라 한다(Turner, 1960).

1) 사회계급(social class)과 계층(stratification)은 서로 상이한 이론적 가정과 논리에 의하여 고안된 개념이다. 양 개념 공히 사회구조와 불평등을 설명하려는 분석적 개념이지만 그 개념의 구성과 그에 의거해서 파악된 사회구조와 사회변동의 메카니즘과 함의는 매우 상이하다.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사회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개념들의 교차사용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가정하고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좀 더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신광영(2004)이나 Grusky(2011)를 참조할 것.

상류계층의 방어전략을 보다 최근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려고 한 연구들은 교육팽창과 계급적 지위유지 공고화의도를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 (Rafery & Hout, 1990; Lucas, 2001).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아일랜드의 교육팽창과 불평등을 분석하면서 하우트는 계급별 교육불평등은 가능한 한 최대로 유지되는데 그는 이를 ‘최대로 유지된 불평등’이라 개념화하였다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MMI). 이 상황에서는 상층계급과 하위계급 간의 교육격차는 상층계급이 포화상태일 때만 감소한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때, 높은 교육수준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수 있지만, 모든 계급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이 공급되는 것을 넘어 공급이 수요를 능가할 때에는 가족의 경제적 배경의 효과가 감소되게 이른다. 이 경우, 상층계급은 단순한 고학력 학위 취득을 넘어 질적으로 매우 다른 이질적 진로를 택함으로써 여전히 하층계급과 불평등을 지속시키고자하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자가 바로 상층계급에 의해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상태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MI)이다. 따라서 교육팽창과 무관하게 상층계급은 그들의 차별적 지위를 여전히 공고화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1990년대 95%를 넘어섰고 2000년 이후로는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강영혜, 2013) 교육기회가 극단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균적 교육팽창을 넘어서는 단계에서는 평등화정책의 변화나 폐기를 통하여 중상층계급이 그들의 경쟁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즉, 중상층은 고교 계열 및 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계층화를 더욱 요구한다(김경근·변수용, 2006).

바로 위에서 논의된 전략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팽창하는 한국사회의 고학력화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논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한 중등교육 후의 다양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급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평등화정책의 와해, 특목고의 등장, 자립형사립학교제도, 해외조기유학, 입학사정관제도 도입이 외형적으로는 교육의 다양화와 자립화, 선택의 자유제공 및 수월성의 추구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사회계급 간 교육불평등의 유지나 심화의 요인으로 작동했을 수 있음을 이 양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나. 교육불평등의 문화적 재생산: 문화와 교육포부

가장 먼저 이 주제와 관련한 최상위에 위치한 문화 혹은 이데올로기적 논의를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불평등의 문제는 이 문제의 필연성과 당위성 혹은 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회계급론, 다시 말해서 사회적 불평등의 정당성 여부를 논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주제 역시 개별 입장이 배타적으로 강조하고자하는 핵심적 주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정당화의 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교육 혹은 학력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이 해석은 교육자원의 획득을 위한 사회적 선택을 행하는 데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나 정책과 구분하여(물론 상호 연결된 것이나 분석상의 목적을 위하여 구분하여 이해하도록 하자) 문화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김태호(2012)는 한국사회에서 대졸 학력의 의미가 시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1950년대와 그 이후, 1970-80년대의 고도성장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의 현재까지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대졸 학력의 의미가 희소화, 대중화, 주류화라는 변화를 거쳐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대졸자의 비율의 변화가 이러한 구분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960년대 후반까지의 대졸자의 비율은 0.6%에 불과하였다(통계청, <http://www.kostat.go.kr>). 이 당시의 대학졸업증은 그야말로 계층상승이동의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1970-80년대의 고도성장기에는 고급인력의 수요는 급상승하여 1980년대 말에는 18-21세 대학취학인구의 비율이 1970년 5.3%, 1980년 11.1%, 1985년 22.4%로 급증추세를 보였다. 이 시기의 대졸 자격증은 상향이동의 주요한 수단이었다. 그 후에도 대학입학인구의 취학비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와 2009년에는 77.8%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에는 하향세를 보여 2016년에는 69.8%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 세 시기에 대학입학자나 대졸자의 비율 변화는 대졸 학력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의 변화를 겪어왔는가를 함축하고 있다. 희소기에 대졸학력은 신분상승의 핵심적이자 유용한 도구이다. 또한 경제성장기에도 여전히 대졸자격증이라는 것은 취업과 사회적 성공의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

러나 외환위기를 거쳐 가면서 단순한 대졸자격증의 의미는 변환과정을 거친다. 김태호(2012)는 이를 주류화로의 변화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기의 대학진학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해외유학이나 내부적으로 질적 차이(대입제도의 복잡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로로서 사설학원 시장 이용 등의 내부적 분화)를 거치면서 취업에 유리한 대학과 학과로의 차별적 진학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계층화와 세습화가 진행되는 시기이다. 다시 말해서 주류화란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화한 노동시장에서 구직에 유리한 교육통로가 모든 계층에 열려져 있는 개방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주류 계급과 계층에 집중되어 타 계급을 배제시키는 경향이 가속화되는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다(박형숙, 2003; 김문조, 2008).

한국사회에서 학력의 의미는 먼저 문화적으로는 문사적 지적전통, 사회적 경계 혹은 상징적 경계로서의 학벌이라는 측면을, 사회경제적으로는 사회적 상향이동의 기회수단, 학벌네트워크라는 공고한 사회자본의 영향력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불평등이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서로 다른 층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 양상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먼저 학생 자신 수준에서 학업에 대한 기대는 교육포부로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충족될 수 없는 학업기대의 포기라는 현상에서 상실된 재능(lost talent)의 형태로 나타난다(박병진, 2006). 개별 학생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학교나 사회에서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교육목표나 삶의 목표를 허구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간파(penetration)(Willis, 1981)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의 산업자본주의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의 학업과 노동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윌리스는 하층출신의 학생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식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의 기회는 중상층의 교육욕구와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지 하층계급의 지위상승의 통로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학교교육과 간접적인 사회생활을 통하여 채득하게 되는 과정을 간파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채득의 내면화 과정에서 학생 개인은 교육에 대한 의미를 선생님과 어른들의 형식적 정의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고 헛된 것으로 자각한다. 이 지점에서 공식교육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교육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거부할 것인지의 태도가 형성되기도 한다.

현실적 한계에 직면한 학생은 자신이 지닌 학업포부를 포기하고 자기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교육기회를 중심으로 제한된 조건 하에서 선택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은 충족되지 못한 더 높은 학업포부를 포기하는 과정이자 열정의 자발적 폐기의 분노를 스스로 냉각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을 시키는 자기냉각(self cooling-out) 과정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하층출신학생이 개인적 조건을 자각하여 서울에 소재한 주요 대학에 대한 진학을 포기하고 구직에 용이한 트랙으로 전환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관계는 기존의 관계양식을 깨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설정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에게 교사는 더 이상 이상적으로 학업의지를 고양시키는 자극을 주는 조력자가 아니다. 단지 학교의 직무를 담당하는 직업인이자 학교 내에서 차별의 집행자로도 파악되기도 한다. 동료 학생 간의 관계도 같은 세대로서 공유된 삶의 과정을 함께 나누는 동지가 아니라 상이한 환경 하에 놓인 타인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된다. 동료라기보다는 부러움의 대상이거나 무한 경쟁의 상대라는 새로운 정체적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한 각성이 학생을 지배할 때 학교와 학교조직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자기가 선택한 학교 및 계열뿐만 아니라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여 학교문화에 대한 전면적 거부자로서 저항문화의 이행자 역할을 기꺼이 담지하려는 인성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체화 과정에서 학습하는 존재로서 학생이라는 정체성은 변화되고 삶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욕구의 중심체로서의 학생을 가정할 경우, 학업포부나 진학계획, 공부에 임하는 자세의 수용과 포기라는 상이한 선택에 따라 학습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개인적 수준에서 공식교육에 대한 의미화는 내외부적으로 설정된 각 급 학교별 학습목표나 학업수준에 대한 자기목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전공의 선택이 학생 개인들만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때, 학생의 출신계급과 무관하게 학업포부는 의도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행위동기이다. 그러나 목표와 성과달성의 관계가 학생 개인적 수준의 요소가 아닌 가족적 요인, 학교제도적 요인, 시장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학생 개인은 이 지점에서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학업포부로 표현된 학생 개인의 학업을 통한 신분의 상승이동이나 삶의 성공을 향한 전진기지로서 상급학교에의 진학하고자 하는 욕망은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사회에서 부족한 그 무엇을 얻고자하는 인간의 기본 욕망의 발로이기도 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욕망은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하고자 탐함. 혹은 그런 마음’이다. 교육영역에서 학업포부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드러나는 일종의 욕망이다. 하나는 긍정적 의미로 인간의 권리로서 의도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포부이다. 이 포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과 능력의 수준은 일정하게 사회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적절한 능력과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존재한다면 이 교육욕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노력과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계급별로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크다고 파악되면 이 채워지지 않은 욕망은 좌절의 원천이거나 헛되게 설정된 ‘허위적’ 욕망이다. 현실적 장애가 높고 다양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욕망하는 목표에 대한 도달이 특정집단에 배타적으로 제공될 때, 일반 학생에게 이는 허구적인 목표이다. 그들은 달성될 수 없는 허황된 꿈을 곧 ‘죄’로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적 측면 혹은 마음의 상태에서 한국사회의 이례적인 대학진학률을 분석해보면, 고학력화현상은 자신의 욕구와는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평균적 욕망의 크기와 획일성의 폭력에 의하여 설정된 목표이다. 이 목표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소수를 제외하고 다수는 집단적 좌절이라는 허황한 욕망이후의 파탄의 상황을 맞기도 한다. 이 좌절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천적 가능성과 무관하게 과도하게, 때로는 허황되게 설정된 욕망관이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재생산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뒤늦게 각성하게 되는 집단적 비극의 지점이기도 하다. 이 허망한 욕구에 의해 현재 한국사회의 고학력지향의 열망이 만들어내는 파탄적 고학력증상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욕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존재이다. 교육의 포부와 열망이, 성공적인 학업성취의 목표가 늘 성공해온 계급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기에 하층계급출신의 학생에게는 허위적 학업목표임이 노출될 때, 그 사회는 이미 욕망을 계급적으로 통제하는 부정의한 사회임 또한 폭로된다. 윌리스(1981)는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역에서, 허위적인 상층계급적 학업목표를 가차 없이 폐기하고 자기계급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싸나이(lads)’ 적 반문화주의를 통한 노동계급의 재생산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상층문화와 병존하는 노동계급의 자기긍정의 욕구를 가능케 한 것은 그런대로 살만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육체노동의 광범위한 존재를 전제한다. 고도화된 자본주의 시대에도 이러한 노동계급의 저항문화적 삶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학생 개인의 학업포부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좌절되거나 포기될 때 이를 ‘상실된 재능(lost talent)’ 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하층출신의 학생이 설정한 학업포부를 수많은 경제적, 과정적 장애에 의하여 중도포기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교육불평등이다(박병진, 2006). 본인의 교육 포부는 미래 자기 경력에 대한 태도 및 판단과 관련된 비가시적이고 체화된 가치관으로 교육 성취에 주요한 자원이지만, 이를 개인적 특성 및 능력만으로 볼 수 없다. 기존 연구들은 교육 포부 역시 가족 배경 및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교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부모-자녀간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부모가 가진 교육에 대한 기대와 가치관 등은 자녀의 교육 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전하람·김경근, 2006; 장상수, 2007; 김두환, 2008). 계열선택 및 진학경로에 대한 분석은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하위교육단계에서의 가족배경은 선별에 영향을 미치나 상위교육단계에서는 가족배경의 효과가 줄어든다는 논의가 있는 반면, 상위단계로 가더라도 가족 배경의 효과가 유지되는 동시에 부모 학력보다 부모 직업 및 계급의 효과가 더 증가한다는 논의가 있다. (김위정·김양분, 2013). 이는 자녀의 교육 성취에 대한 부모 계급 및 가족 배경의 효과는 본인의 교육 포부와 같은 여타의 변수를 통해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연구들(김병성, 1984; 방하남·김기현, 2001; 류방란·김성식, 2006)에서도 확인되듯이 교육기회의 획득과 학업성취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 내 다양한 자원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1988년과 2007년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성기선, 2010)는 학업성취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20년 사이에 학업성취에 가정의 영

향이 2배로 증가하였고 반면에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이나 행동특성이 미치는 효과는 절반 정도로 줄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지난 20년 사이에 가족의 경제적 영향력이 다양한 메카니즘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는 1988년의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개인의 학업포부에 의한 영향이 상당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다시 생각해보면, 1988년 당시에는 부모의 경제력이 미약하더라도 학생 개인의 학업포부와 열망은 학업성적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지위상승의 가능성이 풍부할 당시의 개인의 노력은 학업성취의 보상으로 잘 나타날 수 있었다. 당시는 학업포부에 따라 이른바 ‘개천의 용’은 아니라도 ‘이무기’라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도에 이르면 이 영향의 강도가 반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학업성취에서 노력과 포부와 같은 개인적 요인의 영향력은 매우 약화되고 그 보다는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매개로한 사교육, 중상층 부모의 관여, 문화자본의 영향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도의 중학생은 자신의 포부나 노력이 학업성취에 특별히 신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즉, 개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도,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도 이러한 태도가 성적향상이라는 현실적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학교생활을 통해 거듭 확인하게 된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학교제도는 이미 하층계급의 학생들의 학업포부를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냉각(cooling-out)시키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2008년의 중학생들은 진즉 일류대학이 아닌 대학졸업장이 취업이나 신분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을까? 이미 학교는 죽었다고 치부되고 있는 시점에 이 가설은 타당성이 있다.

위의 논의는 표면적으로 발견된 자료분석을 한국적 맥락에서 보다 심도 있게 해석해볼 여지가 있음을 제시해보기 위한 하나의 예이다. 만약 통합적 분석틀을 만들 수 있다면 건조하게 제시된 수치들의 나열로 만들어진 통계표를 생생하게 사회 속에서 숨을 쉬는 학생의 불평등 경험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학교 간 교육불평등

교육불평등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교육제도 혹은 학교제도는 현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가 아니면 기존의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데 기능하는가? 학교가 사회적 평등기제인가 아니면 능력의 차별에 기초하여 학생을 평가하고 배치하는 선발기제(screening tool)로서 ‘성취사회’의 이념을 정당화하는 역할만을 할 뿐인가? 아니면 설상가상으로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제인가? 이러한 일련의 질문은 국가제도로써 교육제도 혹은 학교제도와 불평등관의 연관성에 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중 본 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학교제도와 교육불평등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출발점이다.

교육기회의 평등(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EEO)에 관한 쟁론은 50여 년 전에 미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사회에서 교육불평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논쟁은 당시 시카고 대학 사회학과에 재직 중인 James Coleman에 의한 일련의 연구보고서, Coleman Report(1966)로부터 촉발되었다. 미국의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대규모 조사를 통해 이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해소와 관련하여 학교는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학교 간 재원의 차이가 예견한 것보다 크지 않으며,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도 학생 부모의 경제적 지위(SES)에 비하여 학교의 영향이 더 약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학교에 대한 재정적 투자가 학생 부모의 경제적 차이에 의한 교육적 차이(성적 향상)의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즉 학교가 성취도에 영향을 결코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불평등의 해소에 기대한 만큼의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후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주로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학교에 의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 보고서의 결론은 학교를 통하여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해온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더 나아가,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국가 재정을 학교에 투입하는 정책이 불평등해소에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보고서의 문제점

을 다각도로 비판하며 일군의 학자들은 학교가 불평등해소에 기여하고 있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미국 내 특정한 고등학교, 예를 들어, 카톨릭학교(catholic schools)나 헌정학교(charter schools)는 최초 입학 시 부모의 열등한 경제적 지위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통하여 사회적 계층의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밝혀내게 되었다. 즉, 학교효과(school effect)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나중에는 콜만 그 자신도 이를 인정하게 되었고 학교효과를 내는 그 내외부의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Coleman & Hoffer, 1987).

이후 미국 내에서 교육불평등과 관련된 논의에서 학업성취에 미치는 학교의 영향력에 관한 관심은 교육기회평등(equal educational opportunity)과 교육의 수월성(educational excellence) 간의 논쟁으로 변화되었다. 예컨대, 흑인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백인학생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미국 사회에서 흑인의 낮은 SES와 인종차별이라는 이중의 불평등조건이 작용하는 집단이다. 그들의 낮은 성취도는 콜만 조사 당대의 인종 간 거주지역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에 따른 흑백학교의 분리와 계급효과가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미 대법원에 의하여 흑백인종에 따른 학교분리가 불평등하다고 선언한 이후 혼합학교를 향한 미국사회의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으나 그 명령이 교육불평등의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여전하다.

미국 내 고등학교제도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시스템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사립학교시스템은 보딩스쿨(boarding schools)이나 카톨릭학교 등과 같이 다양한 목적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학교이다. 높은 등록금을 개인이 지불하는 진학전문학교는 졸업생들로 하여금 손쉽게 대학의 높은 담장을 뛰어넘어 명문대학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하는 학교이다. 공립학교는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의 형태를 갖추고 그 내부에 직업학교과정(vocational track)과 진학과정(academic track)으로 구분된다. 대학진학의 차별성은 이미 사립학교를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의 교육체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교육불평등과 관련하여 남겨진 문제는 공립학교에서 불평등이 증가하는가 아니면 감소하는가에 관한 것

으로 제한되게 된다. 이러한 점을 전제하고서, 남겨진 이슈는 공립학교 내에서 학업성취도로 측정된 교육불평등이 어떻게 발생하는가하는 연구가 된다.

공립학교에 학교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교 내 계열화(tracking)의 효과와 능력반제도(ability grouping)의 효과로 집중되었다(Oakes, 2005; Gamoran & Mare, 1989). 이 양 제도는 학교 내 학습방법의 조직화에 따른 교육효과의 차별적 생성의 요인인 것이다. 한국이 오랜 동안 유지해온 것처럼, 일반계열과 실업계열의 학교 간 분화제도와는 다른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학교 내 학습조직화의 분화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그 연구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연구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불평등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세분화한 주제로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다. 먼저 교육불평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교육불평등을 아주 좁은 의미로 협의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보다 넓게 여타 다른 사회적 파급효과와 연관 지어 광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또한 교육불평등에 대한 입장을 교육불평등이란 항시적인 것으로 어떤 노력도 이의 완전한 해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불평등이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특정한 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입장 그리고 적극적 개입을 통한 최대 노력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입장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교육불평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경험가능한 척도로 구체화 혹은 조작화(operationalization)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통상 기존의 연구를 통해볼 때, 흔하게 사용된 경험변수들은 학업성취도, 대학진학률, 진학 학과와 전공, 교육투자 수익률(return to education), 교육과정에서 중도탈락률, 교육포부나 희망 학업수준, 학교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등이다.

또 다른 연구주제는 교육불평등을 생성해내는 구체적 요인들에 관한 것이다. 크게 제도적 요인(사회구조적 요인, 정책적 요인, 학교 간 요인 대 학교 내 요인)과 개인적 요인(개인적 자원, 개인의 태도 및 심리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교육자원을 경제적 자원(교육투자총액, 재정지출), 문화적 자원, 사회적 자원(social capital), 공동체자원 등이 교육불평등이나 교육의 성과(학업성취나 효율성, 수월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방

식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불평등의 외부적 효과에 관한 것으로, 흔히 연구된 주제는 교육불평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간의 관계, 대학교육의 계열별 투자수익률 분석, 교육투자 결과로서 학력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반상진·임효진·조영재·이진권, 2015) 등과 같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주로 학교제도와 교육불평등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현 시점에서 교육불평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양한 시점과 다양한 지점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진행된 교육불평등 관련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교육불평등이 생성되는 원인과 과정이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해낼 수 있는 분석모형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II. 통합적 분석틀

1. 통합적 분석틀의 구성: 이론적 필요성

가. 교육불평등 생성의 이중적 기제: 국가와 시장

본 연구의 통합적 분석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중적 교육불평등 메커니즘을 전제로 구성되어있다. 이중적 기제란 시장에서의 생성되는 불평등과 국가제도에의해서 생성되는 불평등을 말한다. 시장에서의 불평등은 사교육 시장(shadow education 혹은 private tutoring)이 자유화 담론에 의거하여 시작되어 공교육과 별개로 형성된 교육시장에 사회계층이 차별적 참여에 의하여 경쟁을 벌인 결과 증가된 교육불평등이다. 국가제도에 의한 불평등은 공교육제도의 내부적 변화를 통하여 형성된 불평등이다. 교육불평등의 해소라는 국가의 목표가 교육제도로 어떻게 투입되며 구체적 정책으로 전환되어 시행되는가에 따라 교육불평등의 정도와 범위는 다양해질 것이다. 우리 사회에 형성된 이 두 가지 이중적 불평등 기제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만 최근에 증폭되는 교육불평등을 이해할 수 있다.

한사회의 교육공급이 오직 공교육 내에서 제공된다면 교육불평등 생성기제는 공적 제도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이 사교육(시장)과 공교육(국가)에 의하여 이중적으로 공급될 경우, 불평등이 생성되는 기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시장의 자율성이 확장되어가는 사회에서 시장은 교육소비자의 요구에 반응적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경제적 자원은 한 학생의 교육수요의 양과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적인 예가 바로 부모의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지출의 추이이다. 다른 한편,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공교육비 대 사교육비의 상대적 비중이다.

국가와 시장에서 일어나는 교육제도와 교육상품의 분화에 대하여 사회계층은 차별적으로 대응한다. 한국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이미 최고의 수준에 달해있다. 이 상황에서 중상층계층의 교육전략은 시장과 국가에 공히 새로

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중상계급은 양적 포화상태에서 그들의 차별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질적 차별화를 통하여 그들의 교육적 지위(다시 말해서 하층계급에게는 입학기회의 차별화라는 교육불평등의 심화)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공교육의 영역에서는 다양화와 선택의 자유라는 교육권보장의 주장을 개발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길 요구하며 아울러, 시장에서는 다양화된 입학전형과 학교에서의 평가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사교육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사교육 시장을 새로운 교육상품을 개발하여 주로 중상계급에게 판매하게 되고 하층계급의 학생들은 또 다른 차별화의 한기에 노출되게 된다.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다르게 국가의 교육정책 그 자체가 교육불평등을 생성해내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육불평등의 해소가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한 책무이나 모든 행정부가 이 책무의 이행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때에 따라서 국가의 교육정책은 불평등을 양산해내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국가가 모든 계층의 교육요구에 동일하게 반응하거나 공정하게 반응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검증의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사회의 교육정책은 김영삼정부 이래 다양화를 향한 시장지향적인 많은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해왔다(강태중, 2015). 평준화라는 표준화된 고교정책을 와해시키고 차별적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중상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행해왔다. 평준화정책은 점차 새로운 교육정책을 통하여 해체되어갔고 고등학교에 관한 교육정책은 분화(differentiation)의 과정을 겪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국가의 교육정책이 교육불평등의 주요 통로가 되어온 것이다.

나. 희소지위획득을 향한 계급경쟁 결과로서의 교육불평등

교육불평등은 교육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 각 계층의 격렬한 경쟁의 결과이다. 교육의 장은 무수히 많은 세력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사회적 장이다. 따라서 각 시기별로, 특히 제도적 전환기에 형성되는 계급의 이해관계가 고등학교제도와 대학입시에 어떻게 담론화되고, 반영되고, 마침내 제도화되는 내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기존의 특권적 지위집단은 대부분 붕괴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4-50년간의 경제성장 기간은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들여다 볼 때는 새로운 계급구조의 형성시기이기도 하다. 사회계급구조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지배블럭(hegemonic bloc, Gramsci, 1992)인 상층계급,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문성과 충성에 기초하여 봉사하는 중간계급(service class)²⁾, 그리고 직업지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 노동계급 등이 주요 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정권을 위시한 권위적 발전국가의 주체는 계급형성의 관점에서 보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서 군부, 군부가 선택한 기업인 그리고 고위관료 및 정치집단을 핵심으로 한 지배블럭이다. 지배블럭은 생산체제의 전개과정을 거치며 그들과 연합하여 지배체제를 유지해가는 꼭 필요한 기능적 봉사계급을 포섭해간다. 생산영역에서의 경영관리집단, 국가영역에서의 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이다. 시장을 통하여 성장한 재벌이나 기업인들, 과대성장한 국가의 고위직 관료, 여야당의 정당정치인, 권력화한 언론계, 의사, 변호사, 교수 및 연구자들과 같은 소수 특권적 전문가집단들이 바로 우리사회의 지배블럭의 유지와 통제에 기여하는 중간계급으로 이 블록의 영역을 확장해간다. 국가주도의 생산체제에서 우선 특정한 지역에 기초한 재벌기업과 그 이후의 거대기업집단(재벌)경제체제의 확장과정에서 생산체제의 핵심적 지위를 담당하는 지배계급이 형성되어 왔다. 광범위한 대중들은 대체로 노동자의 신분으로 생산과정에 주로 참여하게 되고 개인적 능력(인적자본)에 따라 적절한 생산체제의 위치에 배치된다. 농어업종사자와 자영업자는 그 규모와 무관하게 주변적 계급지위에 속하게 된다.

유한한 삶이라는 인간의 필연적 한계는 1세대에 일어났던 계급경쟁을 대물림의 전쟁으로 그 성격을 변화하게 된다. 세대 간 지위 이동의 과정에서의 핵심적 쟁점은 지배집단의 관점에서는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대물림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공식적으로 재산의 상속은 법률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얼마나 합법적인 것인가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이 과정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음습한 과정이 숨어있음을 우리는 목하 진행되는 대통령탄핵과 구속이라는 미증유의 정치과정을 겪으며 인지할 수 있다. 또 다른

2) 서비스계급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Goldthorpe(1982)를 참조할 것.

지위세습의 통상적인 방법은 교육과 훈련을 통한 지위의 유지전략이다. 교육 과정과 절차를 활용하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안정적인데 그 이유는 교육제도는 통상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별적 성취를 정당화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신화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Meyer & Rowan, 1977). 이 사회에서 높은 교육자격증의 획득은 차별적 보상을 정당화시켜왔다.

그러나 고학력이 보편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대학졸업자격증은 차별적 보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한다. 학력획득이 보편화되어감에 따라 대학졸업증은 더 이상 계급간의 지위경쟁에서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자격증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결과 시장에서의 일반적 자격증의 가치는 급속하게 저평가(degradation)되기에 이르렀다(Braverman, 1974). 이제 상층계급과 이에 동조하는 중상계급은 그들이 경제성장과정에서 필사적으로 획득한 사회적 지위(권력과 자본 및 특권)를 후대에 안정적으로 물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중상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몸소 획득한 새로운 지위와 자본을 성공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제도는 불충분한 것이다. 학벌자원을 배타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최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시장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학벌자본인 최상위권 대학의 자격증의 획득을 배타적으로 보장해주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학교제도의 도입이 절실했던 것이다. 외국학교에의 조기입학이나 MBA자격증을 획득해오는 개별적 방법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높은 비용지출에 비하여 그 성과는 미흡하였다. 자녀교육을 위하여 이민행을 결정하거나 외국학교에 자녀를 조기교육시키는 개인적 선택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녀교육을 위하여 부부가 분리되는 수많은 기러기가족이 양산되었으며 성공의 확률도 낮은 기대를 위하여 이들의 삶은 철저히 폐쇄되어왔다(이두휴, 2008).

개인적 선택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다른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사교육 시장을 활용하여 반복학습을 시켜 높은 수능점수를 획득하여 최상위대학에 진학하는 전략이다. 어느 정도 효율적인 방법이나 이 방법 역시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고비용을 투자한 개인과의와 같은 극단적 처방의 효과가 비용을 고려할 때 성공률이 기대한 것처럼 높지

않다는 점이다. 사교육 시장을 이용한 모든 학생의 성적이 기대한 것만큼 올라갔다는 연구결과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검토에서도 이 점은 확인되었다. 사교육의 효과는 경향적으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나 사교육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 대하여, 투자에 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은 아니었다. 학생과 학부모 개인이 원하는 것은 투자에 따른 학업성취도 상승의 가능성이 아니라 자녀의 성적이 확실하게 상승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적 분석은 확률적 예측과 경향성에 관한 것일 뿐이다.

투자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자식을 사교육 시장에 들이밀고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면 그 자식의 성적이 기계적으로 향상될 것이라 확실하게 믿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것은 지극히 아둔한 기대에 불과하다. 더 나은 선택이 필요하다. 보다 나은 선택은 더 많은 교육투자의사가 있는 부모들에게 보다 확실하게 최상위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특별한 고등학교를 만들어 여기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것이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미국사회의 지배계급이 활용해온 사립학교(boarding school)를 한국에도 허용하여 이 학교출신들이 최상위대학에 다수가 진학하도록 제도적 신호(signal)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 학교출신들은 매우 우수하니 각 대학은 이 학생들을 가능한 한 입학시킬 수 있는 ‘자율적’인 입학제도를 만들어 이들을 선발하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나 복잡해진 대입입학전형은 이러한 신호에 대한 반응의 결과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의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학력의 차이는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차이보다는 미미한 것이다. 그 차이는 부모의 소득에 의하여 보전할 수 있는 정도이다. 최상위대학이나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전포석의 확정이 고학력이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그들이 택한 전략이다. 대학 진학에 유리한 사전포석이 바로 평준화제도 때리기와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에 편승하여 고교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평준화에 대해서는 ‘학력의 하향평준화’라는 논리를 개발하여 평준화정책의 기반을 해체시키는 것이며,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편승하여서는 시장에 대한 간섭의 배제와 소비자의 선택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담론을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김영삼정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특목고와 자율고의 설립과 변경 그리고 사교육 시장의 허용은 중단기적으로 이 계급블록이 지속적으로 전문가집단을 동원하는데 성공한 결과이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이들의 지위승계전략은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는 앞서 국가정책과 시장의 두 영역에서 벌어진 교육불평등의 심화였으며 그 혜택의 수혜자는 상층 및 중상층계급집단이었고 다수의 기층계급은 소리로 지르지 못한 채 교육불평등이라는 피해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들에게 국가는 무엇인가?

2. 통합적 분석틀의 구성: 모형의 확인

가. 교육불평등생성의 다층성

교육불평등은 다층성-다관계성을 지니고 있어 교육불평등의 양태는 다양하다. 기존의 연구와 조사들은 특정 학령집단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불평등이 발생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다. 개별 연구들 나름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었으나 불평등에 관한 총체적 그림을 그려 내는 데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먼저 통합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 틀에 기초하여 기존의 개별 연구의 위치를 배치하고 그 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연구가 미진한 부분과 부재하는 영역 그리고 과도하게 중복되어있는 분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불평등에 대한 총합적 연구틀의 모색이 결코 쉽지 않은 난제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육불평등 전체에 대한 오감도를 그려내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한듯하나 과감한 시도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교육제도는 일종의 위계적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위층은 순차적으로 상위층에 속하는 하위체계(nested system)이다. 교육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개인과 제도 사이의 다층적 구조를 전제로 하여 각 층위끼리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부모의 사회계급에 귀속되며, 계급적 관계에 의하여 학교의 선택이 결정되고 특정 학교에 속

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종사하는 교사와 학교장을 만나게 된다. 이 귀속적 층위 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독특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그 학교의 조직과 문화는 그 학교가 속해있는 지역적 특징(도시여부나 중상층 밀집거주 지역 여부나 학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다층적이며 때로는 위계적인 학생의 위치는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학업적 포부와 무관하게 학업성취도와 대학진학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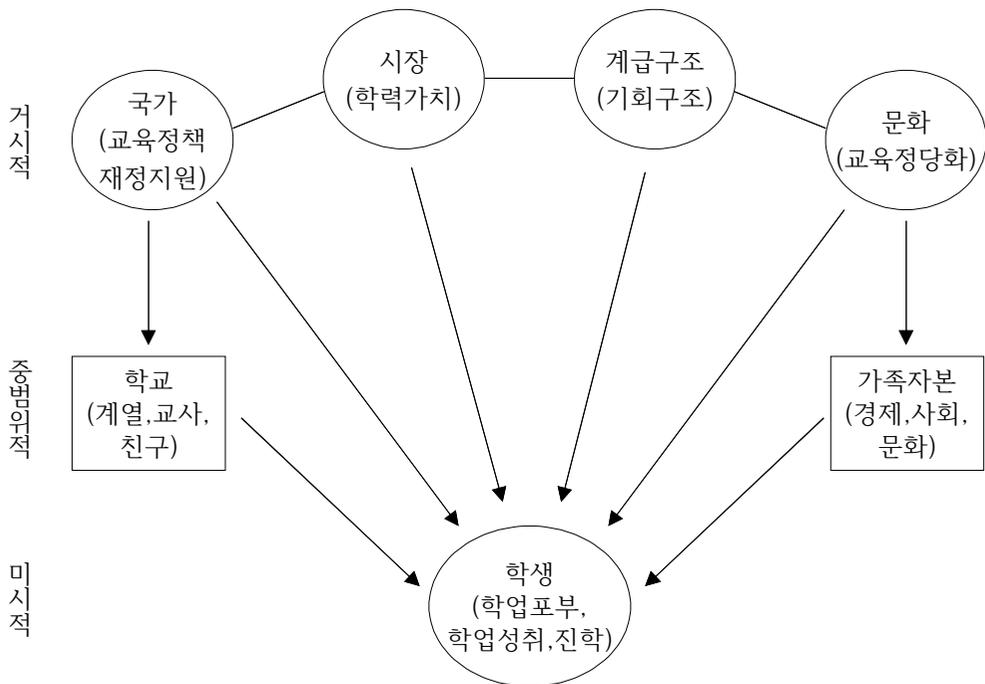
그간 학계에서는 불평등이 생성되고 확인되는 장으로서 학교교육 혹은 교육제도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해왔다. 많은 개별적 연구들은 이 불평등에 관한 단막극적 감동과 날카로운 이미지를 제공해왔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어 다수의 경험적 자료수집이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불평등을 이해하고자하는 여러 연구와 조사들은 각각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불평등의 다각적 측면의 어느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조사와 연구들은 교육불평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잘 드러내는 데는 성공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가 교육불평등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자하는 하는 점은 혹시 우리가 교육불평등에 관한 개별연구를 포괄적 시각에서 배치 혹은 재배치하여 연구의 상황을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결여하지 않았는가하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나. 관계성

교육의 제도화의 시기적 변화는 복합적 세력이 협력과 대립을 하는 장이다. 이러한 복잡한 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단일하게 연결해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설혹 미시적 현상에 대한 선형관계 혹은 곡선적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도 그것들이 전체적 조망 하에서 특수하게 작동하는 지점과 작용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교육불평등이 야기해내는 사회적 분열효과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전체적 조망 속에서 개별 논의와 연구의 의의를 재해석하고 개별 연구를 통합적 모델의 해당 부위에 적절히 배치하여 이해할 때,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는 깊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

력의 일환으로 교육불평등에 작용하는 거시-중범위-미시적 원인들과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해볼 수 있는 통합모델을 개발해보고자(혹은 개발의 필요성의 제시) 한다.

이 분석 틀에 포함될 주요 구성요소들은 문화-계급구조-시장-제도·정책-조직-개인이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관계구조이다. 거시와 미시 그리고 중범위적인 층위의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층간 결합의 종류를 열거하고 궁극적으로는 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들의 고안과 그에 기초하여 기존의 경험적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이 분석틀을 구성해내는 목적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불평등을 형성해내는 요소와 메카니즘에 관한 분석틀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1] 교육불평등 생성 메카니즘의 복합적 분석을 위한 통합적 모형 도식

다. 분석 층위와 상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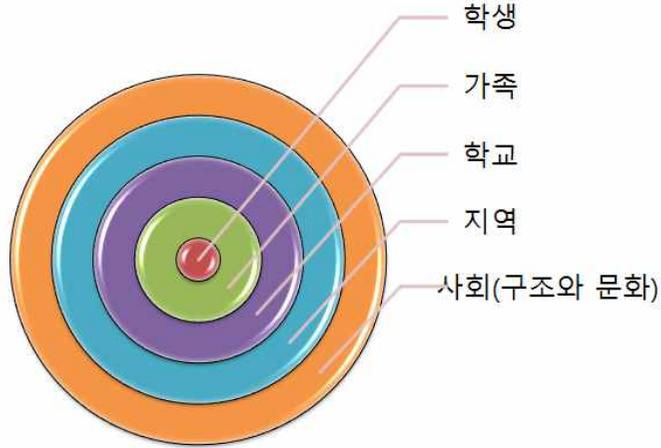
교육불평등과 관련하여 거시-미시의 연계 속에서 구조와 개인, 정책과

개인, 학교조직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강화 혹은 해소되는 불평등의 양상을 파악하도록 한다. 교육제도는 교육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법령과 조직 및 인적/물적 자원으로 구성된다. 이 제도는 시기에 따른 생산레짐 혹은 체제의 특성의 조건에서 사회적 수요와 다양한 계급이 교육에 부과하는 이해관계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입법과 정책의 형태로 변화된다.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의 양산, 국가형성에 따른 관료제의 확장과 이에 대한 인원의 충원, 평준화제도의 도입, 의무교육의 확대나 사교육의 허용, 고교유형의 다양화정책, 입학전형의 변화 등이 굵직한 제도변화의 사례들이다. 하나의 교육제도로서 학교제도는 교육의 목적과 학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terrain 혹은 field)이자 단계이다. 개별 학생들은 각 교육단계에서의 적응과 학습 평가를 통하여 다음 단계의 학교제도로 이행한다. 서로 연결된 일련의 각 급 학교의 묶음이 학교제도를 구성한다.

학생 개인의 사회적 위치는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결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특성 및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다. 교육불평등은 바로 구조와 변화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학생은 역으로 개인-가족-학교-지역-제도-문화라는 층위적이며 복잡한 층간 관계를 가진 구조 속에서 행위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의 구조적 구속성은 개인의 성향과 삶의 지향 그리고 교육정책과 사회변화라는 일련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의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구조로서 교육은 연관된 문화적 배경, 이데올로기 그리고 교육제도를 들 수 있다. 이 구조는 개별 학생에게 구조화된 과정에의 순응을 조장하며 이에 따라 학생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과정으로부터의 이탈과 대안의 모색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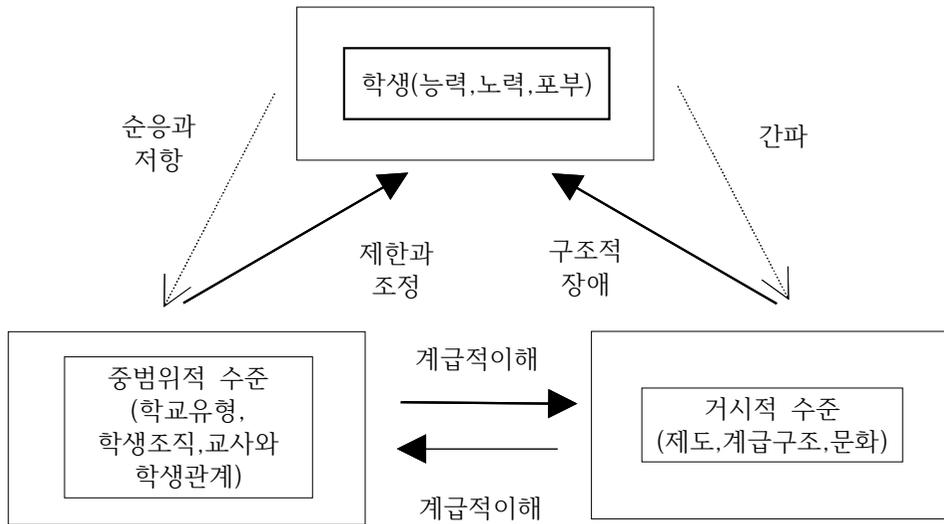
교육불평등과 학교교육의 성과와 직결된 연구주제는 여러 학업성취 변수의 변이 중 학교 간 변이와 학교 내 변이의 상대적 크기를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주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결과를 학교에 의해 형성되는 정도와 학교 이전 혹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형성되는 정도를 구분하여 교육불평등의 연구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부의 학습프로그램의 분화, 예를 들어, 능력반 학습제도, 우열반, 진학중심의 커리큘럼 vs 일반 커리큘럼의 유지와 같은 학교 내부의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대학 진학률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모형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 2] 불평등 생성 층위

이상에서 제기하였듯이 교육불평등은 각 층위별로 독특한 발생 양태가 확인된다. 각 층위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은 층위적 특징으로 인하여 그 내부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다 더 높은 층위의 제도나 구조와의 연관성 속에서 발생하고 변형되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조와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아래의 [그림 3]처럼 도식화하였다.



[그림 3] 불평등의 거시-중범위-미시간 관계메카니즘

라. 교육불평등의 생성 양식의 변화

교육불평등의 원인과 생성 메카니즘은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이다. 크게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 그리고 이 양자가 접하는 중범위적 차원들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로는 교육이론과 제도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문화적 요소들이다. 미시적 차원에는 교육 당사자들, 학생, 학부모, 교사와 교장 및 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사고와 태도 및 행동과 같은 요소가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리고 중범위적 차원은 구조와 개인의 직접적 접촉이 발생하는 지점으로서 특정한 시기에 변화되는 교육정책과 학교라는 사회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과정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습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배열과 배치, 커리큘럼의 구성, 개별학교의 자율성의 정도, 학교 내 학습관련 문화와 목표, 교장과 교직원 간의 조직문화와 같은 것이 개별 학생들의 태도와 활동에 영향을 주는 받는 과정이다.

연구목표와의 연관성 속에서 통합적 분석모형이 필요한 이유를 일련의 질문의 형태로 정리해볼 수 있다.

○ 시기적으로 교육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 이에 대한 경험연구들은? 이

를 통한 결론은?

- 심화되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나? 기존의 연구는 이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 공교육은 교육불평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제도의 변화는 이 불평등의 심화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하거나 어떤 촉발적 역할을 해왔는가?
- 공교육에 대한 중앙통제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시장화가 동시에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시장을 통한 교육공급의 한계는 어느 정도인가?
- 국가가 오히려 교육의 시장화와 반복지적 교육정책의 방향 기조를 유지해온 것이 아닌가?
-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민주화 이후 문민국가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교육정책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 결과적으로 중상계급의 수월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의 채택은 국가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성격보다는 자본가와 중간계급을 위한 친자본주의적 국가로서 국가는 결과적으로 이 계급의 계급지위의 유지 전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전략되지 않았는가?
- 하층계급출신의 학생들은 구조화된 불평등을 인지하고 교육포부와 삶의 꿈을 포기하거나 ‘현실화’ 하는 불평등의 내면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삶은 구조적 장애와 개인적 포기라는 불평등과정을 이중적으로 노정하고 있지 않은가?
- 최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정책 역시 신자유주의화의 경향성이 노골화되어가고 있는 이 지점에서 교육의 공공성(평등한 기회제공과 결과적 평등의 달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 장기적으로, 교육수요를 시장과 공공부문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상호 경쟁하는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교육을 공공재로 전환하여 입시경쟁에 매몰되어 교육불평등을 양산해내는 한국교육을 대수술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상의 일련의 질문들은 교육불평등의 생성과 유지의 중첩성과 심화 과정은 문화-국가-시장-계급-학교정책-교사-학생이라는 일련의 수준들 간의 위계적/관계적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세분화된 연구주제이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소 수준 간에는 위계적이며 순차적인 강제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수준 간 개별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다중적 관계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에 의한 통합모델의 개발을 통해서 그간 축적된 개별적 연구결과들을 위치시키고 재해석하는 것이 불평등문제를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포괄적 이해를 지향하되 시간적 제한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교육불평등을 시장을 통한 불평등과 국가제도의 변화를 통한 불평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겠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경험 연구를 대상으로 재검토를 하되 특히, 제도적 변화의 산물로서 도입된 특목고와 자율고와 교육불평등의 관계 및 교육시장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III. 교육불평등의 메타분석적 접근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방법은 근자에 비교적 연구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엄밀한 의미의 통계적 분석으로서 메타분석(Meta-Analysis)은 아니다. 최근의 메타분석의 동향은 기존의 양적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분석을 지향하고 있다.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행해진 경험연구들이 통계적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는 수가 확보될 경우, 이 연구들을 개별 사례로 택해서 동일한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발견된 효과의 차이가 메타-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메타분석이다.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 최초 진행하고자 했던 메타연구는 아직 충분한 경험연구의 수량적 확보가 여의치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 대안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들 및 연구에 대한 연구라는 메타분석적 기본 원리를 원용하여 기존의 경험적 연구를 정리해보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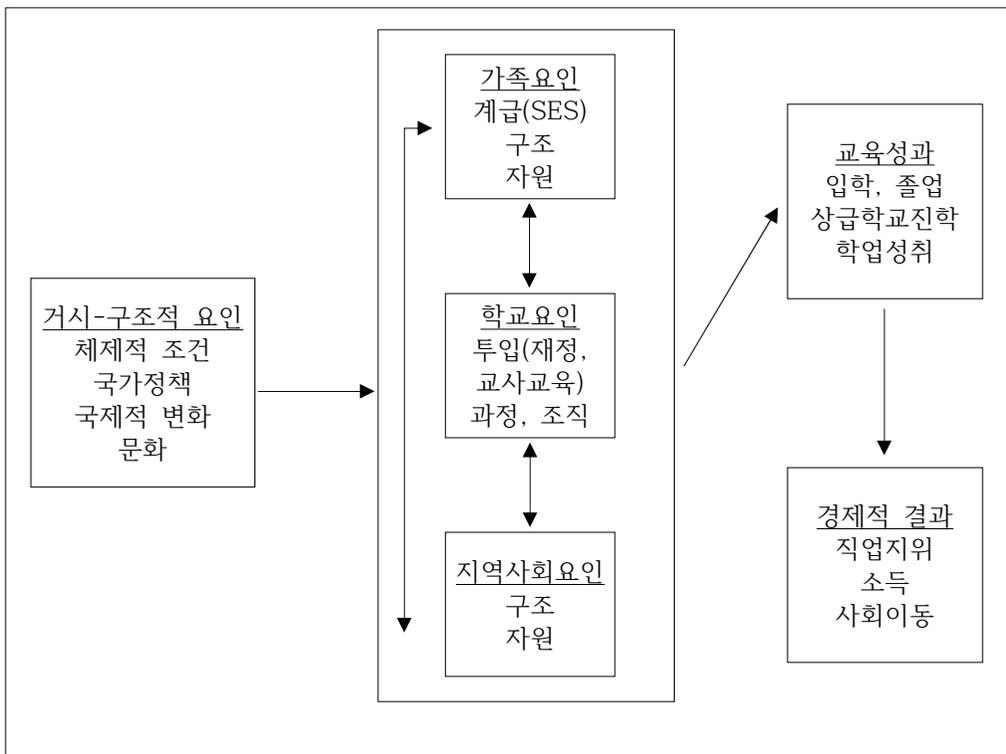
1. 분석방법으로서 메타분석적 연구

본 연구의 연구내용 중 하나는 1960년대 평준화정책 이후 현재까지 채택된 정책의 효과를 경험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중등교육과정에서 채택된 주요 교육정책들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불평등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다. 특히, 학업성취도의 차이로 정의한 교육불평등을 개인별, 학교 내, 그리고 학교 간 차이의 분석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아울러 그리고 이 차이 정도를 가용한 국제비교연구와의 연관성 속에서 비교평가해보도록 하겠다.

교육불평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관련 주요 학술지에 교육불평등, 교육과 직업, 계급(층)과 교육, 학업성취격차, 상급학교 진학(률), 교육과 사회이동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에 대하여 연구대상(population), 연구방법(통계방법), 주요 변수, 주요 가설, 발견결과, 신뢰도 및 분석틀과의 관계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해석해볼 것이다. 주요 패널자료에 대해서도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장단점을 검토해보

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통합적 분석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중적 교육불평등 메커니즘을 전제로 구성되어있다.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국가제도에서의 불평등이다. 시장에서의 불평등은 사교육 시장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교육과 별개로 팽창된 사교육 시장을 통하여 사회계층이 경쟁을 벌이는 결과 증가된 교육 불평등이다. 국가제도에 의한 불평등은 공교육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형성된 불평등이다. 이 두 가지 이중적 불평등 기제에 관한 면밀한 분석 분석을 통해서만 최근에 증폭되는 교육불평등을 이해할 수 있다. 한사회의 교육공급이 오직 공교육 내에서 제공된다면 교육불평등 생성기제는 이 제도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이 사교육(시장)과 공교육(국가)에 의하여 이중적으로 공급될 경우, 불평등이 생성되는 기제는 더 복잡해진다.



[그림 4] 교육불평등 연구를 위한 통합적 분석모형

위의 [그림 4]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성과는 다시 말해, 교육불평등을 지칭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변인으로 치환할 수 있다: 학력격차(achievement gap in test scores), 교육기회격차, 학력의 차이(educational attainment), 대학입학률의 차이(enrollment).

2. 분석의 대상으로서 제도의 변화: 표준화와 다양화

학교체제는 제도이다. 즉 학교체제는 “소속된 사회성원의 상호관계 속에서 오랜 기간 존재해오면서 영향을 미치는 법률, 비공식적 규범 및 관례”를 반영하는 제도이다(Bowles, 2004).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도변화와 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정책적 분화를 표준화((standardization, 평준화)에서 분화(differentiation, 다양화)로의 변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중상계급은 국가와 시장에 대하여 평균적인 교육상품이 아닌 분화된 상품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영삼정부 하에서 채택한 5.31정책은 교육의 표준화정책(평준화정책)을 포기하고 분화정책(다양화정책)으로 선회하는 시발점이다. 정책의 변화와 그 효과라는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표준화와 세분화정책 중 어느 정책이 교육평등에 더 기여하는가? 혹은 교육불평등 해소에 더 기여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무수히 다양한 고교정책을 양 정책으로 축소하여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표준화란 먼저 전국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커리큘럼),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달성해야하는지를 국가가 규정하는 것이다. 표준화의 정반대는 학교의 자율성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네덜란드, 영국과 한국처럼 중앙정부에 의한 표준화된 평가체제의 여부시험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학교예산이나 교사양성과 같은 재정 및 인적자원조달의 역할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화를 지향하는 세분화는 학교의 분화(학교의 다양화)와 학교 내 분화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학교 내 분화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트래킹(tracking) 이나 능력반제(ability group)가 이에 해당한다. 한 사회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교유형(school type 혹은 tracking) 및 능력반 수업

(ability grouping)으로의 분화정도와 표준화정도는 교육불평등, 특히 학업성취도의 분포와 교육기회의 차이,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학교유형별 차이는 학교 간 차이(학교 간 분화)를, 능력반 수업 등은 학교 내 차이(내부적 분화)를 생성해내는 기준으로 구분하여 사용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통상 트레이킹을 중심으로 불평등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 이유는 트레이킹은 전국적으로 대체로 유사한 방식으로 채택되어 적용되어온 반면, 학교별 능력반 수업은 광범위하게 채택되지도 않았으며 학교별로 그 내부적 다양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Gamoran & Berends, 1987; Gamoran & Mare, 1989; Lucas, 1999; 2001; Oakes, 2005).

반 더 베르포스트 등(Van de Werfhorst et al., 2010)은 현대 서구사회에서 학교제도가 담당해야 할 주요한 기능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능력과 관심에 따른 효율적인 학생선발, 노동시장에 적합한 기술제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시민의 자질함양이다. 그들은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한 후, 이 네 가지 과제 목표의 달성과 제도적 특성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래에 제시된 표로 요약하였다.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관련 자료로는 PISA(the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와 PIRLS(the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그리고 TIMSS(the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주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수집된 교육관련 자료는 학업성취도의 변이를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표 1> 학교제도의 유형과 교육의 핵심적 과제 수행 간의 관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교육제도/역할	교육평등신장	효율적 선별	취업준비	민주시민육성
분화형제도	-	-	±	?
표(평)준화형제도	+	+	+	?

- + 과제 달성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증거
- 과제 달성에 장애가 된다는 경험적 증거
- ± 과제달성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증거
- ? 제도와 과제에 관한 연관성 연구가 아직 미비

반 더 베르포스트 등(2010)이 내린 결론은 본 연구와 관련해서 매우 흥미롭다. 여타의 과제와의 관련성도 흥미로우나 불평등과 관련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고 추후에 위 표의 의미를 논의해보겠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표준화형 고교제도가 교육평등과제에 분명하게 기여하는 반면 분화형 고교제도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화형제도가 학생의 선별에도 적절치 않은 제도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얼마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들이 요약적으로 제시한 표는 한국의 고교제도의 변천과 이에 따른 교육불평등의 추이를 논함에 있어 중요한 준거점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라 판단된다. 그들의 결론과 궤를 같이 하는 연구도 발견된다. 유럽국가의 중등학교의 제도분화에 대한 검토에서 둔(Dunne, 2010)은 아일랜드의 학교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출신의 학생들이 고소득층학생보다 학교분화에 의해 악영향(더 낮은 학업성취도)을 더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른연령 때 분화된 수업 경험은(우열반, 능력반, 혹은 진학반과 취업반 등으로 구분), 분화되지 않은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 비하여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수업의 학교 간, 학교 내 분화가 상층출신학생들의 성적 상승에 가장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계층별 학업성취도의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불평등의 문제에 보다 집중해서 반 더 베르포스트 등(2010)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표적 표준화제도는 평준화정책이다. 1974학년도에 서울과 부산에 적용되기 시작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70년대를 관통하며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적용되어 갔다. 이 정책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겨간 취학을 증가로 빚어진 것이었으며, 그 연장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취학을 증가를 가져왔다. 이 정책의 과정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취학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1970년 28.1%였던 취학률이 1980년에 63.5%로 상승했다. 고등학교 교육이 대중화되었고, 고등학교 교육 문제는 국민 다수의 이해가 걸린 주요 정책 사안이 되어갔다. 1979년에는 대전, 전주, 마산, 수원, 청주, 춘천, 제주 등 주로 도청 소재지 중심의 7개 도시가 적용지역에 포함되고, 1980년에는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등 8개 도시가 포함되었으며, 1981년

에는 창원이 마산으로부터 독립됨에 따라 총 21개 도시까지 확대되었다. (서용회 · 주철안, 2009).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의 계층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취학률을 높임으로써 고등학교 취학 자체로 향유할 수 있었던 문화적 지위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교별 경쟁 전형 방식을 폐기하고 추첨 배정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학교 간 서열도 약화시켰다. 그리고 학교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무선 배정의 ‘평준화’ 방식은 학생이 고등학교에 거는 기대와 배정된 학교가 실지로 제공하는 기회 사이에 간극이 생겨날 가능성을 야기했고, 주어지는 고등학교 교육 기회에 대해 적지 않은 학생들이 불복할 여지를 낳았다. 이런 간극과 불복은 물론 사회 계층의 아래에서보다 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컸다.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기회를 ‘평준화’ 정책이 앗아갔다고 불평할 가능성은 상류계층의 경우에 더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1981년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역시 사학의 자율성과 육성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동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다. 결국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기회를 둘러싼 계층 간 이해 충돌의 상황을 일찍이 잉태하고 있었다(강태중, 2015).

평준화를 둘러싼 논쟁은 ‘공교육부실화 담론’으로 연결되어 고등학교의 선택권과 다양성의 주장으로 연결된다. 공교육 부실화 담론은 서울대 등 명문대 입학에 있어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학부모의 믿음을 근거로 하여 공교육체제를 바꾸려는 보수언론의 담론이기도하다. 이들은 일반 학교의 학력 제고 능력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국제중학교와 자립형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확대하고,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며, 입시와 관련된 학교의 조치를 자율화 하려는 일련의 개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공교육의 사회통합 기능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서열화하여 사교육을 부추기며 교육을 통한 계급불평등 재생산구조를 더욱 확고하게 고착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김천기, 2009). 그러나 공교육부실화담론은 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보인 적이 없으며, 계급 간 학력 격차를 없애기 보다는 이를 수월성 교육으로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다(박세일, 우천식, 2002; 윤정일 외, 2002). 이 담론에서는 계급 간 학력 격차 문제가 수월성교육과 평등교육의 대립구도로 환원되어버리면서 계급 간 불평등에 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평준화로 인한 공교육부실화담론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2001년 성기선 교수와 중앙대 강태중 교수는 고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종단적 연구(성기선·강태중, 2001) 평준화 제도가 학생의 성적을 하향 평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3점 가량 높이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1995년의 김영철(1995)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성기선(2002)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2002년 중소도시 중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을 구분하여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 당시의 학업성취도 수준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 결과, 최상위층인 상위 5%의 집단은 두 지역 간의 차이가 없으며, 상위 5-19% 집단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 지역보다 평균 2점 정도 높으나, 20% 이하의 집단에서는 대체로 평준화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성적 향상이 높은 것을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평준화 정책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주장은 경험적 결과와 다르다. 그는 학력저하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비판도식에 근거하여 또 다시 경쟁선발 방식을 채택한다면,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내팽개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교육 부실의 원인을 평준화에 찾는 논거의 부당성은 국제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를 보더라도 미국은 한국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2006년 PISA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읽기 1위, 수학 1-2위, 과학 5-9위라는 높은 성취수준을 보여준다. 여기에 대해 보수담론은 높은 학업성취의 원인을 사교육에서 찾고 있다. 사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학력수준이 높으면 그 공을 사교육으로 돌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공교육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특히 평준화제도의 탓으로 돌리면서 공교육부실 담론이 재생산 되고 있다. 또한 학교 수업능력이 학원에 비해 떨어진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2007년 국제교육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중학생들이 수학·과학과목 성적에서는 상위권이지만, 공부에 대한 관심, 즐거움, 자신감에서는 국제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성적공개를 하면 학교 간 경쟁이 될 것이고, 이는 곧 성적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시험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단위 학교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단위학교

의 대응을 통하여 교육력이 향상되면 학교 간 격차는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양정호, 2004). 이러한 담론의 이면에는 학교 간 격차를 구실삼아 평준화를 무력화하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학교 간 격차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학력격차가 표출되는 지점이 주로 계급과 지역이며 이것이 학교의 유형화의 결과라는 점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서울시의 학군 간 격차만 보더라도 그것은 단위학교의 효과라기보다는 학군의 복합적인 효과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부유층지역의 우수한 교육여건과 학생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등이 학군 격차를 만드는 주요요소이다(김천기, 2009).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수준별 교육과정이 학교 내 분화의 예이다. 이 정책은 한국사회의 맥락에서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수준별 교육과정이 모든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김천기, 2001). 수준별 교육과정은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개인차 개념은 시험 성적에 따른 우열을 전제로 한다. 즉 수준별 교육과정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며 개혁을 미화하는 용어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그 성격상 ‘능력별 집단편성’을 제도화한 차등적 교육과정(differentiated curriculum)이다.

앞서 평준화제도에 대한 비판과 그 한계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김영삼정부 이후 평준화를 와해시켜가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한국의 고등학교 제도의 변천이 교육불평등의 주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 팀은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만들어 표로 정리하였다. 아래의 표를 활용하여 각 칸에 그간의 연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채울 수 있을 때 비로소 고등학교 제도변화와 교육불평등의 관계를 경험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본 과제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선택의 다양성과 공급의 자율성의 논리에 의거하여 도입된 특목고제와 자율형고등학교(사립과 공립 공히)로의 학교유형의 분화와 능력반제도와 같은 학교 내부의 분화 과정이 교육 기회와 과정 및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집중하고자 한다. 나머지 빈칸을 채우는 문제는 이번 과제에서 다루지 못한 제한점이 되며 후속연구로 필요함을 제안한다.

<표 2>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교육 불평등 간의 관계분석을 위한 모델(표)

교육제도(정책)	학교성적	수능성적	대학입학	학교적응	졸업률	취업률
표준화(평준화)	√					
분화						
능력반제도						
계열화						
특목고제	√		√			
자율형고등학교	√		√			
수시제도의 확대						
입학사정관제	√(일부)					
내신성적(종평)						

예상되는 관계유형: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양방향적 영향, ? 불분명
 √ 현 연구과제에 포함

학교 간 그리고 학교 내 차이를 분석한 경험연구들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표를 작성해가면서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해석하도록 하겠다.

<표 3> 학교유형과 학력격차 간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적 연구를 위한 기준(학교 간)

연구	연도	이용자료	사례수	주요독립 변수	종속변수	관계결과	기타

<표 4> 학교유형과 학력격차 간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적 연구를 위한 기준(학교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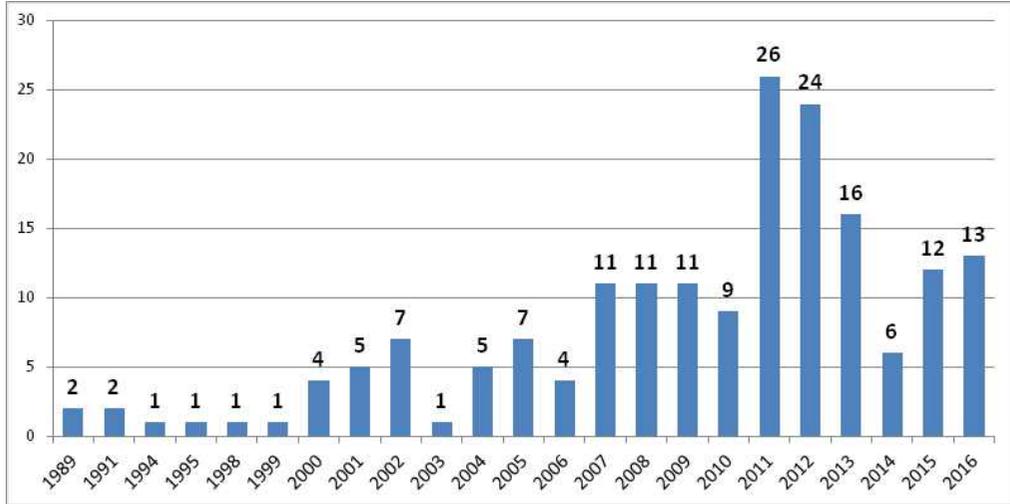
연구	연도	이용자료	사례수	주요독립 변수	종속변수	관계결과	기타

IV. 고등학교 정책과 교육불평등

1. 분석대상으로서 기존 연구: 분석 자료의 추출

교육불평등을 지표화할 수 있는 도구적 개념들로는 교육불평등, 교육격차, 계층별 학업성취도의 차이 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교육불평등’의 주제로 OO대학의 국내저널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검색되었다. 먼저 검색엔진별로는 DBPIA (180), eArticle (148), 한국학술정보(KISS) (302), 교보문고스콜라 (192), 기초학문자료센터(KRM) (8), 뉴논문 (6)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중 DBPIA검색엔진에서는 총 180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다. 다른 대학학술정보관에서 한국학술정보(KI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동일한 주제로 검색하였을 경우에도 180건이 확인되어 이를 중심으로 대상 자료를 검토하였다.

연도별로 볼 때, 논문명과 키워드를 대상으로 ‘한국의 교육불평등’에 대한 연구자료(논문, 보고서, 학술대회발표집 등)는 2007년 후 점차 증가하여 2011년부터 3년간 정점에 이른 후 점차 연구관심이 식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9년도부터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2016년 (13), 2015년 (12), 2014년 (6), 2013년 (16), 2012년 (24), 2011년 (26), 2010년 (9), 2009년 (11), 2008년 (11), 2007년 (11), 2006년 (4), 2005년 (7), 2004년 (5), 2003년 (1), 2002년 (7), 2001년 (5), 2000년 (4), 1999년 (1), 1998년 (1), 1995년 (1), 1994년 (1), 1991년 (2), 1989년 (2)건으로 분포하고 있다. 학술지별로 구분하면 한국사회학 (18), 교육사회학(14), 경제와사회 (7), 보건사회연구 (7), 한국사회정책 (6), 한국인구학 (6),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 한국행정학보 (4), [KEDI] 한국교육 (3), 교육비평 (3)건 순으로 발표되었다.



[그림 5] '한국의 교육불평등'에 대한 연구자료수(1989-2016, DBPIA 기준)

추후분석은 아래의 각 주제별로 위의 자료를 개별적으로 구분한 후에 이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2. 고등학교정책의 변화와 교육불평등

위에서 정리한 자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먼저 1) 교육정책과 불평등, 2) 시장에서의 불평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본 장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와 불평등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사교육 시장과 교육불평등을 각각 검토할 것이다. 교육정책에 의한 불평등과 연관된 주제로서 ① 개인과 가족의 환경과 불평등, ② 학교 간 불평등, ③ 학교 내 불평등 순으로 살펴보겠다.

학업성취도의 차이로 측정되는 교육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학업성취도 분산의 분할을 통하여 시작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의 변량은 학교 간 차이와 학교 내 차이의 몫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콜만보고서에 의하면, 학업성취도 변량(variance)의 80%는 개인과 학교 내부에 있고, 단 20%만이 학교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된다고 보고하였다(Coleman, 1966). 학업성취도 변량의

대부분이 개인이나 학교 내부의 학습과정에 의하여 생성되고 있다. 이 결과를 다르게 해석해보면 이 연구가 진행될 당시 미국의 중등학교에 대한 물질적 지원은 학교별로 크게 차이가 없고 대체로 학습과정이 일정한 정도의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의 주요 학교조직 방식이 종합형 공립학교(comprehensive public school)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과가 수용될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가. 국가, 시장 그리고 교육정책

앞서 우리는 교육불평등은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서 생성되는 이중적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는 한 사회의 발전과정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된다. 이 상이한 구성관계 속에서 교육불평등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교육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국가-시장-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구조적-개인적 결합양식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시기별 중등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불평등의 양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거시적 수준에서 시기에 따른 생산체제의 변화와 이 변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변화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시기별 생산체제를 산업화단계로 파악하고 각 체제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를 검토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팽창과정, 국가의 시장과 계급에 대한 자율성의 정도, 국가와 계급연합의 양상, 내부교육시장과 외부교육시장의 개방성의 문제, 시장에서의 학력가치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계급별 경쟁전략의 변화와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사회적 지위의 유지는 자본, 학력자본, 사회자본의 결합을 통해 가능해진 복잡화와 정교화 된 지배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기적 변화 속에서 교육불평등은 다중적으로 구조화되어왔다. 교육불평등은 신자유주의적 시장화, 국가의 시장지향적 교육정책기조의 유지, 계급구조의 공고화(사회이동의 급격한 감소와 지배계급 내부의 응결과 하층계급의 광범위화), 학교 간 분화의 심화와 이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의 증가, 학교 내부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형성의 계급라인과의 일치화, 하층출신 학생의 학업포부의 위축 등과 같은 일련의 복합과정 속에서 중첩적으로 구조

화되어왔다. 요약하자면 과거 60여 년 간 교육은 급속하게 팽창해왔고, 일시적인 계급이동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시점도 있었으나 근자에 이르러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은 심각하게 폐색되어 현재는 계급에 따른 교육불평등이 매우 심화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한 사회의 교육제도는 그 사회의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사회구조 및 문화체제의 결과물이다. 교육제도는 항시적으로 단일한 양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름의 자율성을 가졌다하더라도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내적 구조와 원칙 및 관행을 수정하도록 강요된다. 일정한 교육제도의 자체적 유제와 함께 교육제도 외부로부터의 많은 변화의 압력에 노출된다. 이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들은 교육체계 내부 담론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양 요인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서 경제체제(국내외적), 민주주의체제와 담론, 그리고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계급집단에 의한 교육에의 요구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불평등의 주제를 다룸에 있어 경제의 단계-국가의 성격(권위적/민주적, 자율성/의존성)-시장의 확대와 개방-교육에 대한 계급별 상이한 요구-시장에서의 교육자격증 가치의 변화-유동화하는 계급구조와 이에 대한 계급별 적응방식(주로 중상층 계급의 지위유지전략화)의 변화와 요구 자본에 의해 요구되는 노동력의 조건 등이 바로 그 요인들이다. 본 연구에서 이 요인들에 의한 정교한 모델의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불평등의 변화양상을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묘사로 대신하고자 한다.

생산체제의 다양성은 자유 시장경제-조정된 시장경제(Hall & Soskice, 2001), 발전국가-규제국가(Johnson, 1982), 시장주도의 경제-국가주도의 경제-조합주의 경제(Wilson, 2003) 등으로 범주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를 산업화초기의 발전국가, 산업화심화기의 규제국가 그리고 산업화후기를 신자유주의적 국가라는 결합적 관계로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사회를 다음과 같은 시기로 구분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많은 논의 가능성과 비판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본고에서는 과감하게 간략화 하도록 하겠다. 장황한 논의보다는 교육불평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관계를 위주로 묘사하도록 한다. 이 논의는 일반이론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경험에 기초한 구분이다.

1) 산업화초기

박정희정부 하, 특히 1970년대 한국의 발전국가는 경제적 발전주의와 정치적 권위주의가 결합된 ‘권위주의적 발전국가(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이다. 한상진(1988)은 이 시기의 결합양식을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라고도 칭하고 있다. 정치적 권위주의는 정책형성체제와 정책형성과정에서 폐쇄적이고 배제적 성격을 보인다. 노동과 자본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국가는 경제성장의 목적 하에 사회와 교육제도를 배열한다. 이 시기 교육의 목표는 형식적 목적과 별개로 권위주의적 개발 국가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정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초중등학교는 단기간에 급속하게 팽창하였으며 학교는 도시와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건설된 수많은 공장과 일터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중앙정부에 의해 계획된 교과 내용과 학제를 중심으로 대량의 단순노동력 필요로 하였고 평준화정책을 중심으로 더 높은 학력을 통하여 사회이동이 가능하다는 신화가 확산되었다. 학력자본은 세대 간 상향이동의 수단이 되어갔으며 고학력자는 엄혹한 저임금노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학력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국가주도적 경제발전기의 교육의 목표는 형식적 목표와 다르게 대량 생산체제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표준화된 노동력의 생산에 있다. 경제발전과 ‘잘살아보세’의 모토를 생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하고 근면하며 지시를 잘 이행하는 표준화된 노동력의 대량생산을 학교가 담당한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의 주요 주체는 국가이다. 국가는 자본가와 노동자 혹은 중간계급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Deyo, 1987; Haggard, 1990).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에 기반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산업전략에 조응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시행하였다(Evans, 1995). 교육은 국가의 이러한 요구, 즉 경제개발계획에 의거 대량생산체제라는 구조 속에서 정교하게 설정된 산업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고 손쉽게 통제 가능한 순응적 노동력을 광범위하게 생산해내는 것이 공교육의 주요 기능이다.

이 시기의 중등교육의 핵심은 광범위한 표준화된 소양을 갖춘 노동력의 공급이고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교육팽창이 시작된다. 국가주도적인 교육정책은 본질적으로 표준화, 규율화, 관료제적인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 의존하

였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교육정책은 숙련된 인적자원의 공급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발전 및 민주국가 형성에 기여해왔다(주철안, 2016). 이 시기 점진적인 교육팽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등학교로의 취학률은 낮았다. 또한 대학교육은 소수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의 선발과정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의 엘리트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상태이다. 국가에 의해 주도된 표준화된 교육정책(standardization)과 일정한 정도의 교육평등화가 유지되었다. 비록 학자들의 논의에서는 미국식의 ‘종합학교체제(comprehensive school system)을 모델을 지향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1970년대 들어 직업학교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로 분화되었다(당시의 다양화된 고등학교와 실업학교의 종류에 관한 간략한 논의는 강태중, 2015 참조).

먼저 교육 보편화와 고등교육 확대의 과정의 변화이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규교육은 일반국민에게 급속히 확대되어 초등학교 취학률은 1945년 48.0%에서 1950년 81.8%로 상승하였고, 중학교 진학률은 1950년 26.1%에서 1955년 47.1%로 상승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우선 1968년 7월 15일 중학교 평준화 정책이, 그리고 1973년 6월 28일 고등학교평준화 정책을 발표되었다.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상층을 중심으로 불만족한 공교육으로 인해 과외수업이 증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도 또한 대두되었다.

2) 산업화심화기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경제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한국의 생산체제는 국가와 시장 간의 새로운 결합양식의 필요성이 내외부적으로 요구되게 되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 발전국가의 성격은 변화한다. 이시기에는 권위주의적 관료국가의 자율성이 상당히 약화되어 규제국가로 성격이 변화해갔다(윤홍근, 2013). 발전국가의 규제국가로의 변화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

라는 차원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하느냐 아니면 앞선 시기의 국가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추격모형적 경제발전’ 모델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전략은 이 시기에 이르면 더 이상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 정당성도 급속하게 약화된다. 중화학공업에 기초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결과 우리의 생산체제는 내외부적 조정의 압력에 봉착한다. 외부적으로는 중진국으로 성장한 국가의 위상에 상당하는 상호주의의 교역원리에 상응하는 경제행위자로서의 책무가 더 강하게 주어졌다. 각 종 국제기구에의 가입을 통하여 국제시장질서에 더 깊숙이 진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조정의 압력이다. 내부적으로는 경제성장의 과실의 분배욕구가 팽창되었고, 1987년의 민주화는 다양한 사회세력의 이해관계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과거의 국가적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시장의 주도자로서 성장한 대기업의 자율화를 위한 압력과 민주화에 의한 시민사회의 압력은 국가의 역할 변화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강력한 국가(과도성장국가)가 시장과 사회에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감독관보다는 규제메카니즘을 활용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의 변화가 발생한다. 윤홍근(2013)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 의해 추진된 ‘안정화 시책’이 한국 발전국가 모델의 중대 전환점이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관료 조직 내부로부터 비롯된 ‘내생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1981년에는 졸업정원제의 실시와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한 대학 설립자율화와 정원자율화의 결과로 고등교육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산업에서의 다양한 인력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중상층의 고학력전략에 대한 중하층의 모방적 선택에 의한 고학력을 향한 돌진의 결과이기도 하다. 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1980년 27.2%에서 1985년 36.4%, 2000년 68.0%, 2006년 82.1%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단기간 내에 고등교육자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성취자 비율은 1979-79년과 1995-1999년 사이에 32.8%p 증가로, 2위(아일랜드)와의 차이가 13.7%p나 난다. 우리나라와 1인당 GDP가 비슷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물론이고, 두 배 이상 높은 미국,

독일, 스위스, 덴마크보다도 청년층 고학력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6] 시기별 대학 진학률 추이(1990-2011)

직업의 확대와 양질의 노동력의 필요성과 대중교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교육자격증의 가치는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 중화학공업중심의 개발국가전략에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자본과 노동계급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유지되었던 국가의 자율성이 점차 약화되어갔다. 산업의 성격이 변화해감에 따라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양질의 고학력자의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학교육이 점차 팽창해간다. 대졸자들의 일정한 학력프리미엄이 존재하며 이들은 학력을 통한 가까운 계급으로의 사회이동이 점차 어려워져 갔다. 대졸자와 비대졸자 간의 임금격차는 존재하며 비록 교육팽창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학력취득의 차이는 점차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이미 대학교 자격증의 지위상승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되어가고 있었다. 설동훈(1994)은 1989년 당시 교육이 개인의 지위획득에 미치는 효과는 1978년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교육이 지위획득에 미친 효과는 1978년 당시는 70%를 상회하였으나 1989년에는 50% 정도로 축소되었고, 여성의 경우는 28.5%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것은 80년대 후반 이

후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계급분화가 발생하고 단순한 고학력에 의한 상향적 사회이동에도 한계가 오고 있음을 이 연구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사회에서는 이제 단순히 대학학력이 더 이상 사회이동의 보증수표가 아니며 고학력의 취득도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질적 분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학력의 가치가 재편되는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학력보다는 재산의 소유가 사회적 지위의 획득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본주의적 계급사회로의 진입이 분명하게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3) 산업화 이후기

생산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많은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변화의 원인을 ‘발전국가의 성공의 위기’와 ‘글로벌 외압’으로 설명한다. ‘성공의 위기’론은 발전국가의 성공의 결과로 정부와 자본(기업)의 역학관계가 바뀌면서 자본의 힘에 밀려 -기업의 요구로- 시장자유화가 추진되고, 그 결과 시장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재계의 힘이 커지고, 민주화의 요구로 국가자율성이 침해되면서 발전국가의 위기가 시작되고, 발전국가 모델의 변화가 시작되었다(양재진, 2005: 4-5). 앞서 발전국가의 위기 속에서 안정화를 지향하는 규제국가의 대두를 살펴보았다. 또 다른 변화는 ‘글로벌 외압’론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시장규칙의 조화를 추구하는 초국가기구로부터의 외압에 의해 발전국가체제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이후 경제적 위기의 해법으로 선택된 IMF 구제금융의 ‘협상조건’ (conditionality)에 의해 불가피하게 신자유주의적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발전국가를 지탱해 주던 정책적, 제도적 장치들이 해체되면서 규제국가로의 이행이 시작되었다는 설명이다(Shin & Chang, 2003).

이러한 생산체제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의 교육자격증의 변화를 가져왔다. 고등교육 확대의 부수효과(side effect)가 나타나는데 대학교육의 임금프리미엄이 하락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노동가치의 하락과 쉼을 같이하는 현상이다. 대학 졸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상대적인 프리미엄이 저하하고, 고용 불일치 문제가 대두되었다. 학력별 임금격차는 40대>50대>30

대>20대 순으로 학력별 임금격차가 젊은 세대로 올수록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1980년대 고졸자 임금수준이 대졸자의 40% 정도였는데 비해, 1990년대 후반에는 50% 후반정도까지 높아졌다(남춘호, 2004: 83). 또한, 청년 일자리 총수는 1996년 542만개에서 2003년 461만개로 7년 사이 81만여 개가 감소하였으며, 소위 ‘괜찮은 일자리’는 1996년 154만개에서 2004년 131만개로 23만여 개가 감소하였다(정인수·김기민, 2005).

고학력의 대중화로 대졸자격증의 시장가치의 급락한다. 새로운 계층경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국가의 성격과 교육정책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특징이 부각되었다. 민주화와 시장화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확대된 상황에서 문민화된 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되어갔다. 시장중심의 논리가 교육부문에 유입되고 중상층의 교육에 있어 다양한 선택의 보장과 차별적 교육기회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평준화정책의 기저가 점차 와해되어가고 자율성, 선택의 자유, 수월성, 다양성 논리가 강조된다(강태중, 2015). 교육팽창이 상급학교로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급별 학력취득의 차이가 매우 줄어들게 되어든다. 계급 간 지위경쟁의 양상이 달라져 단순한 대졸 자격증의 노동시장에서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이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상층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학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학력자원뿐만 아니라 이 자격증을 시장에서 유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격증의 질적 차이(외국대학출신, MBA)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시장가치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여분의 기회구조와의 결합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자본이다. 이미 대학교육이 보편화되어 대학졸업증이 계급적 지위를 무난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보장적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 계급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자본인 대졸자격증에 더해 계급 간에 차별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자본과의 결합이 긴요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가족의 자본과 사회자본 그리고 학벌이 생성해내는 사회연줄망이 결합될 경우만 학력자본은 과거의 위용을 갖게 되었다(윤양배 외, 2008).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직 선호경향은 강화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신참자의 입직은 점차 어려워졌다.

위에서 요약적으로 생산체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 시기의 교육상황은 직업교육과 대학진학을 기준

으로 한 고교 계열 분리의 강화, 고등교육의 확대 및 서열체제 강화, 후기중등교육의 세분화와 실질적인 고교 평준화의 해체, 조기 유학 및 해외유학 기회의 확대의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에는 교육을 통해 계급 재생산 및 상승 이동은 부모의 강력한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 제도 및 정책의 활용이 가능한 특정 계급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교육체계변화에 따른 선택지의 변화는 개인들이 놓인 사회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기 때문이다. 즉 교육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계급적 구조에 상이하게 위치한 행위자의 동원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대응방식의 선택의 결과가 교육 불평등으로 귀결된다.

앞서 구성한 통합적 모형에 의거하여 아래의 표는 시기별 생산체제와 교육과의 관계를 요약하였다. 이 표에서 제시된 모형에 기초하여 이후 각 정부에 의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한 교육정책을 정리하고 그 정책이 교육불평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 표를 통하여 각 시기별 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의 성격을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시기별 국가와 시장의 결합양상에 따라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 크게 본다면 표준화(평준화)에서 다양화(세분화)로의 변화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교육불평등 생성 양식의 변화와 각 시기적 불평등의 특징

시기/기준	산업화초기	산업화심화기	산업화후기
시기	1960-70년대	1980-1997	1997년 -현재
국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규제국가	신자유주의적 국가
국가의 자율성	높은 자율성	제한적 자율성	자율성 약화
정책통제력	강함, 효과적	주도적이나 약화	규제만 남고 친자본적
시장의 자율성	약함	강해짐	주도적
계급관계	계급이해관계 미분화, 제한적	계급관계의 분화, 경쟁적	특정계급의 주도화
교육목표	중등교육의 확대	고등교육의 확충과 초중등교육여건 개선	교육의 질 향상

교육정책의 성격	평등주의적	평등주의 내 분화	선택성과 수월성, 차별적, 위계화
학교의 분화	기본분화 내 획일성	획일성 균열	다양화
사교육의 영향	제한적 사교육	사교육 시장의 팽창	사교육의존 심화와 계급적 차별성
교육팽창	팽창의 시작, 선택적 소수의 대학입학	대중화	대중교육 내 차별적 분화
대학교육의 가치	높은 보상성	보상성의 약화경향	보상력 급락 차별적 보상
대학교육의 성격	엘리트교육	선발적, 차별화	대중교육이후의 변화지향
교육포부	‘개천에서 용나기’	대학진학을 통한 화이트칼라직업 획득	‘금수저 대 흙수저’ 론 속의 좌절, 꿈의 상실
불평등 수준	상대적으로 평등	불평등의 확산	강한 불평등

※ 각 시기에 대한 명칭은 잠정적.

나.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제도의 변화는 정책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다. 정책은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 (Ball, 2012: 3)하는 일이다. 가치는 그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부유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과 관련한 가치를 논할 때 누구의 가치는 반영되고 누구의 것은 반영되지 않으며 정당화되지 않는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한다(Kogan, 1975).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개념에는 정책형성에 있어 통제와 권력이라는 핵심적 요소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정책이 이상적 사회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듯이, 교육정책은 이상적 교육이 무엇인가라는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이상적 교육의 이미지는 시기에 따라 요동하고 있다. 정책이란 그 시대의 주요 이해관계와 사회갈등과 지배와 정당화라는 문제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시기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교육정책 또한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와 이해관계 그리고 사회계급과 같은 주요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게 된다.

정책의 선택과 집행은 단순히 특정한 계급(주로 중간계급)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보다는 복잡다단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의 복합성(지배적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잔여적이거나 최근에 대두되는 이데올로기를 모두 포함하는)에 반응하는 것이다(Shapiro, 1980). 자본가계급의 이해뿐만 아니라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다양한 사회계급의 이해가 반영되기도 하며 또한 전문가 집단 및 교사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도 한다. 카노이와 레빈(Carnoy & Levin, 1985)은 미국 교육의 전개과정의 분석에서 사회현실을 개선하려는 사회운동세력의 요구가 교육정책에 강한 영향을 주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육재정의 위기 시에 일련의 탈중심적 교육변혁을 방식으로서 교사권한강화 시스템은 교육전문가들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도입되기도 한다(Park, B. J., 1998). 민주화과정에서 세력화한 교사들의 주장이 학교의 운영과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성열, 1992).

한국교육정책에 관한 검토에서 이종재 등(이종재 외, 2010)은 한국 교육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초등교육의 완성을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추진하였으며, 1960-1970년대는 중등교육 기회의 확대, 1980년대는 고등교육의 확충과 초·중등교육여건 개선, 1990년대 이후 교육의 질 향상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었다고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각 정권의 고등학교정책과 교육불평등

시기별로 채택한 상이한 교육정책(예, 00차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육불평등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제기할 수 있다. 평준화정책(표준화와 중앙집권적 정책)과 교육불평등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의 변화에 의하여 사교육 시장이 팽창되고 이에 의하여 어떤 효과가 발생하였는가? 정시로부터 수시제도로 이행해가는 대입전형 제도의 변화와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과 불평등(차별적 상급학교 진학률의 분포 확인)의 관계는 무엇인가? 아울러 특목고, 자율고의 도입정책은 교육불평등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광복 직후 중등교육 체제에서 유지되어왔던 중학교, 실업학교 그리고 고등여학교의 구조가 1950년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6-3-3-4학제를 확정하면서 학교체제의 골간이 형성되었다. 평준화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발점으

로 하여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어 갔다. 1970년 28.1%였던 고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에 63.5%로 급증하여 고등학교의 진학이 폭발적으로 팽창하여 갔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1998). 고등학교의 입학이 실력이 아니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무작위선정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고등학교에의 진학이 ‘실력’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더 이상 소위 말하는 ‘일류’ 고등학교의 지위는 급속하게 약화되어 갔다. 상층계급의 교육적 성공의 상징이었던 일류고등학교로의 자녀의 진학열망은 수면아래의 계층적 불만으로 묻히게 되었다. 이제 학교에서의 성공(학업성취)과 좋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부모의 학력이나 재산보다는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에 확산되었다. ‘개천에서 용 나왔다’라는 일종의 신분상승이동에 관한 신화가 받아들여지는 시절이었다. 물론 소수의 특목고로 분류된 학교(1983년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설립, 그 후 1986년 12월 1일의 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계열 등이 특목고의 범주에 포함되어 평준화제도하의 예외적 지위를 유지하였다)만이 학생선발권을 가질 수 있어 과거의 서열적 위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특수목적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들은 설립취지와 다르게 점차 명문대학에 진학률이 높은 명문고로 변질되어 갔으며 이는 평준화체제에서 완화되어가던 교육차별이 다시 심화되어가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갔다. 아울러 대학입학에의 열세와 취업과 임금차별이라는 사회적 차별이 노골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실업계학교들은 진학희망자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1974년 도입된 고교평준화정책은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집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평준화’라는 이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내용은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거주지 중심으로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기에 서울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장되었다. 기존의 선발제에 의해 형성된 일류고등학교 출신에 의한 사회진출에 유리한 지위의 독과점현상을 막고 학생의 출신가족의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경쟁을 보장하자는

목적이 이 제도의 배후에 깔려있다. 고교 입시를 위한 과열 경쟁 해소, 평균 학력의 증가, 학교 시설의 향상, 재수생 감소와 같은 문제의 해소에 ‘혁명적 효과’를 나타낸 정책(박부권 외, 1990)이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를 통하여 고교교육의 하향 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쟁원리 말살,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상실케 하는 평준화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성공적 추격모형의 경제체제에서 경제는 상당 기간 동안 고도성장기를 거쳐 마침내 경제발전이 본궤도에 이르게 된다. 한편, 군부정권은 성장하고 있는 중간계급의 학업요구를 수용하여 1981년 졸업정원제를 채택하여 대학입학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권력 정당성의 위기를 완화시키려는 일종의 정책적 전환이기도 하였다. 이 정책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적 변화를 통하여 정당성 위기를 일정한 정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산업분야에서 점증하는 고학력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대학입학생의 확대와 고급인력의 확보가 동시에 요구되는 환경에서 교육정책의 성격도 변화한다. 이 시기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과 취업률은 대학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였다. 중등학교에서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준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대학팽창이 경제발전과 함께 일정정도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었다. 베이비부머들의 본격적인 대학진학과 함께 이 시기에 대학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경제성장은 여전히 높은 취업률에 의하여 완화되었다. 졸업정원제는 졸업정원의 30%를 더 모집하고 증원된 숫자의 학생을 점차 확일적으로 탈락시키는 제도라는 오명을 안고 1988년 다시 입학정원제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0년대 폭발적인 대학 설립과 함께 대학생 급증이라는 고학력화의 원인이 되었고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대학진학률을 경험하게 된다.

김영삼정부의 시기는 내부적으로는 개발국가의 한계점을 노정하는 것과 함께 외부적으로는 세계화의 압력이 점차 강화되어갔다.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정책의 효과는 점차 약화되어갔으며 그간의 무역활동을 통하여 시장으로부터의 자율성의 요구와 대외적 시장개방의 압박이 도처에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편, 경제성장 과정에서 차별적 참여는 소득배분의 분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어가는 과정이자 차별적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내 계층구조의 분화

가 가속화되어가는 시기였다(조돈문, 1994). 점차 사회적 지위를 둘러싼 지위 경쟁이 교육과 직업을 중심으로 가열화 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도 획일적 평준화를 그간 유지해온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점점해가고 교육선택의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평준화정책이 교육의 대중화라는 학교팽창의 과정이었다면 ‘특성화’와 ‘자율화’는 사회적 지위의 차별화의 과정과 당시에 유행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확산이 교육영역에 침투한 결과이기도 했다. 교육공급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소비자의 선택을 강조하는 요구가 점증하는 가운데 특목고와 자율화고등학교의 설립을 가능하게 할 법적 제도가 만들어지고 마침내 박정희정권 이래 여태까지 유지되어 온 평준화의 제도적 골격이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소득의 차별성에 기초하여 교육소비의 차별화를 지향하는 중상계급의 지위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적 전략이기도 하다.

김영삼정부에서 행해진 이른바 5.31 교육개혁 방안은 평준화제도 하에서 교육적 욕구를 충족 받지 못한 중상계층의 욕구가 반영된다. 이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이 방안을 통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표방하고 “중등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유형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교육 개혁위원회, 1995). 아울러 실업계 학교에서의 선택권을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다양한 이름의 전문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라는 구색을 맞춰주었다. 과거 발전국가 하에서 정치인과 교육관료에 의하여 주도된 획일적인 공급체계가 수요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수요 시장의 다양화로 전환되었다. 이제 교육의 성과가 차별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제도가 도입 되었다. 국가는 교육평등기회와 과정 및 결과의 보장이라는 주요한 역할을 마침내 시장의 기체에 내어줌으로써 이미 팽창되어 있는 사교육 시장과 함께 공교육체제 내의 교육불평등을 양산해 낼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완성하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내외부의 경제조건 속에서 우리사회는 유래 없는 구조조정의 압박을 겪는다. 외부로부터 ‘강요된 구조조정’(박길성, 2003)은 우리사회를 더욱 더 신자유주의체제로의 전환으로 이끌어 갔다. 새로운 구조조정에 봉착한 개발국가는 신장된 자본의 힘과 압력을 마주해야한다. 본격적

으로 세계경제에서의 역할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기업은 더 이상 개발국가의 도구가 아니다. 과거 선택과 집중 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성공한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으며 국가의 재정과 정책적 지원을 훌쩍 넘어 대자본가로 성장한 재벌들은 국가의 목표와 다른 단위 재벌의 고유한 목표를 수립하게 이르렀다. 이 시기에 개발과 성장은 더 이상 높은 고용률로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이제 고학력을 통한 취업의 보장이라는 등식은 깨졌다. R&D 투자의 활성화는 한편 교육의 팽창의 성격도 변화한다. 외환위기라는 내적 위기와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확장이라는 외적 위기에 처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권의 시기에는 민주화된 정부에서의 시민의 선택권의 보장이라는 담론에 의하여 복지사회적 교육평등의 담론은 소수의 반향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의 아이러니는 그 간의 보수정권의 장기 독점시절을 거쳐 최초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권이 집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거대 쓰나미에 끌려 진보적 교육아젠다를 국가주도적으로 정책화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졌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교육제도 역시 김영삼정권 이후 계층화와 세분화의 과정 속에서 다시금 교육불평등이 구조화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내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말았다(강태중, 2015). 결과적으로 이 정권을 거쳐 다시 등장하는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 기간은 교육불평등이 극심하게 노정되는 시기가 되었다.

강태중(2015)은 이명박정권에서의 교육정책은 김영삼정권에서 수립된 ‘신자유주의적’ 5.31정책의 주요 방안들이 충실하게 변안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자율’이라는 슬로건이 모든 고등학교 제도에 깊숙이 침투하였다고 그는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 정부는 자율학교의 범주를 사립학교에 제한하던 것을 공립학교마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달수 있도록 하였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1년 6.29 개정). 심지어 이명박정부는 자율고등학교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자율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학교가 성적 상위 50% 학생들을 선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 자율고가 아닌 일반계고등학교를 황폐화시키기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제 정부는 앞장서서 교육불평등을 제도적으로 구조화하고 중상계급의 교육적 선호에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이미 시

장을 지배하는 계급(층)의 이해관계를 교육영역에서 주도적으로 반영해가는 계급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수의 교육소비층은 주요한 정책과정 목표에서 배제되고 중상층의 교육이해관계만이 정책에 반영됨으로 인하여 교육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생성되게 된다. 이 시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사교육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함께 다양화 담론에 의해 유도된 공교육에서 학교유형화를 통한 고교분리를 통한 불평등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적 교육불평등이 노골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우리사회는 이미 사교육이 공교육을 마비시킬 정도로 비대해져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국가마저도 특정계급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계급자본주의국가로 변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공공성은 더욱 침해받고 있다.

물론 자본의 교육에의 침투현상이 우리만의 경험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NCLB를 계기로 사기업이 교육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교다양화, 영어교육 강화, 방과후 학교, 자율과 경쟁, 학업성취도평가, 선택권 등의 정책과 논리가 강조되면서 학교교육이 자본의 직간접적 영향을 점차 강하게 받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 경향을 버치(Burch, 2009)는 최근에 출판한 <숨은 시장>(Hidden Markets)에서 신민영화(new privatization) 현상이라 칭하고 있다. 학교선택제가 교육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제시된 바 있다(Whitty & Halpin, 1998; 김경근, 2002).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주로 주창되어왔다.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표면화 된 이후 오늘날 세계적 담론과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적 용어가 되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지만, 이 자유는 자본주의체제에서의 시장적 자유를 지칭한다. 신자유주의가 앞세우는 자유는 자유 시장, 자유 무역, 자유 송금, 사적 소유의 자유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는 시장과 무역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자본 축적과 우선해 관련된 자유일 뿐이다(Harvey, 2005). 신자유주의 교육관은 교육의 시장화와 상품화를 강조하였다. 교육에서 시장의 자유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신자유주의 교육관은 교육소비자에게는 학교선택권을, 교육공급자에게는 경쟁자율권을 주어서 시장경쟁 원리

에 따라 교육상품의 질이 저조한 학교를 폐교시킬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였다(강창동, 2011).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밑그림은 벌써 <자율과 책임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박세일·우천식·이주호 편, 2002)에서 이미 제시된 바, 이 책에서 저자들은 다양화와 관련하여, “중등학교의 경우는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 기존의 특수형 학교를 보다 확대하고 활성화하여야 하며, 특히 자립형 사립학교는 대대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학생선발, 교사 및 교장인사, 교육과정의 선택, 수업료 책정 등에 대폭적인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박세일 외, 2002: 24)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학교는 신자유주의이념의 전 체계로의 확산의 한 과정이다. 그 근거에는 전형적인 평준화정책효과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 및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위한 권위주의적 통제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황폐화시켜 왔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숭한 정책적 시도가 시행되어왔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대학입시에서 성적 반영 비중을 줄이고 전인교육, 특기적성교육, 사회봉사 등과 같은 비교과 영역의 활동을 더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온 것이다. 자율성과 다양성의 제고라는 기치 하에 도입된 자립형 사립학교도 최초의 취지와 다르게 특정한 계층에 효과적인 입시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병수(2005)는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그 문제점을 꼼꼼하게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실상 점진적 평준화 해체논리: 자사고는 평준화의 보완이 아니라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평준화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다. 평준화 보완 논리는 평준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전면폐지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둘째, 사유화 논리: 자립형 사립고는 공교육을 완전 사유화시키는 것으로 공교육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다. 셋째, 귀족학교를 통한 부의 대물림: 부유한 자녀들만의 집합소로 사실상의 ‘귀족학교’이다. 이와 반대로 일반학군에서는 오히려 학습집단의 다양성은 추첨배정제도를 실시했던 시기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즉 상위권 학생들은 선호학교를 중심으로 모이고 하위권학생들은 비선호학교를 중심으로

모이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반학군 내에서 학습집단이 동질화되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국 학교선택제의 이론적 근거는 지난 2년간 학교선택제의 실험을 통해서 철저히 부정되었다(위권일, 2011: 173). 넷째, 입시교육을 부추김: 명문고 간판에 집착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획일화 될 것이다. 다섯째, 제한된 선택권: 귀족학교와 입시위주의 학교라는 위상에 걸맞게, 성적이 높은 ‘우수학생’ 위주로 선발하려 할 것이다. 학생선택권은 성적이 높은 부유한 학생들의 몫이다(하병수, 2005).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Bell(2005)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듯이 학교선택권에 대한 주장은 고소득 전문직계층과 같은 상층계급만을 위한 교육기회 부여에 불과하다.³⁾

이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부모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 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1년에 약 1,500만 원정도의 학비를 부모가 부담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사부담 공교육비(공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부모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의 비율은 18.2%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수준이다. 참고로 핀란드는 0%, 프랑스 6.2%, 독일 2.1%, 포르투갈 0.1%, 영국13.1%, 미국 0%에 비해 18.2%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최소 100개 신설한다면 약 2,500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사부담 공교육비를 더욱 높일 위험성을 표출하고 있다. 기존에 사립학교에 지원하던 2,500억 원을 공립학교에 지원하여 공립학교의 질을 제고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재정부담은 자율형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부담방식은 국가가 부담하는 공부담공교육비는 그대로 두고 사부담공교육비를 늘리겠다는 발상이다.

성기선(2011)에 의하면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모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하였고, 서울시의 경우 2011년 현재 26개교가 지정되어 전체 일반계고 231개교의 11.26%이다. 조만간 외국어고등학교도 상당수 자율고로 전환될 것이므로 결국 한국 고교체제는 상위학교인 100여개의 자율형사립고와

3) 자율형 사립고의 등록금 수준은 공립학교의 3배로 등록금납부 능력에 따라 철저하게 교육기회가 차등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일반계고등학생들의 등록금이 1분기 평균 445,000원 정도인 반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평균 1,116,000원이다. 1년 등록금 총액이 4,464,557원이며 이는 2011년 국립대학 연간 등록금 평균이 443만원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http://cesi.kedi.re.kr> OECD 통계지표 참고.

하위학교인 일반학교, 그리고 기피학교인 실업계 학교로 층화가 확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제 한국의 고등학교는 다양화와 자율성 제고의 기치 하에서 부모의 계층에 따라 위계화 되어 사회구조의 계층적 위계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아래의 표는 2011년 이후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특목고는 2011년 120개교에서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2016년에는 152개교로 증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자율고의 도입도 급증하고 있는데, 2011년 109개교에서 2016년에는 159개교로 약 5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하여 입학이 좌우되는 특목고와 자율고의 증가는 학생선발과정에서의 사회적 격차를 정당화하는 통로가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우수학생의 사회적 분리는 일반계고의 학습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학교 간 성적차이로 나타난다.

<표 6>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분포

년도/계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2011	1,554	499	120	109
2012	1,529	499	128	147
2013	1,525	494	138	165
2014	1,520	499	143	164
2015	1,537	498	148	161
2016	1,545	497	152	159

주1)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으로 분류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자료 재구성

이상의 각 정권별 주요제도의 변화를 통해볼 때, 전반적으로 고등학교의 제도는 표(평)준화제도에서 분화형제도로 분명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준화에 기초한 정책은 쇠퇴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평준화를 통한 교육평등기회의 공고한 기반에 기초하여 수월성과 다양성의 목표를 부수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평준화의 해체로 인한 교육불평등이 극심해지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소수의 선택을 위하여 다수의 교육평등기회가 침식당하고 있다. 교육소비자의 선택의 자유와 공급자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양산된 특목고와 자율형학교의 설립은 일반계고의 황폐화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 특목고와 일반고, 인문계와 실업계, 자율형사립고로의 학교유형의 다양화라는 정책의 확대는 학업성취도 및 상급학교로의 진학률의 격차를 더욱더 증폭시킬 구조적 조건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 간 차별적 기회의 제공이라는 불공평한 경쟁이 제도화됨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에 의하여 상급학교에 선발배치시키는 과정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학교의 다양화와 특목고 등 설립의 급진적 확산정책은 형식적 차별화의 허용을 통하여 내용적 차별을 은폐하는 제도인 것이다.

<표 7> 역대 정부별 고등학교 체제의 변화(1948-1979)

구분	이승만 정부 (1948-1960)	박정희 정부 (1961-1972)	박정희 정부 (1973-1979)
주요정책	1. 교육법 제정 (1949.12.31., 법 86호) 2. 교육법시행령 (1952.4.23.) 3. 6-3-3-4의 단선형 학교제도 정비 4. 예외로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설치	1. 교육법 개정 (1961.8.12., 법 680호): 학기제 개편(4월 1일→3월 1일로) 2. 사립학교법 (1963.6.26., 법 1362호) 3. 교육법 개정 (1963.8.7., 법 1387): 실업고등전문학교(5년 제) 4. 교육법 개정 (1968.11.15., 법 2045호): 중학교 무시험 입학 5. 교육법 개정 (1970.1.1., 법 2175호): 실업고등전문학교(5년 제), 전문학교 설치(2-3년제)	1. 체육중고등학교 설치기준마련(1973.2.2.) : 체육특기자 선발 2. 평준화정책 확정 및 발표(1973.2.28.) 3. 교육법 개정 (1973.3.10., 법 2586호): 고교입시의 시도별 관리 4. 교육법 개정 (1974.12.24., 법 2710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동 대학 설치 5.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 (1977.2.26., 대령 8462호)
일반계고	보통교육(보통과)	일반계고(보통과)	일반계고(보통과)

실업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교육(농업, 상업, 수산, 가정, 간호조산, 외국어, 예술, 기타) 2. 실업 고등학교 (전교과의 30% 이상을 실업과목으로 하는 학교, 교육법 156조) 3. 평택종합고등학교 개설(1956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교육(농업, 공업, 상업, 수산, 해양) 2. 종합고등학교(보통, 전문학과) 3. 예술고, 가정고, 철도고, 체육고, 국악고 4.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교육(농업, 공업, 상업, 수산, 해양) 2. 종합고등학교(보통, 전문학과) 3.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특목고	-	-	특수목적고등학교(삼육, 성심, 중경, 국악, 서울예술, 체육, 철도, 부산해양) 설립 좌절됨
비고	종합고등학교(comprehensive public high school)제 지향, 인문과 실업으로 나눈 것은 일제강점기제도 영향임	시도단위에서는 단일 과정의 인문고와 실업고 유지하되, 지방에서는 종합고등학교제도 유지함	고교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보고서(1,2차 보고서)에서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함

<표 8> 역대 정부별 고등학교 체제의 변화(1980-2008)

구분	전두환·노태우 정부 (1980-1992)	김영삼정부 (1993-1998)	김대중정부 (1998-2003)	노무현정부 (2003-2008)
주요정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80년 ‘7.30 교육개혁안’ : 과학, 외국어, 예체능 영재 교육방안 논의 2. 교육법 개정 (1981.2.13., 법 3370) 3. 평준화 정책 보완계획(평준화 확대실시 계획을 전면 보류, 1982년) 4.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31개혁안: 교육공급자의 자율과 교육소비자의 선택 존중 2. 고등학교 설립 준칙주의 3. 국제고를 특목고로 정식 지정 4. 특성화고 도입 (1997년): 정보고, 디자인고 등 5. 자립형 사립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학교 확대운영 2. 부산과학영재학교 개교(2003년) 3.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4. 시·도교육감의 특목고 및 특성화고 지정·고시 권한 확대 5. 고교 평준화 확대실시 및 관계 법령의 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방형자율학교 시범실시 2. 자립형 사립고 시범실시 연장 3. 대안학교 법률상 각종학교로 인정 4. 교육감의 특목고 지정 권한 축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 5. 직업교육 특성화고 확대

	개선 방안 발표(고교다양화와 특성화 추진, 1990년)	설립 6. 자율학교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일반계고	보통교육(보통과)	보통교육(보통과)	보통교육 자립형사립고(시범)	보통교육 자립형사립고(시범) 개방형자율학교(시범)
실업계고	1. 전문교육(농업, 공업, 상업, 수산, 해양) 2. 종합고등학교(보통, 전문학과) 3. 방송통신고,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과고, 83년 설립), (외고, 84년 설립)	전문고 특성화고(직업교육/대안교육)	전문고 특성화고(직업교육/대안교육)	전문계고 특성화고(직업교육/대안교육)
특목고	1. 과학고등학교 설립 및 확대 2. 외국어고등학교 설립(1992년): 각종학교에서 정규고등학교로 전환	농업, 공업, 수산, 해양고, 과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농업, 공업, 수산, 해양고, 과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농업, 공업, 수산, 해양고, 과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비고	일반고와 특목고 진학 사이에 고교 서열화와 고입 경쟁이 격화됨, 실업계 고등학교의 쇠퇴시작	종합고등학교 폐쇄 가다, 평준화 존립기반 위태해지면서 학교 서열화현상 더욱 심화됨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려 하였고, 외국어고 폐지논란문제가 발생함

<표 9> 역대 정부별 고등학교 체제의 변화(2008-2016)

구분	이명박정부(2008-2013)	박근혜정부(2014-2016)
주요정책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00개교,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150개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50개교)	1.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자율학교 지정 대폭 확대(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3. 특목고 5년 단위 평가→재지정여부 결정 4. 외고 목적변경: 어학영재→외국어에 능통한 인재 양성	
일반계고	일반고	일반고
특성화고	직업교육 특성화고 (전문교, 전문계 특목고, 특성화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직업교육 특성화고 (전문교, 전문계 특목고, 특성화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자율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고
비고	일반고 위기 표면화	

라. 학교유형에 따른 교육격차

1) 학교 간 불평등: 학업성취도의 격차

위에서 각 행정부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각 행정부별로 차이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정책의 변화과정은 평준화에서 다양화정책으로의 이행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평준화정책이 하나한 점차 와해되어가면서 최근의 정부에 이르러서는 특목고와 자율고의 설립의 급성장으로 일반고의 황폐화가 심화되어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변화가 교육불평등과 어떻게 연관을 맺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먼저 학교 간 학업성취도와 대학입학률의 차이의 순서로 이 분석을 진행하겠다.

학교에서의 교육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학업성취도

격차(achievement gap)이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평가고사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험인 수학능력검사가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통상 학업성취도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변수이다. 물론 최근에 학업성적 이외의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다양화(수시와 정시제도)를 지향하는 제도와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학업성취도는 상급학교의 진학과 전공선택 그리고 취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한국의 경우, 학교 간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클 것인가 아니면 학생 개인의 특징, 개인적 변수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의 차이가 클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우리는 현존하는 교육불평등의 주요 요인이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 즉, 교육정책이나 학교가 채택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생성되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만약 교육불평등이 주로 학교정책에 의하여 매개되거나 생산된 것이라면, 우리는 주요 교육정책의 효과를 재평가해서 새로운 정책선택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은 최근의 교육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학업성취의 분산에 있어서 개인적 요인의 영향의 규모를 분석해내는 것은 성취도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다. 미국에서의 콜만의 연구는 성취도 변이의 거의 대부분이 개인의 경제적 지위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학교 간 차이가 적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정책적 방향의 한계를 보여준 기저적 연구였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 것인가? 먼저 국제 비교연구를 통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보자.

1995년 IA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에 의해 OECD 54개국을 대상으로 한 TIMMS(The Third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와 이를 다른 국가에 대해 적용하여 1999년 조사한 TIMMS-Repeated 자료를 분석한 연구(Schütz, Ursprung, & Wößmann, 2008)는 이에 대한 좋은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 슈츠 등은 이 자료를 이용한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학생 부모의 경제적 지위(family background effect)를, 5가지 범주로 측정하였다. 가정 내 소장 책의 수, 소장 장서

의 수가 부모의 사회경제교육적 배경 변수에 대한 일종의 proxy로서 측정을 위해 그간의 국제비교연구에서 통용되는 변수이다. 그들은 범주 1(0-10권, 범주 2(11-25권), 범주 3(26-100권), 범주 4(101-200권), 범주 5(200권 이상)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국가 별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Schütz, Ursprung, & Wößmann, 2008: 291), 한국은 전체 54개국 중 6번째로 그 영향력이 큰 국가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일본(40위), 캐나다(48위), 프랑스(49), 덴마크(37위)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미국(11위)보다 높았다. 한국보다 이 효과가 높은 국가는 순서대로 영국, 타이완, 스코틀랜드, 헝가리, 독일이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부모의 배경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불평등 해소와 관련하여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만약 교육제도에 의한 적극적 개입이 없을 경우 우리의 교육불평등은 부모의 능력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다른 사회에 비하여 매우 높고 이는 교육분야의 금수저 논란이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임을 의미한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교수준의 다양한 요인이 있다. 미국에서는 schooling effect를 학교 간(between school) 요인과 학교 내(within school)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왔다. 콜만의 연구에서 학교효과(school effects)란 학업성취도의 변량 중 학교시설, 학교의 curriculum, 교사의 자질, 교사의 태도, 그리고 재학생의 특성(성비, 입학 시 평균적 학업성취도, 미국의 경우 흑백 인종비율, 평균적 부모의 SES 등)에 의해 기인하는 변량의 크기로 측정되었다. 콜만보고서에서는 9학년 학생의 읽기성적에 관한 변량(variance)의 38%가 학부모의 SES를 측정할 두 변수에 기인하며 단지 8%의 변량만이 위에서 언급한 5가지의 학교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종의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효과에 관한 경제학적 모형(소위 말하는 input-output model, 투입-산출모델)의 결론이 추후의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보고된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의 태반은 개인에 의하여, 특히 학부모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바, 학교수준에서 교육불평등을 위하여 공적인 재원을 투입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해석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콜만류의 경제학적 투입-산출모델의 부적절성이 추후의 연구

에 의해 비판되었다. 예컨대, 그린왈드 등(Greenwald, Hedges, & Laine, 1996)의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연구에 의하면, 학교수준의 자원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교사의 높은 급여와 소규모 학급일수록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로, Heynes(1978)는 미국의 아틀란타 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방학기간과 개학 기간 중의 연구를 통해, 학교를 다니는 것, 즉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줄여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학교수업이 학업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궤를 같이하나, 다른 시각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학교수준의 자원이 학생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학교의 자원이 학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학생에게 전달되는지(학습)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연구관심이 제기되었다. 학생은 그가 참여하는 학과수업(교실별 수업, 능력반제도, 보다 다양하게는 진학반 혹은 취업반 등의 학교 내 분화)에 내재화(nested)되고 그 수업은 또한 학교에 내재화되어있는 것이다(Barr & Dreeben, 1983).

이 관점에서 일련의 연구자들(Biddwell & Kasarda, 1980; Barr & Dreeben, 1983; Gamoran, Secada, & Marrett, 2000; Oakes, 2005)은 학교 간 자원의 차이보다는 학교별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격차로 측정되는 학업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발견하였다. 이와 아울러 교사의 자질과 태도에 의하여 학업성취도의 변이가 학교 내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거듭 확인되었다(Rivkin et al., 2005). 2006년의 연구에서 Gamoran 등(2006)은 당시까지의 연구를 통해볼 때, 다양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때때로 높은 학교의 자원수준은 높은 학업성취도와 관련성이 있다. 둘째, 양질의 학교자원의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셋째로 자원의 유무보다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중요하다.

학교 내부에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도입과 이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학력격차가 선발효과와 부모의 가용자원의 차이에 의하여 생성되고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이 제한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

러한 연구 추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모색하는 학교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각 급 학교별로 학업성취도를 분해한 유방란 외(2006) 연구는 학업성취도의 변이에서 학교 간요인, 학교 내 요인 그리고 가정자원의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한 예외적인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학교 교육수준 및 실태분석 연구>(김양분 외, 2003; 김양분 외, 2004; 김양분 외 2005)의 초·중·고등학생질문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특이한 사항은 고등학생의 경우 국어성적의 변량을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으로 분해했을 때, 기초모형에서는 각각 7.8%와 49.2%였으나 실업계와 특목고라는 학교유형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설명된 변량비율이 학생수준은 3.4%로 줄어든 반면, 학교수준은 82.9%로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학 성적과 (3.2%와 76.9%) 영어성적(4.0%와 79.1%)도 약간의 차이는 보이나 그 경향은 일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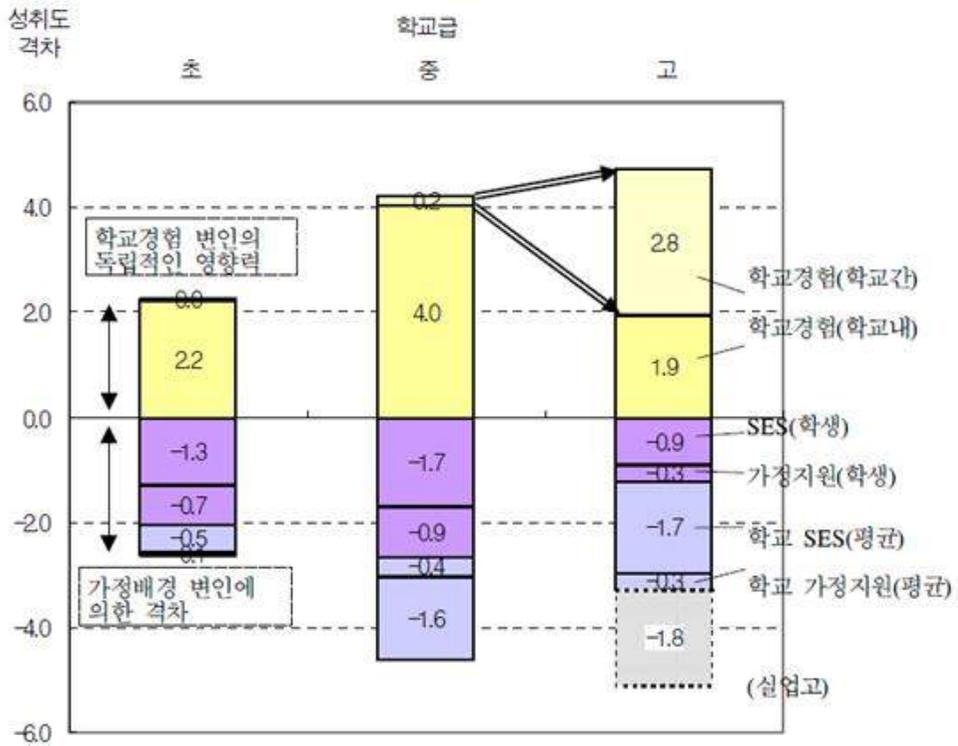
아래의 그림은 인지적 학업성취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차이보다는 학교 간의 차이에 의해 더욱 점점 확대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까지는 학교 내의 차이와 학교 간의 차이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내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고, 학교 간의 차이는 늘어났다. 분석 모형에 실업계까지 포함할 경우, 학교간의 차이는 더욱 크게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단계이고 학교 간의 차이가 별로 없으나,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일반계, 실업계, 특목고 등으로 학교가 나뉘게 되고, 우수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교로 이동함에 따라서 읍면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차이도 분명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가정배경에 따른 성적격차가 확대되며, 고등학교 단계에 이르러서는 교육 격차가 표출되는 양상이 점차 학교 간의 차이로 변환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주로 성취도 격차 0점을 기준으로 위의 부분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경험의 차이에 따른 수학성적의 차이이며 아래 부분은 가정배경 요인에 의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 그림을 쉽게 설명하자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초등학교에서 학교 내 경험이 1-표준편차만큼 높을 경우 학교경험변인에 의하여 수학점수가 2.2점 정도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학교에 이르면 학교 내 프로그램에 의한 차이가 확대되기 시작하고, 고등학

교 때는 가정의 SES 영향은 감소하는 반면, 학교에 의한 차이가 증가하는데 특히, 학교 내 차이(1.9점)보다 학교 간 차이(2.8점)에 의하여 성적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교육불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을 발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분석이 시행된 2006년의 시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학업성취도의 대부분이 주로 학교 간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이 연구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특목고나 일반계나, 실업고나 아니냐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학교 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이 연구는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진은 어떤 요인에 의하여 이 현상이 발생하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 들은 본인들이 발견한 내용이 정책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애써 설명하려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이 선발효과(우수한 학생을 싹쓸이 해간 효과)이건, 우수학교의 독특한 학습효과이건, 학업성취도 격차의 대부분이 학교 간 격차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분명하게 중고등학교수준에서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는지를 이미 2006년도에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후의 정부의 정책에서는 이 연구가 거의 원용되지 않고 사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명박정권에서는 불평등을 양산하는 제도를 적극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문제는 후속연구에 의해서 이러한 불평등 생성메카니즘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지를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가 본격적으로 인가된 2011년 이후의 상황에 대한 동일한 유형의 후속연구들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다. 보다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업성취도의 분산을 학교 간 및 학교 내의 수준의 변인과 개인적 수준의 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발생하는 부위를 확인하는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 연구의 결과가 학교정책의 형성에 정당의 입법자와 관료 및 관계자들에 의하여 이해되고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하겠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고등학교의 다양화는 교육불평등의 핵심적 원인이라는 점을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7] 학업성취도(수학)의 변량의 요인별 분해

본 연구에서 이후에 제시하는 다른 형태의 연구들은 다른 자료에 대하여 불평등과 관련하여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유형에 따른 불평등의 생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제시된 연구들도 거의 유사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 아래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특목고와 자율고라는 학교 유형에 진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에 비하여 높다. 그리고 이 효과는 부모의 SES를 통제하면 약화되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의하여 시행된 학교 다양화와 자율화는 한국사회의 교육불평등을 생산해내는 핵심적 통로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의 이중적 불평등화 가설 중 하나로서, 사교육시장의 불평등효과를 제외하고, 공교육제도에 의한 불평등 생성가설 부분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하여 잘 확인되었다.

채창균⁵⁾은 특목고 졸업생의 수능성적이 일반고 졸업생과의 차이를 보

이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2007년)를 이용하여 중학교 내신 성적 1등급 학생들 중 일반고 진학생과 특목고 진학생의 수능성적을 비교해보았다. 분석모형으로는 내생성에 따른 편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목고 진학생의 수능성적(등급)이 일반고 진학 중학교 내신 1등급 학생에 비해 높으나 아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교육성과가 높은 특목고가 존재하였다. 이 연구는 중학교 때 우수한 내신성적을 보인 학생들이 일반고와 특목고로 진학한 이후의 차이를 본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이다.

안영은·양성관⁶⁾은 학교유형(일반고/특목고)에 따라 학교효과(삶의 질, 미래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로를 교사사기 및 열의, 교사지지, 학생의 수업참여라는 매개변수를 포함한 구조방정식을 통해 밝힘으로써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선행조건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4 주기 고등학교 데이터(2012)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2,2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유형은 학습효과 변수들에 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학교유형(일반고/특목고) 차이가 학생의 삶의 질 및 미래역량에 미치는 효과 크기는 직접효과보다 교사사기 및 열의, 교사지지, 수업참여 변수를 매개한 총 간접효과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학교유형(일반고/특목고)이 학생의 삶의 질과 미래역량에 미치는 영향 모두 교사사기 및 열의를 거쳐 교사지지를 매개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학교유형(일반고/특목고)이 미래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지만, 그 총 효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민병철·박소영(2010)⁷⁾은 외국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보다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 4차년도 자료 중 중3 코호트자료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를 함께

5) 채창균(2010), 「특목고의 학업 성취도 향상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3호.

6) 안영은·양성관(2015), 「학교유형이 교사 사기 및 열의 교사지지, 학생수업참여를 매개로 학생의 삶의 질과 미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일반고와 특목고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3-2호.

7) 민병철·박소영(2010),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효과 분석」 『한국교육』 37-1호.

사용하였다. 우선 수능성적을 비교해본 결과, 외고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보다 영역별로 2.117등급에서 2.458등급 정도 높은 수능등급을 나타냈다. 둘째, 중학교 성취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패널만을 대상으로 중학교 성취도를 제외한 외고의 학교효과를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수능 점수를 단순비교했을 때 외고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보다 높았으나 사전성취도를 포함한 학생배경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언어영역에서는 그 차이를 잃었고, 수리나 외국어 영역에서는 그 차이가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

<표 10> 학교유형과 학력격차(학업성취도) 간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적 연구(학교 유형별)

연구	연도	이용자료	사례수 (명)	주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결과	통계 기법
박수익	2016	서울교육중단 연구(SELS), 패널1-3차		학교유형 (특목고, 자사고)	학업 성취도	최초+, 시간경과 시 성취도변화율 일반고와 차이 없음	HLM3
유지은	2016	PISA 2000, 2003, 2006, 2009, 2012	926,826 (읽기) 881,135 (수학)	학교 분리정도 (비유사성)	수학점수, 읽기점수	분리정도가 클수록 부적인 관계	이원고정 효과모형
채창균	2010	한국교육고용 패널(4차)	209	학교유형	수능성적 (등급)	전체: 0 서울시, 광역시: +	2SLS, Logit
김위정, 남궁지영	2014	한국교육 개발원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의 고등학교 3~4 주기 자료	25,100	자사고, 자공고	학업성취 (국어,수학 표준화 점수)	자사고의 국어,수학 성취도 높음, 일반고의 성적은 낮아짐	HLM (다층 모형)
김준엽 외	2016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2009년 초등, 2012 중3, 2014 고2)	611,691 (1,597 학교)	초중고 학업성취도	고교유형 (일반고 대 자사고)	중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상위10%)의 자사고 입학율이 일반고 입학율과 많은 차이	유사실험 비교 (매칭 점수 분석)
김준엽 외	2016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611,691 (1,597)	학교유형	국,영,수 선형변환	자사고 선택으로 유의미한 국영수	유사실험 비교

		(2009년 초등, 2012 중3, 2014 고2)	학교)		점수	학업성취 향상 효과	(매칭 점수 분석)
류방란, 김성식	2006	한국교육 개발원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의 고등학교 3~4 주기 자료	11,754 (207학교)	부모의 SES 특목고	학업 성취도 상위권 대학진학*	학업성취도의 분해	HLM (위계 선형 모형)

*상위권대학진학: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카이스트, 포항공대, 전국의 의대, 치대, 한의대로의 진학

이병임 · 류형선(2011)⁸⁾은 서울에 소재한 과학고 1학년 129명(남학생 111명, 여학생 18명)과 인문계고등학교 1학년 학생 163명(남학생 75명, 여학생 88)이었다. 첫째, 과학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학업 및 성적, 삶의 목적 및 성취, 경제력, 가치관 및 신념, 건강 등의 5개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유형과 성별에 따른 네 집단(학교유형 2 × 성별 2)에서는 학업 및 성적, 삶의 목적 및 성취, 경제력, 가치관 및 신념, 건강 등의 5개 영역에서는 과학고 남학생이 일반고 남녀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학업 및 성적, 삶의 목적 및 성취의 2개 영역에서 일반고 남녀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이 요인에서 과학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성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과학고 학생들의 경우 중학교 때까지 학업 면에서 우수하여 부모나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과학고라고 하는 상위권학교에 입학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위정 · 남궁지영(2014)⁹⁾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의 고등학교 3, 4주기 자료를 이용하여 학력향상과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자율형 공 · 사립고등학교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다층분석 결과, 국어와 수학 성취도 모

8) 이병임 · 류형선(2010), 「고등학생의 학교 유형과 성별에 따른 유형 비교」 『영재와 영재교육』 10-3호.

9) 김위정 · 남궁지영(2014), 「자율형 공 사립 고등학교의 성과분석」 『교육평가연구』 27-2호.

두 자사고 전환학교들이 전환이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공고 전환학교도 국어 성취도에 있어서는 전환이후 향상되어 일반고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사고와 자공고 모두 학생배경과 학생과정을 통제하면 일반고와의 차이가 감소하여, 선발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과정 변수로는 교사 열의와 수업분위기, 평가정보활용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사고의 경우에는 학생배경 및 과정, 학교 배경 및 과정을 통제하여도 여전히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여 이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학교 효과가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학교만족도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자사고 전환학교의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자공고는 약간 상승, 일반고는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공고는 학생배경, 자사고는 학생배경과 학생과정(성취도, 학교관계만족도, 학업만족도)을 통제하면 일반고와 유의한 차이가 사라져, 학생특성의 변화와 교사·교우와의 관계,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결정적인 차이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엽 외 2인(2016)¹⁰⁾은 첫째, 중학교 학업성취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 유형(과학고, 외교/국제고, 자사고, 자공고, 일반고 진학)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보다 그 격차가 크지 않으나 학업성취에 따른 진학 고교 유형의 분화 양상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둘째, 가정 배경을 살펴보면 양부모 비율은 과학고, 외교/국제고, 자사고에서 일반고 및 자공고보다 높았고, 여학생은 외교 및 국제고, 남학생은 자사고 및 과학고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또한 외교/국제고 및 자사고 진학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율이 낮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다닌 경향이 두드러졌고 과학고 진학생의 경우 일반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중학교 모두 과학고, 외교/국제고, 자사고 진학생의 성취도가 모든 과목에서 일반고와 자공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과학고와 외교/국제고 진학생의 성취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중학교의 경우 외교/국제고 진학생은 영어, 과학고 진학생은 수학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수업태도 측면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과학고, 외교/국제고, 자사고, 자공고 및 일반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사교육 시간의 경우 외교/국제고와 과학고, 자사고가 일반고와 자공고 진학생보

10) 김준엽 외 2인(2016), 「경향점수 매칭을 활용한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 효과」 『교육학연구』 54-1호.

다 초·중학교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자사고, 외고/국제고, 일반고 및 자공고, 과학고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 관련 방과후학교 참여 비율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공고 및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초·중학교에서는 외고/국제고 및 과학고 진학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과학고 진학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가 낮아져 5개 학교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여섯째, 자사고진학생들이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풍토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자공고 및 일반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지은(2016)은 PISA 2000, 2003, 2006, 2009, 2012년도 총 5차시 자료를 활용하여 이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학교분리 정도를 나타내는 국가의 비유사성 지수값이 1점 올라갈 때 학생의 읽기 성취도는 82.968점 하락하고, 수학 성취도는 130.816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은 학교분리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학업성취도에 부정(negative)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였을 경우에도 이 부정적인 관계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문수연(2016)은 교육체계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교육 불평등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분석하였다. 교육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코호트를 구분하고, 코호트 간 비교분석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 계열과 국제적 교육이동에 영향을 미친 부모의 사회 계급의 효과를 비롯하여 부모의 학력, 교육포부, 학교 소재지 등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왜 특정 코호트에서 특정 계급 및 요인들의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 행위자의 경제적·문화적 자원의 효과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상급학교로의 진학 여부에서 계급 격차가 감소한 반면, 일반계고교/실업계고교, 2년제 대학/4년제 대학과 같은 진학 유형, 그리고 해외유학 경험에서 계급격차가 증가하였다. 위계적으로 분화된 교육구조에서 자본가계급과 중간계급은 우위를 점한 반면 농촌 뿌띠부르주아지는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어,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 선택의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

로 로짓 분석을 통해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대학 진학 유형과 국제적 교육이동에 대한 중간계급의 효과는 최근 코호트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교육 선택에 대한 부모의 교육수준의 효과가 점차 증가하였다. 그리고 자녀 본인의 어린 시절 교육 포부, 학업성적, 학교유형, 그리고 지리적 공간은 차별적인 교육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양상은 위계화된 교육체계에서 가족의 경제적·문화적 자원의 효과적인 작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교육 불평등의 요인이 생애 어린시기부터 나타나면서 교육자본 획득의 메커니즘이 변형·강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2) 학교 유형에 따른 대학진학률의 차이: 결과적 불평등(대학진학률의 차이)

이전의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대학 진학단계에서 취업 또는 미진학보다 진학의 가능성이 크며, 진학하는 대학의 수준도 더 높다는 것이다. 일본 사례와 비교한 연구에서도, 전반적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에 대한 가정 배경의 영향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하위 계열(전문대)보다는 상위 계열(일반대) 진학에 대해서 더 크게 작용하다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김기현·방하남, 2005). 대학의 위계에 관한 연구들은 대학의 서열체제가 서울과 지방, 지방과 지방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두휴·고형일, 2003).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수학능력시험 점수 분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대학들이 소재 지역, 설립 유형별로 서열화 구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안나, 2003).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학 진학 격차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서열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학능력시험 점수에 의하여 서열화된 대학구조의 최상위를 형성하고 있는 학교에의 진학률의 차이는 또 다른 교육격차의 지표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진학하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 진학대학이 결정되는 것은 교육불평등이 체계화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아래에서 제시된 표와 그림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소위 ‘SKY’ 대학이라 불리는 대학에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률을 도표화 한 것이다(자료: 오신환의원실에 요청하여 입수한 교육부 내부 자료).

<표 11> 2011-2016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학년도	SKY 총입학자수 (정원내 일반전형)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입학자 수 및 비율 (%, 총입학자수 대비 유형별)							
		일반고		특수목적고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율고		기타	
		입학자수	비율	입학자수	비율	입학자수	비율	입학자수	비율
2011	6,917	4,973	71.9	1,606	23.2			338	4.9
2012	6,365	4,739	74.5	1,329	20.9			297	4.7
2013	7,469	3,914	52.4	1,740	23.3	1,284	17.2	531	7.1
2014	7,255	3,780	52.1	1,346	18.6	1,554	21.4	575	7.9
2015	6,883	3,743	54.4	1,127	16.4	1,480	21.5	533	7.7
2016	6,826	3,501	51.3	1,023	15.0	1,768	25.9	534	7.8

주1) 2013-2016년 기타 항목: 예술·체육고(특수목적고), 산업수요맞춤고(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검정고시, 그 외 항목 합산

주2) 2011-2012년 기타 항목: 예술·체육고(특수목적고), 전문계열고, 영재학교, 그 외 항목 합산

주3) 2011-2012년은 자율고 유형이 없음

출처: 국회 오신환의원실 제공

위 표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2011년 이 세 대학교 신입생 중 일반고등학교 출신 학생의 비율은 71.9%를 구성했으나 2016년에는 51.3%로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과학고, 외고, 국제고로 구성된 특수목적고 출신의 비율은 동기간 23.2%에서 15%로 줄어들었다. 그 원인은 2013년부터 자율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입학이 시작되어 17.2%에서 2016년 25.9%로 급격하게 그 비중이 높아진 때문이다. 주요 대학의 입학생이 일반고등학교로 부터 특목고와 자율고라는 학생선발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 표에서는 학교유형별 대학진학률의 차이라는 이원분석(bi-variate analysis)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일반고에 비하여 특목고나 자율고의 대입격차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수연(2016)의 다변량분석은 위의 격차를 뒷받침해줄만한 분석을 제

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코호트3과 코호트4의 대학 진학 유형을 비수도권2년제, 수도권2년제, 비수도권4년제, 수도권4년제로 구분하여 다항 로짓 분석한 결과, 코호트3에서 자본가 계급, 아버지의 고졸 이상 학력, 본인의 고교 성적과 고교 계열이 수도권4년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등학교 소재지가 대학 진학 유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4에서는 중간 계급인 경우 비수도권4년제와 수도권4년제 대학 진학에 더 많이 진학하며, 아버지의 대졸 이상 학력과 어머니의 대졸 이상 학력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 부모의 고학력 효과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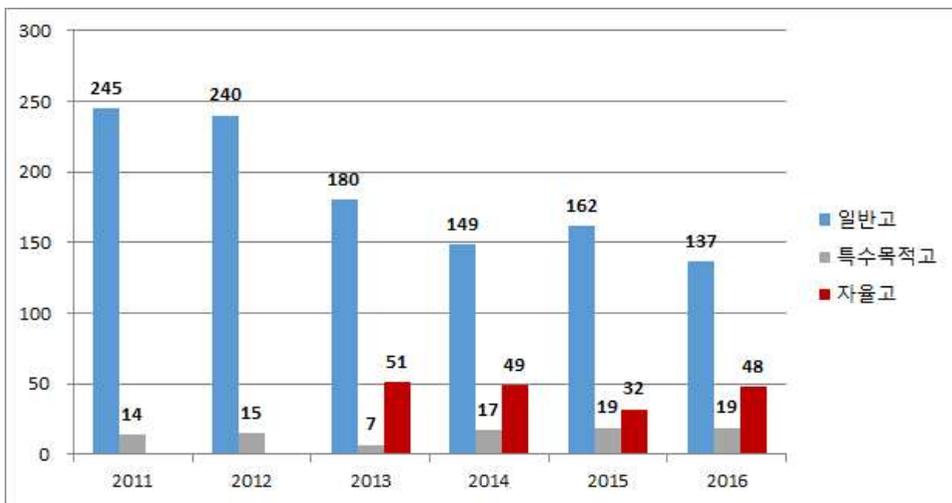
특목고와 자율고출신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의 진학에 유리하다는 점은 여러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그러나 그 학교출신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여전히 일반고출신학생들보다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나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다. 만약에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가 일반고 출신학생과 다르지 않다면, 이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단지 특정대학에 진학하는 선발과정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고등학교 다양화를 지향한 제도는 이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김성훈·김안나(2009)¹¹⁾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에 있는 한 종합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전형자료를 분석하여, 출신 고교의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 의하면 첫째, 학생들의 학점은 출신 고교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학기가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둘째, 모든 연도에서 특목고 출신 학생들은 초기에는 일반고 출신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특목고 변수의 긍정적인 영향은 고학년에서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부점수, 가정배경과 같이 학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학점에 대한 출신 고교의 영향력을 분석했을 때도, 특목고 변수의 영향력은 고학년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목고 출신 학생들의 대학 학업성취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과학고와 외고 출신 학생들의 동일 계열 전공 진학여부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이러한 특성이 학생들의 학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제시

11) 김성훈·김안나(2009),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비교 연구:특목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9-4호.

한 결과들은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배치되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출신고교 유형별 학업성취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 연구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특목고출신의 학생들과 부모는 그들의 고등학교의 지위를 대학의 진학에 유리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대학에서 특목고나 자사고출신 학생들이 학업성취도에서는 결코 일반고출신들에 비하여 우수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3)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불평등의 보정



[그림 8]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전체 정원 외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입학자 수 추이(2011-2016)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수준에 따른 입학특례에 의거 각 대학별 전체 입학 정원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을 통하여 일정한 수의 3대학 포함하여 260여명 내외의 학생을 입학시켜왔다. 이 인원은 2011년 기준으로 전체입학생 중 약 3.7%(259/6,917*100=3.8(%)에 해당한다. 일종의 소득수준에 따른 입학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1년의 경우, 이 전형의 대부분은 일반고등학교로부터 충원되었다. 특수목적고에서 충원된 비율은 14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2013년 이후 특이한 변화가 발견된다. 2013년 이후에는 자율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

에 반비례하여 일반고출신의 학생들이 2016년에는 137명으로 급감하였다. 이 기간 일반전형에 의한 입학생수가 6,917명에서 6,820으로 극히 소폭 감소(약 1%) 한데 비하여 이 전형을 통한 입학생수가 2011년 259명에서 2016년 204명으로 21% 정도 급감하였다. 이는 입학 정원의 극히 일부 비율로 상위대학에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입학기회차이를 보정하려는 노력이 이 기간 사이에 매우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설상가상으로 특목고와 자율고 출신 학생이 이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1년 5.4%에서 2016년 무려 33%에 이르렀다.

<표 12> 2011-2016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신입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 비율

학년도	SKY 총입학자 수 (정원의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정원의 특별전형) 입학자수	총입학자수 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비율(%)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입학자 수 및 비율 (%, 해당 전형 입학자수 대비 유형별)							
				일반고		특수목적고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율고		기타	
				입학자 수	비율	입학자 수	비율	입학자 수	비율	입학자 수	비율
2011	11,521	264	2.3	245	92.8	14	5.3			5	1.9
2012	11,574	263	2.3	240	91.3	15	5.7			8	3.0
2013	11,621	244	2.1	180	73.8	7	2.9	51	20.9	6	2.5
2014	11,624	220	1.9	149	67.7	17	7.7	49	22.3	5	2.3
2015	11,679	222	1.9	162	73.0	19	8.6	32	14.4	9	4.1
2016	11,812	210	1.8	137	65.2	19	9.0	48	22.9	6	2.9

주1) 2013-2016년 기타 항목: 예술·체육고(특수목적고), 산업수요맞춤고(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영재 학교, 검정고시, 그 외 항목 합산

주2) 2011-2012년 기타 항목: 예술·체육고(특수목적고), 전문계열고, 영재 학교, 그 외 항목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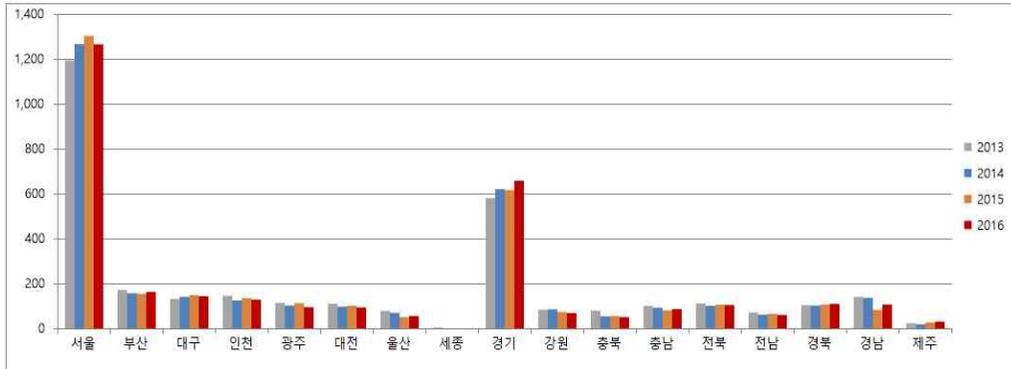
주3) 2011-2012년은 자율고 유형이 없음

주4) 2013년 이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대분류됨

이에 2011년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은 '기회균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정원외)'로 분류되어 있음

출처: 국회 오신환의원실 제공

4) 지역별 대학진학률의 차이



[그림 9] 출신지역별 서울대학교 진학률의 차이(2013-2016)

마. 학교 내 불평등: 국제 비교연구를 통한 교육불평등의 상황

중등학교 수준에서 한국의 교육불평등의 상태를 상대적으로 객관화시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 사회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불평등상황의 성격과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그간의 교육정책의 불평등 효과에 관한 경험적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 입시전형과 불평등: 지역, 입학사정관제

대입제도의 변화 역시 교육불평등의 주요한 요인이다. 입시제도는 정시에서 수시로의 방향 선회에 따라 헤아릴 수 없는 대입전형의 복잡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입시제도의 복잡화는 궁극적으로 복잡화와 다양화에 능동적, 적극적,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회계층에 유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계층에게 상당히 유리한 기제라 하겠다. 다음은 위의 표에서 제시된 시기별 중등교육 및 대학입시의 변화가 교육불평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효과를 낳게 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채택된 기존 연구에 대한 요약이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또 다른 연구들은 지역의 교육적 특성의 차이에 주목한다. 이들은 도·농간 교육 격차(김양분, 2009; 정철영·정진화·오창환, 2011) 뿐만 아니라 도시 내 그리고 서울지역 내에 교육 격차들이 존재하며, 차

별적 교육 공간을 둘러싼 거주지 분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논의한다(손준중, 2004; 최은영, 2004; 황은주, 2008). 연구들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지역 구성원들의 직업 분포, 교육수준, 거주지의 학교 분포, 사교육 기관 분포, 재정 자립도 등의 여러 요인들과 연결한다. 자녀 교육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거나 위장전입과 같은 편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특정 학군의 학교에 입학한 사례들을 경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경제적 지위의 획득 및 재생산을 위해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손준중, 2004), 거주지의 교육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김경근·장희진, 2005), 교육적 분리와 거주지 분리의 밀접성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교육 환경들을 조성, 활용한다. 즉 거주지(혹은 학교소재지)를 위시하여 지역 공간은 교육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한축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2005년, 2009년 서울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수능성적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강남3구의 수능성적이 공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국어, 영어, 수학 중 가장 격차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과목이 영어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과목이 영어임을 고려해볼 때 공간적 교육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영어과목의 불평등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책무는 정부당국에 있다고 하겠다. 성적이 좋은 강남구와 그렇지 않은 금천구의 구 간 내 수능성적 표준편차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교육 수준이 구 간 표준편차의 차이를 없애는데 이바지하였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정재훈·김경민, 2014).

서울대 신입생 중 서울 지역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부유층 지역의 고교 출신 비율이 무려 50.6%에 이른다. 이들 지역의 사교육은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가’ 지역으로 분류되는 이들 지역은 읍면 도서지역에 비해 과외비를 3배 이상 쓰고 있으며 과외 액수의 증가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진학률과 과외비 규모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 공교육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무력하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대다수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학생 집

단 간의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기제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발달이나 인성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김천기, 2001).

교육중단연구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입학사정관제와 사교육비와의 관계, 또 입학사정관대 지원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부모의 교육기대가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내재적 동기가 높고, 학교 활동에 더 많이 참여했을수록, 읍면지역의 학생이 타지역학생보다, 한부모 가정 학생들이 지원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더 컸다. 둘째, 학생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부모변인보다 학생의 내재적 동기와 학교 활동 관련 변수들의 효과가 증가하였다(김양분 외, 2011).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과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를 살펴보면, OLS와 음이항 모형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토빗모형에서는 읍면지역의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비계획자들보다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며, 서울과 중소도시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역전되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지역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지원계획자가 비계획자보다 오히려 사교육비를 더 적게 지출하며, 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지원계획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읍면지역의 입학사정관제 지원계획자가 타 지역의 지원계획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입시 전략을 취하여 그것이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읍면 지역에서는 학교활동보다 내신이나 수능점수를 높여서 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전략을 취하는 학생들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김양분 외, 2011).

V. 사교육 시장과 교육불평등

1. 사교육 시장의 팽창

한국적 생산체제에서 교육불평등의 또 다른 축은 사교육 시장이다. 앞서 우리는 김영삼정권 이후 시장의 메카니즘에 의한 사회변화를 추진하는 세력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가주도적 경제발전의 한계에 봉착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적 교육정책에 대한 한계 역시 도처에서 노정되었다. 특히 한국교육의 획일성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있는 진영에서 평준화제도는 대표적인 비판의 대상이었다(박세일 외 2002). 그들은 그간의 평준화정책이 하향평준화정책으로 수월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교육상품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중상계급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교육 시장은 음양으로 확대일로에 놓이게 되었다.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사교육비의 지출규모와 사교육의 공급규모로 추산할 수 있다. OECD의 교육비 조사에 의하면 공교육비를 국가와 공공단체 등이 부담하는 교육비라는 개념에서 공부담 교육비로 표현하고, 사교육비는 학부모 또는 민간이 부담하는 교육비로서 사부담 교육비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사부담 교육비에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로서 입학금, 등록금 등 사부담 공교육비와 과외비 등의 사부담 사교육비를 포함한 비용이다. 이 개념정의에 의하면 사교육비란 사부담사교육비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사교육이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경제적 대가를 치루고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통계청, 2015).

사교육에 대한 역대정부의 방침은 크게 금지에서 자유화로의 방향을 밟아왔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치가 이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전두환정권 시절인 1980년에 진행된 7.30 교육개혁조치는 사교육의 전면

금지라는 역대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사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사교육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조치로 인해 사교육은 불법화되었기에 사교육비에 대한 공식적 통계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물론 그럼에도 암암리에 고가의 비밀과외가 있었으나 현재 비교가 가능한 통계치로는 잘 포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남기곤, 2008).

노무현 정권 시기인 2000년 4월 27일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 판결에 의해 사교육은 더 이상 불법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다. 위헌판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교육을 전면 자유화할 경우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차별 최소화, 그리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 방지를 위해 과외금지가 정당화 될 수도 있으나 개인의 교육선택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결하였다(헌법재판소, 2000) 이 판결을 기점으로 사교육비는 급격히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다(김영철 외, 2007; 이종재, 2010).

류정순·이순형(1998)은 1982년부터 1996년 동안 수집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추세분석을 하였다. 소득수준을 4개의 분위로 구분하여 각 분위별 사교육비지출액(명목가치)과 그 증가비율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소득 1/4계층(상층)의 지출액은 하위4/4분위에 비하여 1982년 8배에서 1988년에 5배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배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4분위의 증가세는 1988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89년에 크게 증가하고 그 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993년에는 308,842원에 이르렀다. 1989년은 과외완화 조치가 있었던 다음 해였다. 과외 과외를 막기 위하여 1993년에 대학수능시험이 실시되었는데 이때부터 월평균 사교육비가 모든 계층에 공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2년에 상층의 사교육비 지출과 해외유학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사교육비의 전 계층에서의 증가는 대학입시전형의 변화와 사교육정책에 대하여 모든 계층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이다. 전 계층에 걸친 사교육비의 증가는 지위경쟁의 주요 통로인 수능에서의 고득점을 위한 투자경쟁이 심화된 결과이다. 1993년 이후에는 가계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의 비율이 전 계층에서 10%이상을 지출하는 현상을 보여 ‘뱀새가 황새 쫓는 격’이 되고 있다. 학력획득을 위한 모방적 투자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게 되면 교육시장에서의 교육투자의 효과가 약화된다. 하층은 상층계층과 마찬가지로 고소득을 기

대하며 학력을 높이거나 시장에서의 학력의 가치는 점차 약화되어 이들의 기대는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사교육비지출 증가율의 격차가 계층 간 급격하게 발생하는 현상은 교육기회가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어 시장에서의 교육격차가 급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교육비지출이 소비의 불평등보다 높은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투입이 없는 한 사교육 시장에서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교육이 허용된 상황 하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의 경쟁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단순한 대학졸업장의 시장가치가 약화되고 어떤 대학을 졸업하였는가라는 학벌에 따른 취업과 승진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대학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특정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사교육 열풍이 거세져갔다. 고등교육 팽창은 학연, 지연 등 연줄망 중심의 사회구조와 맞물려 소위 명문대 졸업자에 대한 선별적 프리미엄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다시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을 가열시키는 입시과열 현상을 낳게 하였다. 조기유학 또는 소위 명문대 입학을 둘러싼 입시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사교육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부담률의 규모,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적 시장참여라는 성격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공교육팽창은 형식적인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이들 간의 관계는 한국사회의 교육불평등의 이중적 통로의 하나인 사교육 시장의 팽창에 의하여 심각하게 왜곡된다. 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OECD 국가 중 공교육에 대한 사부담율이 가장 높은 현실에서 저소득층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직 어렵기만하다. 우리나라의 공교육 투자(GDP 대비 7.2%) 중 약 39%(GDP의 2.8%)를 민간 부문(주로 가계)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부담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부담(GDP의 2.3%) 중 약 78%를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2013년 OECD에서 발행한 Education at a Glance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공교육비율(=(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분석에 의하면, 민간부담(1.3%)은 정부부담(0.9%)에 비하여 높고, OECD 국가의 각각의 평균 1.1%과 0.5%에 비해 민간부담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학생 사교육비 총액 규모 및 학생수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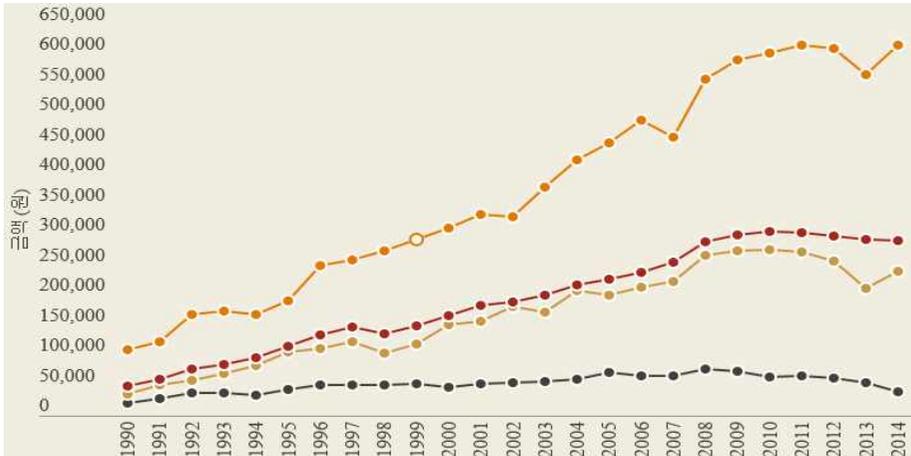
통계청에 의해 지난 2017년 3월에 발표된 사교육비조사의 결과(통계청, 2017)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 21.6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 경향을 보여왔는데, 그 이유는 주로 학생수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¹²⁾. 그러나 2016년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고 이를 학생수와 총액을 고려하여 비교해보면 학생 1인당 지출액이 2009년의 평균 29만원에서 약 31만원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용의 증가와 함께 불평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것은 아래의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사교육에의 참여율과 사교육비에 있어 많은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 비하여 7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지출 사교육비는 8.8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 연구기관에 따라 사교육비에 대한 추정치도 다른데, 예를 들어 2007년 통계청자료에는 20조 원이었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소(2007)의 추산에 의하면 국내 사교육 시장 총규모는 최대 명목 GDP의 3.95%에 해당하는 3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2007년 정부의 교육 예산 총액인 31조원보다도 많은 것이다.



[그림 11] 가구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치열한 입시경쟁과 그 과정에서의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격차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사교육비의 지출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대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우 41만 1천원으로 초졸 이하 가구주 가구의 15만 3천원보다 2.7배 더 높으며, 고졸 가구주 가구의 26만 4천원보다도 1.6배 더 높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사교육비 지출액은 큰 차이를 나타내며, 이러한 사교육비 차이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과 어우러져 실질적인 학력격차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교육제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교육비의 민간 부담 및 사교육비의 지출의 불평등은 교육비 부담능력의 차이에 따른 계층 간 교육불평등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Park & Kim, 2014). 아래 가계소득별 교육비 지출 추이 그림은 1990년 이후 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의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의 지출은 2009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림 12] 가계소득별 교육비 지출 추이(1990-2014)

(출처: 가계동향조사, 2인 이상 명목소득기준)

사교육비지출과 학업성취도와 간에도 정적인 관계가 발견된다. 2011년 자료에 의하면(교육과학부, 2011), 성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지출이 많고 참여율 역시 높았다. 상위 10% 이내의 집단이 지출한 금액(참여율)은 31.7만원(85.3%), 10-30%군은 28.2만원(83.9%), 31-60%군은 23.3만원(73.8%), 61-80%군은 18.2만원(59.8%) 그리고 하위 20%군은 13.6만원(48.8%)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 또한 성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성적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았다. 국제비교를 통해보았을 때도 이와 같은 경향성은 확인된다. 대체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국가에서 높은 사교육 참여비율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양정호(2005)가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만든 표에 따르면 TIMSS-R에서 측정된 성적은 싱가포르(604점), 한국(587), 홍콩(582), 일본(579) 순으로 높는데 이 국가들의 사교육참여율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본이 61.9%, 싱가포르 54.8%, 홍콩 47.5%, 그리고 한국이 41.0% 순으로 학생들의 방과후 사교육 참여 비율이 높은 반면에, 낮은 학업성적을 보이는 미국과 영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비율은 각각 33.2%와 13.1%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GDP대비 총 교육비비율이 가장 높으나 교육투자에 대한 효율성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로 통계청에서 수집된 도시가계분석을 통한 추세분석연구(류정순 ·

이순형, 1998; 양정호, 2013)들에 의하면, 1982년 이후 소득분위별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지출의 격차는 최근에 이를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교육비의 지출변동은 정부의 사교육금지조치(1980년), 과외완화 조치(1988년), 과열과외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3년에 대학수능시험도입 및 위헌판결에 따른 자유화조치(2000년)와 같은 제도적 변화에 따라 요동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교육 시장의 자유화와 팽창 역시 국가의 정책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정부에서 사교육의 폐해를 완화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책들을 시행하여왔으나 많은 경험적 자료들은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교육비 총액의 증가는 사교육을 통한 지위경쟁이 계급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교육비가 소득분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며 최상위분위와 최하위분위 사이에 이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소득의 차이를 점수의 차이로 전환하려는 중상계급의 집요한 차별화전략의 결과이다. 소비하는 교육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격차를 벌이려는 이 전략은 사교육이 일반화되어가는 시장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이다. 사교육상품의 대량소비현상이 벌어지는 시장에서 고품질상품(예를 들어, 쪽집게 과외)의 구입을 통하여 계급적 차이를 드러내고 정당화시키려는 계급경쟁의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많은 통계적 지표들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사설 학원을 활용하여 차별적인 선행학습과 보습학습을 행하고 학교 내에서의 유리한 평가와 수능에서의 고득점획득 및 다양화한 입학전형에의 면밀한 사전준비라는 기제를 통하여 교육격차를 낳게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2. 사교육과 부모의 계급 간의 관계: 불평등의 생성

위에서 제시된 자료는 사교육의 실태와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적 증거들이었다. 그러나 이 자료의 제시만으로는 사교육 시장에서 생성되는 불평등을 만족스럽게 검증할 수는 없다. 기존의 자료나 연구가 주로 거시적

추세와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기술(description)에 치중한 것들이다.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계급에 따른 사교육참여율과 지출비용과 교육성과와의 연관성에 관한 다변량분석을 통해서만이 인과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경험자료를 다변량통계기법에 의해 분석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사교육시장과 불평등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본 주제와 관련지어 이전의 사교육 또는 사교육비 연구들의 대부분은 실태조사 및 단순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거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시계열적 추세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김홍주·한유경·김현철, 1999). 따라서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 및 사교육 참여 원인 그리고 각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종단적인 분석이나 다변량분석은 2000년경에 시작되어(박도영·박정·김성숙, 2001; 이정환, 2002; 양정호, 2005)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가. 연구의 확인

KISS 등의 자료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추출하고 추출된 자료를 면밀하게 확인한 결과, <교육사회학연구>와 <교육행정학연구>과 같은 주요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20편이 확인되었다. 이 중 14편 정도가 경험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중 2편이 시계열분석 그리고 12편이 다변량분석을 행하였다. 나머지 4편은 이론적 논의나 심리적 분석을 한 연구였으며 전국을 대표할 만한 경험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전체 논문에 관한 정보는 부록에 정리되어있다.

<표 13> 계층과 사교육 그리고 학력격차(학업성취도) 간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적 연구 (학교 유형별)

연구	연도	이용자료	사례수 (명)	주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결과	통계 기법
양정호	2005	노동패널 (2000-2002)	1,767가구	소득수준	사교육비 지출	계층별 차이 중류층의 지출증가율이 높음	HLM

류정순, 이순형	1998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1982-1996)	10,225- 22,102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지출	4/4분위에 비해 상층인 1/4분위의 지출이 8배 정도 많음	집단별 차이
양정호	2013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1982-2012)*	약 9,000가구	소득5분위	사교육비 지출	지출증가 소득분위별 차이 증가	소득분위 별 차이와 정권별 변화
윤유진, 김현철	2016	2013통계청 사교육자료	방과후 19,035 ebs참여 16,076 사교육 19,295	학습참여방 식	학업성취	방과후학교, EBS 참여가 사교육에 비하여 비용효과적	경향점수 매칭, 로지스틱 회귀모형

*도시가계조사(1982-20002), 2003년 가계조사로 명칭변경, 다시 2008년 가계동향조사로 변경.

나. 기존 연구의 분석

양정호(2005)는 2000-2002년 사이의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계층 간에 사교육비 투자 및 투자 증가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른 모든 가구배경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주관적인 가구주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자본정도가 사교육비 지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층과 비교할 때 중상류층과 중류층에 속한 가구의 2000년도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친척 중의 고위층여부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이 있는 경우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부정적 태도보다는 교육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유도하는데 활용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교육비의 지출이 더 높은 학업성취도라는 중상계층의 의도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이은우(2006)는 학생들의 성적은 사교육비와 가족 배경(부모의 소득, 학력, 그리고 직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교육비에 의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평균성적차이는 32.9%로 나타났고, 고소득층과 중소득층과의 평균성적차이의 9.4%로 나타났으며,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평균 성적차이가 17.5%로 나타났다. 특정 교과목에 대한 사교육효과

에 관한 연구들은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적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효과는 수학과목에는 공히 나타나는데 영어와 국어와 같은 어학과목에는 제한적인 효과가 있거나 없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이 발견된다(아래 <표 14>참조). 상급학교의 진학에 있어 수학과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아래 표는 교과목별, 집단별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변량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사교육시간을 무한정 늘인다고 하여 학업성적이 그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교육의 한계 효과는 성적집단별로 차이가 있는데 하위분위는 4.9시간이고 상위분위는 2시간대가 정점을 이룬다는 발견이다.

<표 14> 교과별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결과

연구(연도)	조사대상	수학	영어	국어	비고
한대동 · 성병창 · 길임주 (2001)	고2	영향없음			
양정호 · 김경근(2003)	중2	긍정적 영향			HLM
상경아 · 백순근(2005)	서울고등학생	긍정적 영향			
상경아(2006)	서울고등학생	긍정적 영향			HLM
김진영(2007)	중 2	긍정적 영향			
한수경 · 박재범 · 손형국 · 양정호(2015)	고등학생	긍정적 영향			
오영수 · 윤정식(2003)	대구 고2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김성연(2013)	중 1	긍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이정환(2002)	서울 중학생	영향없음	긍정적 영향	영향없음	
이명현 · 김진영 · 송창용 (2005)	인문계고	긍정적 영향	영향없음	영향없음	
김지하 · 김정은(2009)	고등학생	긍정적 영향	영향없음	영향없음	
이정연(2011)	중학생	긍정적 영향 (최상위집단)	긍정적 영향 (최상위집단)	영향없음	

※ 출처: 윤유진 · 김현철(2016)에서 재인용.

최근 이러한 사교육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중학교에 비교할 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등장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다른 대안적 학습방법을 택한 경우에 비하여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중학교에서의 효과가 더 크고 고등학교에서는 줄어든다는 분석들이 제기되는 것이다. 아울러 고비용의 사교육방식에 비하여 값싼 방식으로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과후학교나 EBS참여가 비용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윤유진·김현철(2016)의 연구는 2013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방식(사교육, 방과후학교, EBS참여)에 따른 학습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방식의 선택이 학생들의 배경에 따라 다르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향점수매칭 분석을 선택하였고, 방과후학교 19,035명, EBS 16,076명, 사교육 19,295명의 표본이 분석에 사용하여 학습방식에 따른 학업성취효과의 차이를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과후학교 및 EBS 학업성취효과가 사교육 효과에 못지않은 비용효과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학업성취 효과는 사교육이 6.82%, EBS가 5.04%, 방과후학교가 4.8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3년 통계청 조사에서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23.9천원, 방과후학교 비용은 3.2천원 그리고 EBS 비용은 0.2천원임을 고려하였을 때, 그 효과가 무시할 수 없었다고 보고한다. 특히 일반계고등학교의 학업성취효과의 경우 방과후학교 (7.91%), EBS(6.09%), 사교육(4.18%)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교급에서는 사교육보다 방과후학교와 EBS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교육의 참여효과가 중학교에서 높고 방과후학교의 참여 효과가 고등학교급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는 박현정 등(2011)이나 변수용 등(2011)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박현정 등(201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입시준비가 고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에서 사교육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하고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사교육이 아닌 방과후학교나 EBS를 통해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변수용 등(2011)의 연구에서도 다른 학교급보다 중학교급에서 방과후학교보다는 사교육 효과

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결과는 고등학교급에서 방과후학교와 EBS 학업성취효과가 사교육보다 높다는 김진영(2012)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며 방과후학교의 학업향상 효과가 있다는 배상훈 외(2010)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VI. 결론 및 교육정책적 함의

1. 결론

이 연구는 교육불평등에 대한 기존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메타분석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교육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기존연구를 재분석하기 위하여 교육불평등과 연결된 제 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델을 다차원-다관계적 통합모형을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의 대상은 고등학교수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었으며 이 불평등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 제도적 요인과 시장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표준화에서 다원화로 요약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의 추이를 추적하고 그 특징과 성격을 추출하였다. 시장적 요인에서는 공교육이 사교육화해가는 양상을 공교육에 대한 사교육 시장의 비대화와 각 가정의 사교육부담률의 증가추이를 추적하였다.

교육의 장은 제한된 지위의 배타적 획득을 향한 계급 간의 경쟁의 장이기도하다. 특히 성취사회라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경쟁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선발은 교육의 주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중상층계급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층계급에 비하여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능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어 이 경쟁의 장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있다. 학부모와 학생의 사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양할 수 있으나 사교육 시장의 허용과 팽창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를 통하여 국가의 교육정책에 보다 정교하게 이해관계의 반영을 요구해왔다. 또한 이들은 다양화와 수월성을 기치로 삼는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이의 지지자를 활용하여 평준화정책을 점차 와해시켜왔으며 국가는 이들의 주장을 대체로 반영해왔다. 중상계급은 사교육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국가에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으며 그들의 차별적 경제능력을 이용하여 유리한 교육상품을 구매하여 학교 내의 평가와 입시에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하층계급은 교육이라는 지위경쟁에 필요한 개인적 자원도 부

족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로서의 교육복지가 빈약한 한국의 생산체제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그 결과 학업성취도와 대학진학과 같은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뒤처지게 되어 교육불평등 폐해의 피해자가 된다. 궁극적으로, 삶의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는 계급경쟁의 상황에서 하층계급은 반복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학교와 노동시장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빈곤의 악순환과 사회계급적 지위의 세습화라는 숙명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 성적에 의한 선발과정으로서의 교육은 단지 차별적 계급지위를 정당화시키는 기제로서만 기능하게 된다. 그 결과가 목하 진행 중인 교육불평등의 심화현상이다. 이에 대한 본 연구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교육불평등은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이중기제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국가에 의하여 생성되는 교육불평등은 교육복지 지출의 한계, 공교육에 대한 사교육비의 높은 부담률, 고등학교 다양화정책에 의하여 주로 생성된다. 열악한 교육복지는 하층계급의 교육기회를 제한시킴으로써 교육불평등을 기본적으로 생성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한국은 OECD국가들에 비하여 공교육에 대한 사교육비의 부담률이 매우 큰 국가이다.

우리는 현재의 교육불평등이 시장과 국가에 의하여 이중적인 방식으로 심화되어왔음을 경험적 증거를 다시 검토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60여 년 간 경제성장과 함께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은 급속하게 높아져왔다. 중등학교부터 일어나는 소수 특권주의(elitism)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제도로서 권위적 발전주의국가에 의하여 채택된 평준화제도는 나름대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기초적 교양을 갖춘 산업인력의 원만한 공급에 일정정도 기능적으로 작용하여왔고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교육을 통한 상향적 사회이동이 가능한 시점도 있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은 심각하게 폐색되어 현재는 계급불평등과 교육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불평등의 심화는 교육제도 그 자체와 엄청나게 팽창한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과 시장의 확산은 제한된 지위의 획득을 위한 사회계급의 경쟁의 산물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은 건전한 시민과 생

산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육성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 혹은 제거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핵심적 제도라는 원론적 규범을 상기할 때, 기존의 정부가 취해온 교육정책의 입장은 획기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탈평준화정책(다양화정책)으로의 전환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학교교육제도는 학생의 선발과 평가, 교육내용과 과정의 통일성 및 교육재정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정도에 따라 그 제도를 표준화형과 분화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에 의해 표준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관련된 규범이 정해지고 자원이 제공되는 것을 표준화형 제도이고 탈중앙화된(decentralized) 조직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우선하는 제도를 분화형제도이다. 최근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제도는 표준화(평준화)제도의 와해와 다양성과 자율성을 모토로 하는 분화형제도로의 지향이라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권별 고교교육정책과 그 성격을 검토한 결과, 김영삼정부의 5.31조치 이후 최근의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의 교육정책은 평준화정책의 와해를 통하여 다양성과 자율성 및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으로의 전환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목고의 설립과 자율고 설립의 확대, 입학사정관제도 제도의 도입, 수시전형의 확대를 통한 정시전형의 축소와 같은 정책적 변화가 다양화의 예이다.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독특한 계급구조가 새롭게 그 형태를 드러내왔다. 상층계급의 안정적 세습의 욕구가 반영되어 제도화된 것이 바로 특목고와 자율고이며 이 학교의 출신들이 다양한 입시전형을 통해 최상위대학에 용이하게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채택된 것이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인 것이다. 대학 전형제도를 다양화시키고 복잡화시킴으로써 대학진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는 모호화전략을 통하여 그 들은 단계적으로 제한적 지위를 독과점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으로서 일련의 상급학교로의 차별적 진입제도를 완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서 분석해왔듯이 수많은 거시적 자료와 경험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교육의 격차와 불평등의 심화이다. 이러한 평준화로부터 다양화로 분화를 향한 정책적 이동은 절대 다수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교육의 핵심적 책무의 방기를 통하여 진행되었. 그간 교육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수 학생에게 수월성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책무라는 듯 탈평준화 정책을 채택해왔다. 그 결

과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된 교육불평등이다.

특목고와 자율고 신설과 전환의 허용은 일반고등학교를 황폐하게 만들어 왔다. 또한 사설과외의 허용은 공교육의 시장화를 촉진하여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습성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하였다. 사교육 시장은 제한된 특권적 지위의 획득을 향한 계급 간의 경쟁의 장으로서 입시전쟁터로 변모하게 되어 교육 본연의 목표는 표류해왔다. 특히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의 차등적 지불의 허용은 공교육의 공정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 사교육을 통하여 학교시험과 대입수학능력고사에서 높은 점수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학습과 반복학습이 만연하는 현재의 사교육 시장과 공교육체제의 결합양식은 소수의 성공한 학생들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장치’이다. 계급경쟁에서 승리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 장치는 만족스러운 것일 수 있으나 다수의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자들에게 현재의 교육체제는 매우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따라서 매우 불만족스러운 장치인 것이다. 다양성은 소수를 위한 다양성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다양성이 되어야 한다.

○ 교육개혁은 중상층의 지배전략을 지원한 정책이었다.

그간 교육 개혁의 미명아래 행해진 많은 탈평준화를 지향한 정책들이 명목상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직접적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김영삼정부를 필두로 한 보수 정부는 자율성의 신장과 선택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평준화정책을 급속하게 와해시켜왔다. 그러한 정책의 중단기적 결과는 소수의 특목고와 자율고중심의 교육정책으로의 선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중상층의 지위유지전략을 지원하면서 기존의 교육불평등을 최대한으로 유지해오는 전략을 채택하여 왔다. 교육팽창으로 이 전략이 더 이상 효용을 잃게 되었을 때 질적 차별화의 수단을 강구하는 효과적인 기득권 유지전략으로의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계급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차이가 발생하였다. 상층계급(자본가계급과 중간계급)에 속한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노동계급출신에 비교해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업성취도는 학교 간 차이에 의하여 주로 발생한다.

한국사회의 학교제도에서 발생하는 교육불평등의 양상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때까지 잘 드러나지 않다가 고등학교에 이르러서 학교 간 분리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유방란 등(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학업성취도의 분해는 이를 잘 확인해주었다. 표준화정책을 버리고 다양화와 같은 제도적 분화를 채택한 국가에서 불평등이 증가하고 그 제도에서는 특히 하층계급 학생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비교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의 성격과 불평등생성 메카니즘을 파악할 수 있었다. 평준화정책 이후의 고등학교에 관한 정책의 변화는 다양성과 자율성 그리고 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능력에 의한 상급학교로의 배치는 능력주의라는 외피로 정당화되어왔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연구가 반복적으로 밝혀왔듯이 학교성적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시장에서의 선행학습과 반복학습을 통하여 성취되어왔다.

고등학교제도의 다양화를 추구한 결과, 2011년 이후 특목고의 수가 120개에서 2016년 152개로 증가하였으며, 자율고도 각각 109개교에서 159개로 급증하였다. 특목고와 자율고에 주어진 학생들의 우선선발권은 일반계고등학교로부터 우수한 학생을 고갈시키는 효과를 낳았으며 이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대학진학률의 차이로 이어졌다. 본 연구진이 활용한 자료(오신환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소위 ‘SKY’ 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진학률에 있어 학교 유형별로 많은 차이가 발견되었다. 세 대학의 정원 내 일반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에 71.9%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6년에는 51.3%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비교할 때, 특수목적고(과학고,외고,국제고) 졸업생은 동년 각각 23.2%에서 15%로 감소하였다. 이는 단순히 보면 특목고 졸업생의 비중이 줄어든 것 같으나 실제로는 2011년 도입된 자율고출신들이 진학하기 시작한 2013년도부터 동대학에의 진학률이 17.2%에서 2016년 25.9로 급증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상위대학의 진학에 특목고와 자율고의 효과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 두 유형 고등학교 출신자들의 상기 대학교 입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0.9%에 이르고 있다. 이들 학교의 수가 2016년 현재 특목고

152개, 자율고 159개로 일반고 1,545개교의 약 1/5에 해당하나 SKY대학 입학률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입학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의 분리정도가 클수록, 다시 말해서 학교가 다양화되어 표준화정책과 유리되면 될수록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일반계고등학교와 비교할 때 특목고와 자율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최초의 학업능력과 부모의 SES(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성취도의 분산을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으로 분할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때는 미미하던 학교 간 차이가 고등학교에에서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학교 유형에 따른 효과의 크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의 크기보다 더 강한 것을 발견하여 보고하고 있다.

2. 교육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 행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에 입각하여 몇 가지 기존의 교육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교육에서 수월성의 추구도도 무시할 수 없는 정책적 지향점이나 기본적으로 기회평등의 제공이 교육정책의 핵심이 되어야한다, 둘째, 국가재정의 투입을 통하여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야한다. 셋째, 기회평등의 제고를 위해서는 뒤쳐진 학생에 대한 보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특목고의 도입과 같은 정책 시행의 목적에 부합한 제도운영이 요구된다. 다섯째, 사교육 시장의 효과에 비견할 만한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패널자료의 활용을 위한 제언이다.

○ 수월성이나 다양성의 보장보다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의 책무가 우선이다.

그간 학교제도는 교육기회와 과정과 결과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보다는 수월성과 다양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담론에 매몰된 정책을 시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공정성과 평등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월

성과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월성과 다양성을 위하여 평등과 공정을 방기하는 교육정책의 채택은 더 이상 민주주의국가가 나서서 해할 선택은 아닌 것이다. 보다 공정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을 적극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적 책무이다. 단지 시험점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줄을 세워 그들의 배치를 담당하는 것이 교육기관의 책무가 아니다. 그것은 부차적 기능에 불과한 것이다. 이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우선시해야 할 핵심적 역할을 방기한 채 선발과 배치의 정당화에 몰두하는 교육목표는 폐기되어야 한다. 선발과 배치의 과정에서 개인이 얻은 성적이 이후의 모든 사회경제적 기회와 지위를 정당화시켜가는 원샷게임의 심판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만이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의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고등학교를 기점으로 생산되는 대부분의 교육불평등이 부모의 자원에 의하고 또한 계급동결효과의 과정임이 밝혀진 현 시점에서 사회불평등의 해소를 위하여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국가와 교육당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여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교육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고교제도의 제도적 변화를 크게 표준화와 분화(다양화)라는 구분에 의한 분석은 평등성과 효율성에 대한 정책적 균형유지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자율성, 다양성, 수월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정책선택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는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학업성취에 있어 불평등과 효율성은 상호 배제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moran & Mare, 1989; Hanushek & Wößmann, 2005; Micklewright & Schnepf, 2007; Wößmann, 2008). 평균적으로 효율적 학습을 최대화시키려 만들어진 교육제도는 학업성취의 불평등 해소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서구의 연구결과는 최신 한 국사회에 만연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 국가재정의 투입으로 교육기회를 개선할 수 있다.

국가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학교재원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의 중요성은 한 국가의 평균 국민소득수준에 따라

학교에 자원을 더 투자하였을 때, 학업성취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질문과 답은 공적 재원의 투입을 통하여 교육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책선택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다.

학교에 대한 재정투입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효과가 바로 Heyneman and Loxley effect(1983)이다. 이들에 의하면 저개발 국가의 경우 학습교재와 교사양성에 대한 재정투입은 학습효과에 매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다고 주장하고 있다. Gamoran(2006) 등의 연구는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학교의 자원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하려고 시도하였다. 우선 1960년대 Coleman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공립학교에 관한 것인데, 이를 통한 분석에서 콜만 등은 학업성취도는 학교가 보유한 자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학생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 다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다양한 자원은 학업성취도의 변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으나 그 정도가 매우 적음을 통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콜만과 호퍼(1987)에 의하여 1980년대에 발표된 연구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포함한 표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하여 학업성취도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학교 유형, 자원의 차이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그들의 초기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 즉, 학교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학교 유형은 다른 학교에 비교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키고 있어 학교가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 **능력주의는 선발과정만을 정당화한다: 뒤쳐진 학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능력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학교를 단지 인지능력점수의 우열로 학생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임을 정당화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능력주의에 기초한 학교는 뒤쳐진 학생들을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 방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정작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고통 받는 학생들을

보듬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학업에 미치는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지적하고 있다. 이 발견을 뒤집어보면 부모의 경제능력이 약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많은 불리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열악한 교육여건에 처한 학생들의 학습조건을 개선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켜 공정한 기회를 모든 이에게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책무이다.

○ **특목고의 최초 설립목표에 충실하여야 한다.**

다양화를 지향한 고등학교 자율화정책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고교 유형을 허용한 고교 다양화 정책의 개선을 위한 원칙이 필요하다. 외국 및 국제고에 진학함으로써 영어와 국어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효과와, 과학고에 진학함으로써 수학의 학업성취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특성화가 교육기회의 평등과 수월성의 동시적 성취라는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지를 판단해보아야 한다. 또한 이 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학업성취의 추구가 학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리고 자사고의 효과성 평가에 있어 주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자사고가 학업성취가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학생들만 모아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기관화가 되어 그 결과로 일반고의 잉여화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적으로 얻는 것보다 공적으로 잃는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사고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부합하는 평가준거를 개발하여 자사고의 성과를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사교육 시장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는 비용효율적인 대안적 학습방법을 확대해야한다.**

사교육 시장은 부모의 자원에 따라 교육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입전형이 다양화, 세분화될수록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상품의 종류와 수량이 증가하고 이 상품의 구매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리고 그 상품화된 교육품목들은 학교에서의 평가와 대학입학의 유리한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억제하고 시민교육과 교육 기회평등을 위해서는 고교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줄 세우는 것을 교육의 제일 목적인양 하는 경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중단기적으로는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 장치를 모색하는 것도 요구된다. 예컨대,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일반고 및 자공고의 교과관련 방과후학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고교유형별 일반고 진학생 대비 학업향상 효과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해당학생의 교과관련 방과후학교 참여정도가 높은 외고나 자공고에서 성적향상 효과가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EBS참여와 같은 대안적 학습방식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도 의미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EBS 참여학생이 비참여학생보다 학업성취가 높다(박현정 외, 2013). 또한 방과후학교와 사교육의 상대적 학업성취 효율성에 있어서 방과후학교의 효과가 사교육 효과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고등학교급에서 학업성취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교육의 학업성취효과와 방과후학교 또는 EBS학업성취 효과에 있어서 특별한 우열관계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김희삼(2011)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입비용당 성적 상승효과와 참여시간당 성적 상승효과가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가 높다는 연구는 방과후학교의 학업성취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학업성취 수준을 고려한다면 교과관련 방과후학교의 활성화가 상·하위 학생 모두에게 학업성취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고나 자공고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교육비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다양한 교과관련 방과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수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고등학교의 탈서열화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한 선발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에 따른 진학 고등학교 유형의 분화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부터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율고 도입 이후 자사고와 자공고 및 일반고 입학생의 초·중학교 성취도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자율고 정책의 확대는 일반고 및 자공고 학생들의 학습의욕 저하, 동기 상실, 동

료 간의 상호 강화효과 약화 등으로 이어져 고등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학교간 성취도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설립 목적에 있어 일반고와의 차별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자사고의 학생 선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 **패널자료와 같은 교육관련 자료를 보다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를 통해 정책이 산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관련 자료들의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수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교육과 노동관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본 조사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비교 가능한 자료들이 수집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패널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ELS:2005-)>,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1998-)>,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KEEP 2004-)>조사,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200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패널조사(2004-)> 및 서울시교육청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교육정책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LS2010)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의 연구시점과 반복년수 및 주요 연구관심에 있어서 각각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청소년들의 가정, 교육, 직업 등에 대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불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하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는 2005년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대상으로 하여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성장과 발달,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 교육을 조사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대학 진학과 초기 직업획득 과정을만 30세까지 추적 조사하는 국가 수준의 종단적 조사연구이다.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KEEP)조사는 200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 총 6,000명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조사이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의 가구와 학교(담임, 학교행정가)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는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구성원과 그 배경

을 함께 고려하고,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 환경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 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교육실태, 교육효과,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관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는 자료이다.

그 외에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가 199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의 경우 2002년부터 조사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패널조사’는 2004년부터 시행되어, 청소년들의 잠재적 진로설정 및 준비, 일탈행동, 여가 참여 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나 청년패널조사의 경우 직업과 임금, 노동과 같은 노동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교육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는 직업 및 노동시장으로의 연결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위 자료들은 장기적 추세를 연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들이다. 패널 조사는 시계열 자료의 성격과 횡단면 자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사 방법이다. 이는 단순한 시계열 자료나 단면 자료에 비해 패널 데이터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패널 데이터의 장점으로는 추정의 효율성 (efficiency) 향상, 설명변수간의 공선성(collinearity) 발생 가능성 축소, 추정량의 편의(bias) 감소, 정책의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 가능, 상태간의 변이과정 (transition between states) 이해 가능, 특정기간효과(period specific effect)나 특정연령효과(age specific effect) 및 동시태생효과(cohort effect)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

해외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국가에 의해 이미 1970년대부터 다양한 주제의 패널조사가 시행되어 그 연구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였다. 특히 미국 패널조사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패널 조사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노동통계국(BLS)과 국립교육통계센터(NCES)가 있으며, 특히 국립교육통계센터의 패널 조사는 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한 교육관련 패널 조사이다. 대표적인 조사로는 NLS-72, HS&B, NELS:88, ELS:2002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청소년들의 성장, 진로, 학업성취, 취업으로의 이행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제기구인 OECD에서도 가입국가를 대상으로 15세 이상 학생의 교육, 취업관련

내용에 대한 패널 조사사업(PISA:1988-) 이 3년을 주기로 추진 중에 있다.

위에서 언급된 자료들은 각각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집되어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와 분석의 한계점도 또한 발견된다. 개별화된 분석 중심으로 총체적 시각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 자료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행하여 그 결과를 통합하여 정책적 방향의 선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패널조사는 고비용 상품이다. 기관마다 특징 없이 반복되는 조사의 남발을 막아야 하며 수집된 자료 간 통합적 활용을 가능하게 할 조사설계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높은 조사비용을 고려할 때, 연구자나 학자들로 하여금 자료가 가진 가치를 재조명하도록 할 것이며 조사의 결과가 가진 개별적 분석의 함의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자료에 대한 연계분석을 통하여 개별 연구에서 얻은 경험적 결론들을 통합하여 총체적 인식과 판단으로 정교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자료 활용에 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기존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평가와 이 평가에 기초한 정책의 개선이 뒤따라야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불평등분석을 위한 통합적 모형은 생산체제-계급구조-교육제도-시장-학교조직과 교사-학생 개인의 학업동기를 아우르고자 고안된 모형이다. 이 모형이 교육불평등 현상분석 및 정책적 시야의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는 추후의 후속적 연구를 통하여 보다 견실하게 확인될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보다 정교화된 이론적 논의로의 발전과 확장된 적용을 희망해 본다. 연구진의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기존의 논의와 연구와의 연관 속에서 보다 면밀한 쟁론화를 기대한다. 또한 불평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한 표의 일부 칸만을 우리는 채울 수 있었다. 아래표의 대부분의 칸은 비워진 채로 남겨져 있다. 후속연구는 이 빈칸을 마저 채워가면서 이론적 정교화와 함께 정책적 평가와 대안의 모색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표 15>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교육 불평등 간의 관계분석의 결과표

교육제도(정책)	학교성적 격차	수능성적 격차	대학입학 격차	학교적응	졸업률	취업률
표준화(평준화)	-					
분화						
능력반제도						
계열화						
특목고제						
자율형고등학교						
수시제도의 확대						
입학사정관제						
내신성적(종평)						

예상되는 관계유형: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양방향적 영향, ? 불분명

참고문헌

- 강태중. (2015). 한국 고등학교 체제 논의의 양상과 특질. *교육연구와 실천*, 81, 1-25.
- 김경근, 변수용. (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 1-27.
- 김광익, 김대일, 서이종, & 이창용. (2004).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한국사회과학*, 25, 3-187.
- 김두환. (2008). 부모와 자녀의 사회적 관계와 대학진학 포부 및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8, 29-53.
- 김문조. (2008). 한국사회의 양극화: 97년 외환위기와 사회불평등. 집문당.
- 김병성. (1984). 학교학습풍토의 학업성취. 교육과학사.
- 김성훈, 김안나. (2009).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비교연구: 특목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9, 47-61.
- 김안나. (2003). 대학입학 수능 성적 분포의 변화추이를 통해 본 고등교육의 서열화 구조. *교육사회학 연구*, 13(1), 191-214.
- 김양분 외. (2011).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 공교육 내실화에 기반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 효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4.
- 김영철, 김미숙, 전은희, 박종현, & 손정숙. (2007). 대한민국 교육정책사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영화. (2002). 교육 평등과 불평등. *교육비평*, (7), 82-95.
- 김위정. (2012). 계층 간 학력 격차의 변화: 학교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3), 49-76.
- 김위정, 김양분. (2013). 대학진학에 대한 가정배경의 누적적 매개 효과 분석. *한국사회학*, 47(4), 263-302.
- 김위정, 남궁지영. (2014). 자율형 공 사립 고등학교의 성과분석. *교육평가연구*, 27(2).
- 김준엽, 시기자, & 박인용. (2016). 경향점수 매칭을 활용한 고등학교 유형별

- 학교 효과. *교육학연구*, 54(1).
- 김진영, 오준범. (2015). 패널 자료를 통해 본 사교육의 장기적 효과.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3.
- 김천기. (2001). 한국 사회적 맥락에서 본 수준별 교육과정 -불평등 재생산 기제-. *교육사회학연구*, 11(3), 39-56.
- 김천기. (2009). 이명박정부의 공교육정책 지배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교육부실담론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9(1), 81-102.
- 김태호. (2012). 한국 사회의 학력과 계급 재생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907-925.
- 김홍주, 한유경, & 김현철. (1999). 한국 학생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변동추세. *교육학연구*, 37(4), 307-328.
- 남기곤. (2008). 사교육시간과 학업성적과의 관련성: PISA 자료를 이용한 국제 비교 분석. *한국경제학보 (구 연세경제연구)*, 15(1), 55-90.
- 류방란, 김성식. (2006).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류정순, 손경애. (1998). IMF 체제 이전과 이후의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 비교.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37-264.
- 문수연. (2016). 교육 불평등 변화 양상 분석: 중간계급 및 코호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0(5), 141-171.
- 민병철, 박소영. (2010).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효과 분석. *한국교육*, 37(1), 147-165.
- 박길성. (2003).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강요된 조정, 갈등적 조율, 고려대 출판부.
- 박도영, 박정, & 김성숙. (2001). 중학교 수학·과학 성취도에 대한 학교-학생 수준 배경변수들의 효과. *교육평가연구*, 14(1), 127-149.
- 박병영, 김미란, 김기현, & 류기락. (2011).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 (IV): 1976-1986 년 출생집단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17.
- 박병진. (2006). 빈곤 혹은 꿈의 빈곤?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포부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2006 후기 한국사회학회 발표논문.
- 박부권 외. (1990).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개선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세일, 우천식, 이주호 편. (2002).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박현정, 신태수, 하여진, & 이준호. (2011).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 패턴과 관련 특성 분석. *교육평가연구*, 24, 291-316.
- 반상진, 임효진, 조영재, & 이진권. (2015). 교육투자 결과로서 학력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교육재정경제연구*, 24, 111-131.
- 방하남, 김기현. (2001).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4), 331-365.
- 방하남, 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방하남, 김기현. (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한국사회학*, 37(4), 31-65.
- 배상훈, 김성식, & 양수경. (2010). 방과후학교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및 학업성취 수준과의 관계. *교육행정학연구*, 28, 55-79.
- 변수용, 김경근. (2008). 한국 고등학생의 교육결과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8, 53-82.
- 변수용, 황여정, & 김경근. (2011). 방과후학교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1, 57-85.
- 상경아, 백순근. (2005). 고등학생의 수학 과외가 학업성취도, 태도,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18, 39-57.
- 상경아. (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과외 효과의 종단적 분석. *한국교육*, 33(1), 153-172.
- 샌델, 마이클. (2010).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역. 김영사.
- 서용희, 주철안. (2009).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집행과정의 영향요인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7(3), 375-400.
- 설동훈. (1994). 한국 노동자들의 세대 간 사회이동 1978-1989.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계급과 한국사회, 한울.
- 성기선, 강태중. (2001).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 자료집.
- 성기선. (200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하향화 현상과의 분산관련성 분석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2(3), 121-135.

- 성기선. (2010).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가정배경의 영향력 변화에 관한 연구-서울시 중학생 1988년과 2007년 비교-. *교육사회학*, 20(3), 83- 103.
- 신광영. (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 안영은, 양성관. (2015). 학교유형이 교사 사기 및 열의 교사지지, 학생수업참여를 매개로 학생의 삶의 질과 미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일반고와 특목고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3(2), 183-212.
- 양재진. (2005). 발전이후 발전주의론: 한국 발전국가의 성장, 위기, 그리고 미래. *한국행정학보*, 39(1), 1-18.
- 양정호, 김경근. (2003).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조직의 효과. *교육사회학연구*, 13, 165-184.
- 양정호. (2004). 평준화와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4(2), 151-174.
- 양정호. (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 121-145.
- 양정호. (2013).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추이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 421-448.
- 오영수, 윤정식. (2003). 일반계 고등학생의 성적결정 요인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2, 33-56.
- 윌리스, 폴. (1989). *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 노동자 자녀들이 노동자가 되기까지*. 김찬호, 김영훈 역. 민맥. (원전은 1981에 출판)
- 윤양배 외. (2008). 능력과 학벌에 대한 일반 국민과 기업 인사담당자의 인식 경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 윤유진, 김현철. (2016). 사교육, 방과후학교, EBS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4, 385-417.
- 윤정일. (2002).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 윤홍근. (2013).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와 시장제도의 변화: 1980 년대 초 “안정화 시책” 에 대한 담론제도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22(1), 163-187.
- 이두휴, 고희일. (2003). 대학서열체계의 공고화와 지역간 불균등발전. *교육사회학연구*, 13, 191-214.

- 이두휴. (2008). 기러기 아빠의 교육적 희망과 갈등 연구. *교육문제연구*, 32, 21-46.
- 이명현, 김진영. (2005). 사교육(과외)의 학습성취도 향상 효과에 관한 연구. 제 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431-445.
- 이병임, 류형선. (2010). 고등학생의 학교 유형과 성별에 따른 유형 비교. *영재와 영재교육*, 10(3), 117-132.
- 이연호. (2009). 제도주의 정치경제적(Institutionalist Political Economy) 발전국가론과 민주주의. *21세기정치학회보*, 19(2), 99-120.
- 이은우. (2006). 중학생 가정의 소득 및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6), 247-274.
- 이정환. (2002). 가족환경, 과외, 성적. *한국사회학*, 36(6), 195-213.
- 이종재, et al. (2010). 사교육: 현상과 대응. 파주: 교육과학사.
- 장상수. (2007). 가족배경과 고등학교 계열 선택. *한국사회학*, 41(2), 118-146.
- 장상수. (2008). 가족배경, 문화자본, 성적. *한국사회학*, 39(2), 1-33.
- 장원호. (2016). 레드퀸 레이스의 한국교육. 푸른길.
- 장하성. (2014). 한국자본주의. 헤이복스.
- 전하람, 김정근. (2006). 고등학생의 교육포부 결정요인 분석-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6, 185-206.
- 정재훈, 김경민. (2014). 교육의 공간 불평등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2), 385-401.
- 조돈문. (1994). 한국사회 계급구조의 역사적 변화, 1960-1990: 계급구조의 양극화의 고찰. *한국사회학*, 28, 25-40.
- 채창균. (2010). 특목고의 학업 성취도 향상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3), 105-124.
- 최장집. (2010). 민주화 이후 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의 보수적 기원 과 위기 (Vol. 2). 후마니타스.
- 통계청. (2015).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7).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전: 통계청.
- 피케티, 토마. (2014). 21세기 자본. 장경덕 외 역. 글항아리
- 하병수. (2005). 자립형 사립고 절대불가 이유서, *교육비평*, (18), 72-81.

- 한국개발연구원. (2001).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한대동, 성병창, & 길입주. (2001). 고등학생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효과와 과외 효과의 비교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1(1), 33-54.
- 한상진. (1988). 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 (Vol. 36). 문학과 지성사.
- 한수경, 박재범, 손형국, & 양정호. (2015).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이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생의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1(1), 197-216.
- 헌법재판소. (2000).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 제청,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 헌법재판소판례집, 12(1), 427-494.
- Ball, S. J. (2009). Privatising Education, Privatising Education Policy, Privatising Educational Research: Network Governance and The ‘Competition State’ . *Journal of Education Policy*, 24(1), 83-99.
- Ball, S. J. (2012). *Politics and Policy Making in Education: Explorations in Sociology*. Routledge.
- Barr, R., & Dreeben, R. (1983). *How Schools Wor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ll, C. (2005). All Choices Created Equal? How Good Parents Select ‘Failing’ Schools. *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Privatization Working Paper*.
- Bowles, S. (2009). *Microeconomics: Behavior, Institutions, and Evolu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raverman, H. (1974). *Labor and monopoly capital: The degradation of work in the twentieth century*. Monthly Review Press.
- Burch, P. (2009). *Hidden Markets: The New Education Privatization*. Routledge.
- Carnoy, M., & Levin, H. (1985). *Schooling and Work in The Democratic State*. Stanford University Press.

- Chang, K. S. (1999). Compressed Modernity and Its Discontents: South Korean Society in Transition. *Economy and Society*, 28(1), 30-55.
- Collins, R. (1971). Functional and Conflict Theories of Educ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6), 1002-1019.
- Coleman, J. S., & Department of Health USA. (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Vol. 2).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Office of Education.
- Coleman, J. S., & Hoffer, T. (1987). *Public and private high schools: The impact of communities*. New York: Basic Books.
- Davis, K., & Moore, W. E. (1945). Some Principles of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0(2), 242-249.
- Deyo, F. C.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 Dunne, A. (2010). *Dividing Lines: Examin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Between-and Within-school Differentiation during Lower Secondary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Florence).
- Evans, P. (1995).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moran, A., & Berends, M. (1987). The Effects of Stratification in Secondary Schools: Synthesis of Survey and Ethnographic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7(4), 415-435.
- Gamoran, A., & Long, D. A. (2007).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A 40 Year Retrospective. In *International Studies in Educational Inequality, Theory and Policy*, Springer Netherlands, 23-47.
- Gamoran, A., & Mare, R. D. (1989). Secondary School Tracking and Educational Inequality: Compensation, Reinforcement, or Neutr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5), 1146-1183.
- Gamoran, A., & Weinstein, M. (1998). Differentiation and Opportunity in Restructured School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06(3),

385-415.

- Goldstein, H. (2004).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Student Attainment: Some Issues Arising from The PISA Study. *Assessment in Education: Principles, Policy & Practice*, 11(3), 319-330.
- Goldthorpe, J. H. (1982). On The Service Class: Its Formation and Future' in A. Giddens and G. Mackenzie (eds.) *Social Class and The Division of Labou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msci, A. (1992). *Selections from the Prison Books*. International Publisher.
- Greenwald, R., Hedges, L. V., & Laine, R. D. (1996). The Effect of School Resources on Student Achievemen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6(3), 361-396.
- Grusky, D. B. (2011). *Social Stratification: Class, Race, and Gender in Sociological Perspective* (Second Edition). Boulder: Westview Press.
- Haggard, S. (1990.) *Pathways from the Periphe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all, P. A., & Soskice, D. (eds.).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 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ucas, S. R. (1999). *Tracking Inequality: Stratification and Mobility in American High Schools*. Sociology of Education Series. Teachers College Press, 1234 Amsterdam Avenue, New York, NY 10027.
- Lucas, S. R. (2001).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 Transitions,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1642-1690.
- Meyer, J. W., & Rowan, B. (1977). Institutional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340-363.
- Micklewright, J., & Schnepf, S. V. (2006). Inequality of learning in

- industrialised countries, in: S.P. Jenkins and J. Micklewright (eds.), *Inequality and Poverty Re-Examine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Oakes, J. (2005). *Keeping Track: How Schools Structure Inequality* (Second Edit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Park, B. J. (1998). *Teacher Empowerment and Its Effects on Teachers' lives and Student Achievement in US High Schools*.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Park, H., & Kim, K. K. (2014). *Korean Education in Changing Economic and Demographic Contexts*. NY: Springer.
- Paterson, L. (2003). The Three Educational Ideologies of the British Labour Party, 1997–2001. *Oxford Review of Education*, 29(2), 165–185.
- Raftery, A. E., & Hout, M. (1993).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xpansion, Reform, and Opportunity in Irish Education, 1921–75. *Sociology of Education*, 66(1), 41–62.
- Rinne, R., & Kivirauma, J. (2005). The Historical Formation of Modern Education and The Junction of The ‘Educational Lower Class’ : Poor Education as The Denominator of Social Position and Status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in Finland. *Paedagogica historica*, 41(1-2), 61–77.
- Rivkin, S. G., Hanushek, E. A., & Kain, J. F. (2005). Teachers, Schools, and Academic Achievement. *Econometrica*, 73(2), 417–458.
- Schütz, G., Ursprung, H. W., & Wößmann, L. (2008). Education Policy and Equality Of opportunity. *Kyklos*, 61(2), 279–308.
- Sen, A. (1995). *Inequality Reexamined*. Harvard University Press.
- Shapiro, H. (1980). Society, ideology and the reform of special education: A study in the limits of educational change. *Educational Theory*, 30(3), 211–223.
- Shin, J. S., & Chang, H. J. (2003). *Restructuring ‘Korea Inc.’: Financial Crisis, Corporate Reform, and Institutional Transition*. Routledge.

- Thurow, L. C. (1972). Education and Economic Equality. *The Public Interest*, (28), 66-81.
- Tumin, M. M. (1953). Some Principles of Stratification: A critical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8(4), 387-394.
- Turner, R. H. (1960). Sponsored and Contest Mobility and The School Syst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6), 855-862.
- Van de Werfhorst, H. G., & Mijs, J. J. (2010). Achievement Inequality and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Educational Systems: A Comparativ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6, 407-428.
- Weiss, L. & Hobson, J. M. (1995). *States and Economic Development: A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Cambridge: Polity Press.
- Weiss, L. (1998). *The Myth of The Powerless State*.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ilson, G. (2003). *Business and Politics: A Comparative Introduction*. NY: Chatham House Publisher.
- Wößmann, L., & Hanushek, E. A. (2005). Does Educational Tracking Affect Performance and Inequality? Differences-in-Differences Evidence across Countries, *CESifo working papers*, 1415.
- Wößmann, L. (2008). Efficiency and equity of European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5(2), 199-230.

부록

부록 1. 사교육의 팽창 및 사교육과 학업성취도 및 대학입학과 관련한 연구물 목록

○ 교육사회학회에서 간행하는 <교육사회학연구>에서 아래에 제시된 7편의 논문이 확인되었다:

양정호. (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 121-145.

김성식, 송혜정. (2009). 학교 불만족과 특목고 진학 경쟁이 사교육 시간과 비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9, 21-46.

김수혜, 김경근. (2010). 세대 간 지위이동 결정요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20, 1-26.

신인철, 김기현. (2010). 학업성취도가 사교육 이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0, 127-150.

이광현. (2012). 특목고·자사고 진학계획이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2, 155-178.

김위정, 김양분. (2013).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계획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3, 85-117.

황성희. (2014). 중소도시 중산층 학부모의 자녀 사교육 지원 문화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4, 277-303.

○ 한국사회정책학회에서 간행하는 <한국사회정책>에서 아래에 제시된 2편의 논문이 확인되었다:

류정순, 이순형. (1998).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의 시계열 분석. 한국사회정책, 5(1), 194-229.

황규성. (2013). 한국 사교육 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정치적 분석. 한국 사회정책, 20(2), 233-260.

○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간행하는 <교육행정학연구>에서 아래에 제시된 5편의 논문이 확인되었다:

김현진. (2007). 가정배경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5, 485-508.

이수정. (2007). 명문대 중심 대입관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계 분석-사교육 원인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25, 455-484.

박균달, 김현진, & 이수정. (2011). 학교불만족과 특목고 진학희망이 중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 277-304.

양정호. (2013).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추이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 421-448.

윤유진, 김현철. (2016). 사교육, 방과후학교, EBS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4, 385-417.

○ 안암교육학회에서 간행하는 <한국교육학연구>에서 아래에 제시된 2편의 논문이 확인되었다:

김경근, 황여정. (2009). 중학생의 사교육 수요 결정요인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15(1), 77-105.

황여정, 김경근. (2012).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정보접근성 영향요인 및 그 계층적 함의.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18(3), 183-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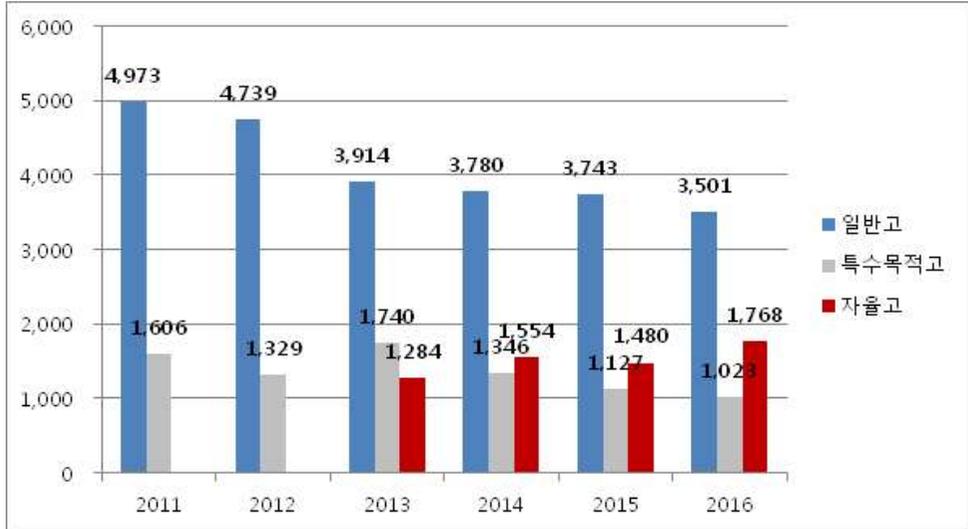
○ 기타 학술지에서 아래에 제시된 4편의 논문이 확인되었다:

김지하, 김정은. (2009).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사용한 사교육 유형별 효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8, 6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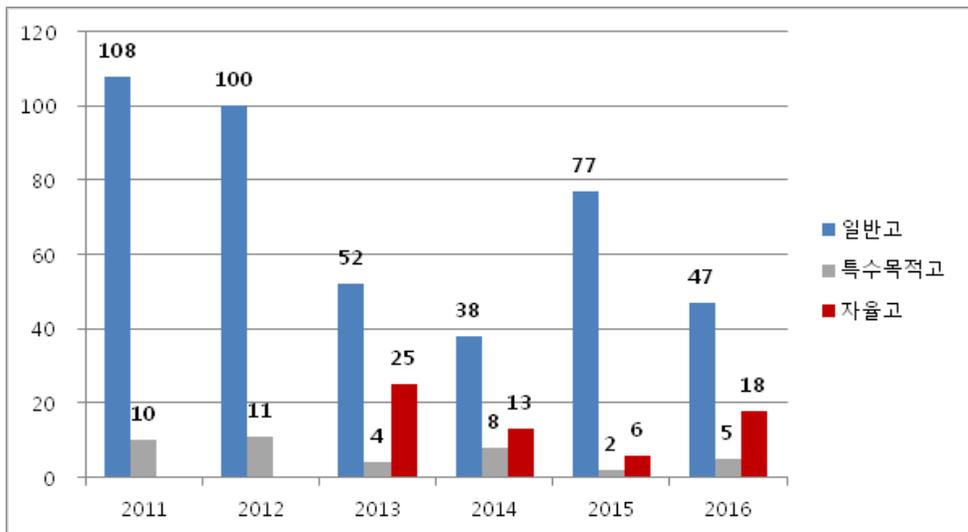
강주홍. (2011). 한국의 사교육 대책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교육정치학연

- 구, 18(2), 7-31.
- 임성택, 어성민. (2013). 학부모의 사교육 동기와 부담감의 관계: 사교육 투자의 매개효과. *교육학연구*, 51(2), 63-87.
- 문상균, 배한나, & 최재성. (2016). 학원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사교육 공급에 관한 분석. *조사연구*, 17(3), 8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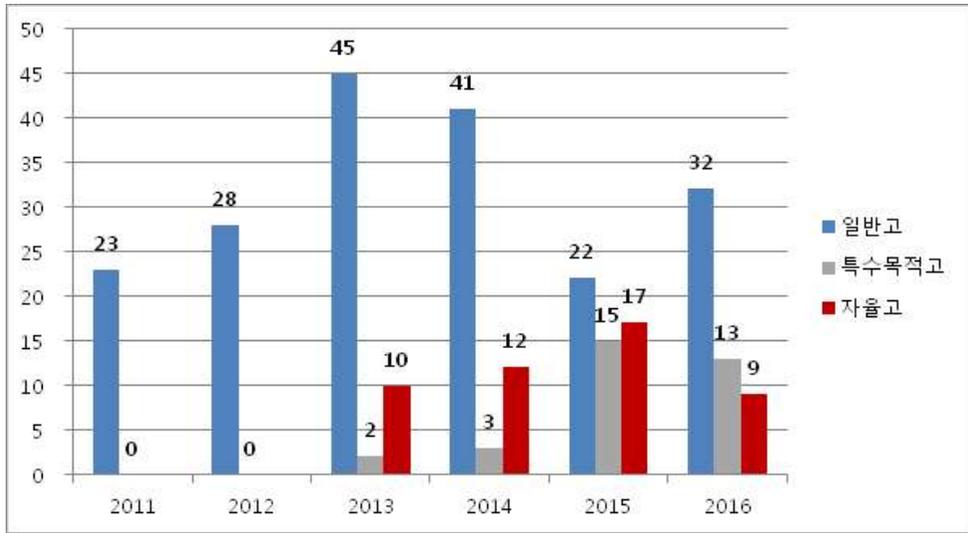
부록 2.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관련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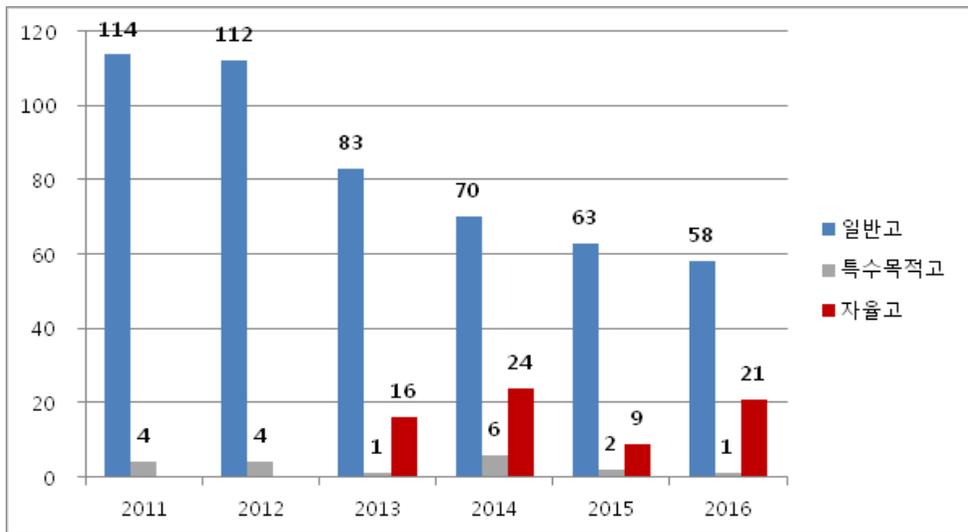
[부록 2-그림 1]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원내 일반전형, 출신고등학교 유형별 총 입학자 수 추이(201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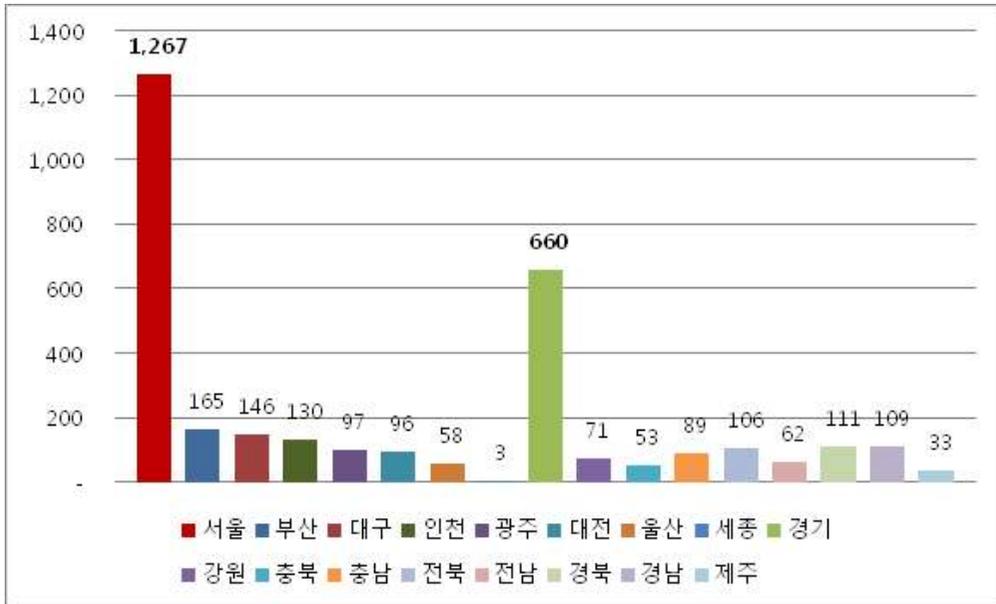
[부록 2-그림 2] 서울대 전체 정원 외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입학자 수 추이(2011-2016)



[부록 2-그림 3] 고려대 전체 정원 외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입학자 수 추이(2011-2016)



[부록 2-그림 4] 연세대 전체 정원 외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입학자 수 추이(2011-2016)



[부록 2-그림 5] 2016학년도 출신지역별 서울대 합격자 현황

학교와 교육불평등 관계: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적 연구

인쇄일 : 2017년 03월 25일

발행일 : 2017년 03월 25일

발행처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인쇄처 : 서전문화사(TEL : 02-2266-7436)